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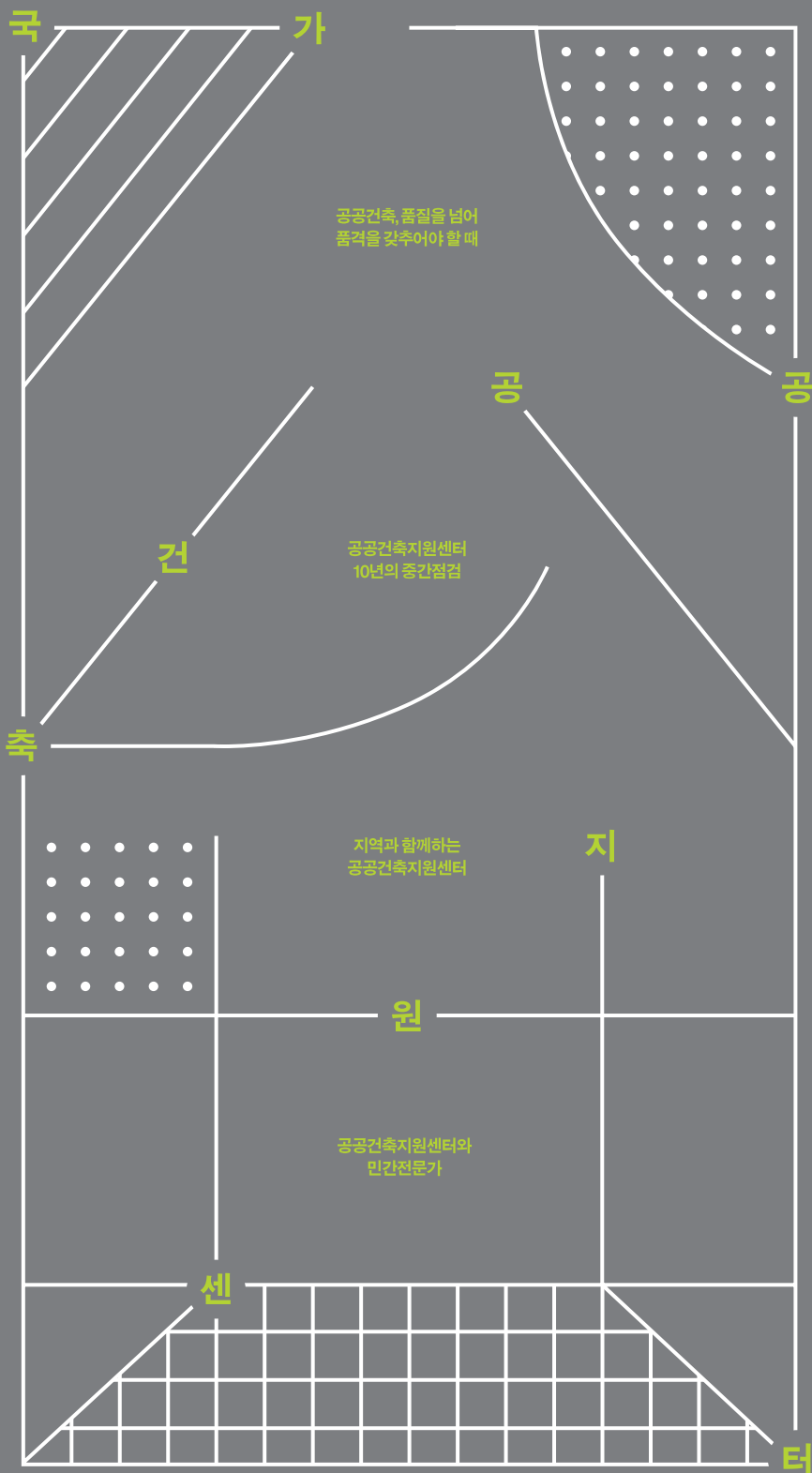
건축과 도시공간

건축공간연구원이 만드는
건축도시정책 전문저널

Vol.54 - Summer 2024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지난 10년의 변화와 성과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사전검토를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 지원 업무를 통해서 다양한 공공건축에 관한 일들을 수행하여 왔다.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10년 동안 무엇을 위해서 달려 왔고, 향후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auri)

건축과 도시공간

Vol.54 - Summer 2024

(a u r i)

건축과 도시공간

Vol.54
Summer 2024



발행 2024년 6월 30일	〈건축과 도시공간〉은 건축·도시 분야 정책현안과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정책전문지입니다.
발행인 이영범	〈건축과 도시공간〉에 수록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건축공간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편집책임 고효진	
정책이슈 기획 엄운진	〈건축과 도시공간〉에 수록된 모든 사진과 그림자료는 저작권자와의 사전 협의를 거쳤습니다.
편집 이미영, 김민자	본 연구원에서는 필자의 저작물이 아닌 도판의 경우 출처 및 저작권자를 찾아 명기했으며,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사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일부 착오가 있거나 빠진 부분은 추후 저작권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고 저작권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발행처 건축공간연구원	〈건축과 도시공간〉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정책이슈 및 건축도시 동향을 포함한 모든 부분에 투고가 가능하며, 심의를 거쳐 원고가 채택된 분들에게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또한 본지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 및 기획에 대한 의견이나 필진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 분들은 메일을 통해 제안하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8층 전화 044.417.9600 팩스 044.417.9608	
www.auri.re.kr information@auri.re.kr	
디자인 (주)디자인인트로 02.2285.0789 www.gointro.com	
ISSN 2288-2332	

표지

공공건축은 도시의 모습, 생활의 편의, 우리의 경험, 그리고 일상의 질에 큰 영향을 주는 공간입니다. 공공건축의 핵심 가치인 공공성을 충실히 지킬 수 있도록 하고, 품질 높은 공공건축이 지어질 수 있도록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가 해나가야 할 일과 앞으로의 과제를 함께 고민해봅니다.

CONTENTS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지난 10년의 변화와 성과		
시론: 공공건축, 품질을 넘어 품격을 갖추어야 할 때	김용미	006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10년의 중간점검	엄운진	010
지역과 함께하는 공공건축지원센터	한승연	017
공공건축지원센터와 민간전문가	윤여갑	025
좌담회: 공공건축의 내일을 위한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역할		034

통계자료실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바뀌어야 할 장소는 어디일까?	김준래	042

건축도시동향			
해외동향	나무 문화의 계승과 창조를 위한 가나자와시	김종범	048
	나무 문화도시 추진계획		
	도시 교통 혼잡과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싱가포르의 Next-Gen ERP 2.0 시스템	옥승철	056
국내동향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통한 품격 있는 공간환경의 구축 - 제2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오민정	060
	시대를 반영한 서울한옥의 진화 - 서울한옥 4.0 재창조 계획	안인향	064
	독일, 건물형 태양광 발전 지원 강화 외	문기덕	070
국내단신	국토교통부, 건축서비스산업 통합정보 플랫폼 '건축HUB' 새 단장 외		076

장소탐방		
문화, 균형, 성장의 공간 - 국립어린이박물관	이동훈	082
독서 이상의 경험을 만드는 장소 - 인제기적의도서관	이상윤	098

auri 소식	
· 건축공간연구원 연구과제 소개	116
· 서울시-건축공간연구원 서울한옥 4.0 붐업 세미나 개최	122
· 2024 한국도시설계학회 춘계학술대회 AURI 세션 개최	123
· 2024년 제1회 녹색건축 미래포럼 개최	123
· 2024 도시커먼즈 포럼 개최	124
· 2024 AURI-광역시자체 건축자산 진흥 정책 심포지엄 개최	125
· 2024 건축공간연구원-(사)한국여성건설인협회 공동세미나 개최	125
· 2024 대한민국 국토대전 개최	126
· 건축공간연구원-전라남도 영암군 MOU 체결	127

1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2014년 6월 23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법정업무를 지원하는 센터로 지정되었다. 그동안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사전검토를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 및 지원업무를 통해서 다양한 공공건축에 관한 일들을 수행하여 왔다.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10년은 무엇을 위해서 달려 왔고, 향후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번 호에서는 그간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가 견인해 온 공공건축의 변화상을 살펴보고, 센터의 성과를 통해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지난 10년의 변화와 성과

시론: 공공건축, 품질을 넘어 품격을 갖추어야 할 때 |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역할도 바뀌어야 할 때가 되었다. 그동안 해왔던 사전검토 업무를 지역센터로 이관하고 지난 10년간 기획단계를 강화하기 위해 쏟았던 에너지를 다시 한번 설계와 시공단계까지 확대하여 공공건축물의 디자인과 품질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해주길 바란다.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10년의 중간점검 | 2024년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역할과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본다. 단순히 업무의 처리를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공공건축을 통해 공공성이라는 가치를 실현한다는 목표와 노력을 품고 있는가 또한 살펴봐야 할 지점이다.

지역과 함께하는 공공건축지원센터 | 공공건축 조성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현황과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국가 센터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공공건축에 집중하고, 지역 센터는 해당 자치단체를 전담하도록 하는 역할 구分的 계기가 마련되었다.

공공건축지원센터와 민간전문가 | 제도가 정착되고 나니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희망하게 된다. 제도의 취지보다 더 훌륭한 성과를 거둔 사례가 적지 않지만, 귀찮고 힘든 또 하나의 행정 절차로 인식하는 경우도 목격하게 된다.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 현장에서 겪게 되는 시급한 과제 몇 가지를 나열해 본다.

시론: 공공건축,
품질을 넘어 품격을
갖추어야 할 때
006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10년의 중간점검
010

지역과 함께하는
공공건축지원센터
017

공공건축지원센터와
민간전문가
025

공공건축, 품질을 넘어 품격을 갖추어야 할 때

김용미
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소장

공공건축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데 필요한 공공의 공간이다. 생활이 단순했던 산업시대에는 관공서와 학교 외에 이용할 만한 공공건축이 별로 없었지만 오늘날 공공건축은 문화, 여가, 휴게, 건강, 교육, 돌봄, 복지 등 우리 일상 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 마을마다 촘촘하게 짜여진 공공건축의 존재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다. 서울을 포함하여 세계의 많은 도시가, 그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15분 도시’의 핵심 내용 중 하나가 ‘공공건축(공공공간)의 네트워크’인 것도 그것이 시민들에게 활기 있는 삶을 보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사회가 진일보할수록 공공건축에 대한 국민들의 눈높이도 고도화되고 있다. 더구나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높아진 위상을 고려한다면 이제 우리 공공건축의 목표도 품질을 넘어 품격을 갖추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때가 아닌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의 공공건축 건립시스템은 충분히 전문적이고 합리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가지 못하는 공공건축 건립 과정

하나의 공공건축물이 건립되는 과정을 살펴보자 그것은 크게 3단계로 나뉘어지는데 첫 단계가 기획과 설계발주, 두 번째는 기본 및 실시 설계, 마지막으로 시공단계를 거친다. 이 중 설계와 시공은 각각 전문 집단이 실행하지만 첫 단계, 기획부터 설계발주까지는 공공기관의 발주 부서에서 전적으로 담당한다. 그것은 해당 공공건축물을 건립하는 목적, 공간 프로그램과 입지를 정하고 사업비를 결정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과업지침서를 만들고, 최적의 발주 방식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그 일은 발주 부서에서 담당 몇몇이 할 수 있을 정

공공건축 조성의 체계적 과정을 정착시키는 데 기여

도로 단순한 것이 아니고 다방면의 전문성이 필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발주부서 담당자가 개인적 능력으로, 혹은 부서 내 관행대로 진행해왔다. 때때로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할 때에는 담당자가 알음알음으로 주변 건축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짬짜미로 설계 계약까지 이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관 주도의 부실한 기획과 짬짜미 관행으로 인하여 우리의 공공건축의 수준은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국가 경쟁력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비전문가가 만든 불명확한 설계공모 지침서와 심사기준 등으로 인한 공모의 불공정성은 이 땅에 좋은 건축물이 지어지기를 열망하는 건축가들에게 늘 불만의 요소로 작용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공공건축 조성사업의 내실화’를 목표로 2014년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설립되었다. 주 업무는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공공건축물 조성사업계획 중 ‘사업 규모와 예산의 적정성’, ‘발주 방식 및 디자인 관리 방안의 효율성’, ‘공공적 가치 제고 방안’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수행하는 것인데, 그것은 공공건축물 조성과정에서 가장 부실했던 초기 기획단계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으로 정착시키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사전검토는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의 사업의 경우, 꼭 받아야 하는 의무 절차이다. 따라서 모든 지자체는 사전검토를 통과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서를 전문가에게 맡겨 잘 준비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는 전에는 거의 하지 않았던 ‘사전기획’이 하나의 독립된 용역으로 정착되고 민간전문가 제도도 활성화되는 계기로 작용했다. 지자체의 사업계획서는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사전검토를 통과한 후에 마지막으로 공공건축심의라는 관문을 하나 더 통과하여야만 한다. 이 과정이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으나 현장에서 체험한 바로 이 과정은 기획 단계의 완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다. 왜냐하면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사전검토 의견을 지자체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허다해서 공공건축심의가 그 문제를 한번 더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설립된 후 공공건축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 주요 성과를 꼽는다면 우선적으로 사전검토로 인한 과업지침서의 불확실성 해소를 꼽을 수 있다. 과업지침서의 문제는 대부분 과도한 업무범위, 과

업에 비하여 적은 설계비, 사업규모에 비해 부족한 공사비, 불명확한 공간 프로그램, 설계자에게 과도한 책임전가 등에 집중되는데 전에는 불공정하지만 고쳐지지 않았던 수많은 불합리한 조건들이 합리적 수준으로 고쳐짐으로써 설계공모에 대한 건축가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결과로 귀결되었다.

그 다음으로 다양한 공모방식의 도입과 그것에 따른 신뢰도 향상을 꼽을 수 있다. 공공건축지원센터가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적합한 공모방식을 자문하고 있기 때문에 공모에 대한 신뢰도도 많이 향상되었다. 그 신뢰는 설계공모단계까지 연장이 되어 제안서든 현상이든 공모전이 이전에 비해 훨씬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이 공모 전반에 대하여 자문을 하고 있고, 기술위원이 있으며 마지막에 심사위원이 있다. 이와 같이 여러 단계에서 그 전문성을 확보하여 발주처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고 있는데 심사과정도 공개한 덕분에 공모에 대한 신뢰도도 많이 높아졌고 그만큼 제출작도 많아졌다.

공공건축 조성, 현장에서의 숙제

공공건축지원센터와 공공건축심의 제도는 이처럼 공공건축물 조성과정의 첫 단계를 내실있게 완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는 여전히 숙제가 남아있다. 이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공고되는 공모의 과업지침을 보면 터무니없는 내용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것은 발주처가 주먹구구식으로 해왔던 관행이 여전히 가능하다는 뜻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있을까? 그것은 민간전문가 제도의 확대밖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한다. 민간전문가는 공공기관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발주처가 무리한 사업계획을 세울 경우에 그것에 대한 1차 자문을 해 줄 수가 있기 때문이다. 기획단계에서 민간전문가와 공공건축지원센터 그리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세 주체가 상호 보완하면서 역할을 할 때 사업계획서는 확실히 완성도가 높아진다. 실제로 민간전문가가 없는 지자체보다는 그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지자체의 사업계획서가 훨씬 내용이 탄탄하다는 것은 여러 지자체 사례를 통해 경험하고 있다. 이것은 민간전문가 제도가 공공건축물의 조성과정을 효율화하고 디자인의 품격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서 그 제도를 여러 지자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우리에게 남은 또 다른 숙제는 기획의 다음 단계인 설계와 시공단계의 문제이다. 탄탄한 기획과 최적의 공모방식을 통하여 좋은 작품이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발주처에서 그것의 가치를 알아봐 주지 않는다면 그 건물은 좋은 건물로 완성되기가 어렵다. 설계단계에 발주처의 무리한 간섭과 시공단계에서 발주처의 자의적인 설계변경은 우리 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설혹 설계단계에서 도면의 품질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시공과정에서 설계자의 의도가 왜곡되거나 품질확보가 안 되는 상황은 얼마든지 일어난다. 그것은 건축상 후보에 오른 건축 작품들 중 민간건축물과 공공건축물을 비교해 보면 명확히 보인다. 민간과 공공의 시공 수준의 차이는 너무나 확연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시공현장에서 설계자는 배제되어 있고 발주처는 비전문가이며 감리는 품질보다는 안전과 기술적인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품질 확보를 위해 일관되게 자문해줄 주체가 없다. 민간전문가와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업무범위에 설계와 시공 심지어 유지관리단계까지 자문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어느 것도 작동하지 않는다.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사업계획서 사전검토와 자문으로도 일이 벅차기 때문에 센터에게 그 이상을 기대하기는 무리이다. 기획단계에 이어 설계, 시공단계까지 공공건축물의 품질 확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역마다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보다 실효성있는 방법일 것이다. 물론 현재에도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있는 지자체가 일부 있긴 하지만 그 역할은 여전히 기획단계에 머물러 있고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가 해왔던 사전검토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 광역단체뿐 아니라 기초단체에도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설계와 시공단계까지 그의 역할을 확대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공공건축물 디자인과 품질 관리체계 구축에 기대

공공건축의 품질은 곧 국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결정적 요소이다. 게다가 잘 만들어진 건축물 하나는 지역민의 자긍심과 국가의 위상을 높여주고 경제적 효과도 높아진다. 이제는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역할도 바뀌어야 할 때가 되었다. 그동안 해왔던 사전검토 업무를 지역 센터로 이관하고 지난 10년간 기획단계를 강화하기 위해 쏟았던 에너지를 다시 한번 설계와 시공단계까지 확대하여 공공건축물의 디자인과 품질 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집중해주길 바란다.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10년의 중간점검

엄운진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

들어가며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공공건축지원센터)의 10년을 돌아보는 것의 목적은 향후 1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이고, 공공건축과 관련한 일들을 중간점검하는 차원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 처음의 마음가짐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그것의 실행을 위해서 건축공간연구원, 국토교통부, 국회 그리고 건축 관계자 등 공동의 노력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2007년 공공건축 설계포럼, 2014년 공공건축지원센터 개소

공공건축지원센터가 법에서 처음 언급된 것은 2013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다. 이 법을 근거로 국토교통부는 2014년 6월 23일 당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하고 공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854호)하였다. 같은 해 11월 17일과 18일에는 공공건축지원센터 개소식 및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세미나에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대한건축사협회를 비롯하여 국토교통부, 조달청과 미국 PBS(Public Building Service, 미연방 조달청), 일본 국토교통성 관청영선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공공건축 품격 향상과 효율화를 위한 공공건축 지원체계 개선’을 주제로 향후 우리나라의 공공건축 방향을 논의하였다.



2007년 제1회 공공건축 설계포럼 포스터

이에 앞서서 2007년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개소와 함께 공공건축의 중요성 및 개선을 위한 노력은 시작되었다. 바로 ‘공공건축 설계포럼’*으로, 총 여섯 차례 진행되었다. 처음 포럼(2007.9.4.)과 마지막 포럼(2008.11.14.)의 제목은 각각 ‘우리의 공공건축, 무엇이 문제인가?’와 ‘공공건축 정책과 운영, 통합화에 대한 제언’이었다. 공공건축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총론을 시작으로 하여 공공건축의 용도별로 ‘교육시설’, ‘공공청사’, ‘육아시설’, ‘전시시설’의 조성체계와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공공건축 정책과 운영, 통합화를 위한 종합의 시간을 가졌다. 포럼이라는 명칭처럼 학계, 현장, 시민단체 등이 우리의 삶의 주변을 만들어 내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과 만나 공공건축의 미래 방향을 논의하였다.

포럼에 앞서 2007년 8월 7일 건설기술·건축문화 선진화위원회 회의실에서 김진애 위원장, 운영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초대 소장을 비롯하여 김영섭 당시 성균관대학교 석좌교수, 조명래 단국대학교 교수, 조성룡 성균관대학교 석좌교수, 정기용 기용건축 대표 4명이 참석하여 포럼의 진행 방식과 주제들을 포괄적으로 논의하였고 구체화하였다. 첫 포럼은 김영섭 교수의 공공건축의 방향성에 대한 기초발제를 시작으로 조명래 교수가 제도적인 문제를, 조성룡 교수가 시민의 일상에서 공공건축의 효과, 정기용 대표가 무주에서 진행된 다양한 실제 사례를 발표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시작으로 공공건축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주요 내용은 국가 및 지자체·공공기관이 조성하는 건축에서부터 건축·도시의 정책을 실행하겠다는 것이었고, 대표적인 것이 「건축기본법」에서 강조되었던 ‘건축의 공공성’에 대한 것이었다. 또한 부처별로 나뉘어 있던 조성체계를 하나로 통합하고 수요자인 지역 중심으로 변화하기 위한 방향을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논의하였다. 동시에 2007년 「건축기본법」을 시작으로 한 건축정책기본계획, 공공 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등이 진행되었다.

* 당시 행사의 자료집은 건축공간연구원 홈페이지 세미나/포럼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다.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역할 등이 검토되어 제시된 대표적인 연구는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2011~2012)이다. 2년간 건축 도시공간연구소와 한국행정연구원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협동연구로 진행되었다. 2007년 이후 다양하게 논의되어 오던 공공건축 조성 과정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조직으로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제시되었다. 2009년 ‘공공건축물의 효율적 조성을 위한 운영방안 연구’를 통해서도 해외 공공건축물 조성 및 운영 사례를 조사하고, 우리나라 공공건축에 대한 문제점 진단을 통한 단계별 개선방안이 제시되었다. 제시된 내용들은 ▲현황 데이터베이스 구축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전협의회 개최 ▲민간전문가 활용 ▲사업 특성별 조성 과정에 대한 개선 ▲공공건축 총괄조직 신설 등이었다. 같은 해 ‘공공건축 설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디자인 행정 지원 방안’ 연구에서는 디자인 행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하였다. 2010년에는 공공청사 유형을 대상으로 건축디자인 기준, 디자인 품질 관리를 위한 세부지표 및 실행방안이 검토되기도 하였다.

2011년 연구에서 공공건축지원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해외 기관 사례를 검토한 결과 ▲공공건축가 육성 및 파견을 통한 기획업무 지원 ▲공공건축 디자인 프로세스 관리 및 설계경기 대행 ▲공공건축 사후평가 및 DB 구축 ▲매뉴얼 개발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현재의 사전검토 제도에 참고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일본 관청영선부의 ‘디자인 총괄관리 체계’도 언급되었다. 일본의 경우 각 부처 및 지역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관청영선부에서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후에 예산 승인 절차를 통해서 기획서가 작성되는 기획단계를 가지고 있다(서수정 외, 2012, pp.50-55).

2011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제정방안 연구’에서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의 필요성, 기본방향, 구조 및 주요 참고 내용이 제시되었다. 제23조 ‘공공건축의 품격 제고’에서는 1항에서 공공기관의 공공건축 품격 제고를 위한 노력이 제시되었고, 2항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제출하고 타당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도록 체계를 제시하였다. 4항에서는 공공기관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도록 제시되었다. 제24조에서는 공

공공건축지원센터 10년, 성과

공건축 심의를 지원하고 보조하기 위한 조직으로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역할은 ‘발주지원’ ‘기획 및 관리지원’ ‘디자인 관리’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지원’ ‘유지·관리 지원’ ‘관계자에 대한 교육’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이었다. 이후로 이 조항은 자문에 대한 응답으로 변경되었다. 2항에서 사업계획서에 반영되어야 할 주요 항목은 크게 네 가지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발주 방식’, ‘디자인 관리방안’,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공공적 가치 및 품격 제고를 위한 사항’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현행 사전검토 제도에서도 검토되고 있는 주요 항목들이다. 3항은 심사 과정에서 신설된 것으로, 앞선 사전검토가 당초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업무로 변경되면서 관련된 업무들이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지원업무에서 자문으로 변경되었다.

건축공간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연구보고서 중 ‘공공건축’이라는 단어가 제목·내용·키워드에 들어간 보고서는 총 58건으로, 전체 보고서 489건의 12% 수준이다. 그러나 이는 수탁과제 등을 제외한 것으로, 이를 포함한다면 공공건축을 다룬 연구는 더욱 많다.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수행한 사전검토 건수는 2022년까지 총 4,878건이다(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2023, p.41). 다만 이러한 양적 실적과 함께 질적 실적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지표로 설정되지 못하여서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사전검토 시행을 통한 경제적인 효과 등을 계량화된 금액이나 가치로 환원하기보다는 건축기획의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시행해 왔기 때문에 건축기획의 내실화를 통한 건축서비스산업 전반의 발전적 측면에서 추후 검토될 필요가 있다.

공공건축지원센터의 10년은 크게 3개 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 국회에 처음 제출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2011.10.7.)에서도 동일하게 제시되었다. 법안 검토 과정에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을 고려하여서 사전검토를 자문 수준으로 완화하고, 검토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 활용 및 객관적인 검토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시되었다(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H1S2P0C9K1R3O1L0J0U4A4Z4Z0N5K1, 검색일: 2024.5.23.).

있다. 1기(2014~2017)는 개소 이후 제도적인 정착의 시기이다. 이때는 좋은 공공건축에 대한 사례집과 절차에 대한 업무 매뉴얼 등을 제작해 배포하고, <숫자로 보는 공공건축> 등을 통해서 공공건축 현황 정보 등을 제공한 바 있다. 당시 사전검토는 2014년에 54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250건 전후로 진행되었다.

2기(2018~2019)는 건축기획, 공공건축심의위원회가 제도화되고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근거가 마련된 때이다. 사전검토를 통해서 공공건축의 품질관리가 이루어졌던 것에서 사전검토 전 단계인 ‘건축기획’, 이후 단계인 ‘공공건축심의’ 제도를 통해서 발주자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2019년 4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서 국토교통부는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이후로 범부처가 참여하는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범정부협의체’를 통해서 지역개발 공공건축제도와 신도시 관리 분과별 논의를 진행하였고, 도시재생·어촌뉴딜300 등을 비롯한 5개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였다. 이를 통해서 ‘(가칭)공공건축특별법’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 시기에 사전검토 대상이 기존의 설계비 2억 이상 공공건축물에서 1억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우리의 일상 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소규모 공공건축을 내실 있게 조성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가능하였던 것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역할 덕분이었다. 제5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2018년 5월 발족하여 관련 정책들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제도 개선이 실행될 수 있었다. 민간전문가 제도도 이때 적극적으로 도입되면서 지역별로 민간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건축정책이 지자체 단위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3기(2020~현재)는 사전검토 업무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던 시점이다. 2019년 469건에서 2020년 1,195건, 2021년 1,301건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사전검토 접수 및 의견서 작성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었고, 이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을 최소화하였다. 또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설립되기 시작하면서 관련 업무가 분산되었다. 2021년부터는 이용자 관점에서 공공건축 연구를 3개년 과제로 진행해 국민체육센터,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사업에서 공공건축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공공건축 시스템이 마련되고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와 데이터 연계가 가능해지면서 공공건축 현황에 대한 정보들이 축적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었다.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중요하게 강조하였던 것은 ‘공공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제고’하는 것이고, 건축서비스산업 전반의 과정에서 중요한 내용은 ‘건축기획의 내실화’이다. 구체적인 실행 이전에 공공건축지원센터의 기획단계에서 제시되었던 가치는 무엇이었는가? 또한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실행되어 현재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을까? 그리고 기획과 현실화한 모습에 간극이 있다면 다시 이상적으로 제시되었던 기획단계로 가야 할지 또는 현재의 관점에서 수정을 진행해야 할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가며, 2024년

2022년부터 매년 공공건축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2022년 포럼의 주제는 ‘모두 함께 만드는 공공건축’이었다.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최근 3년간 좋은 공공건축을 위해서 강조한 것은 ‘이용자 관점의 공공건축 조성’이었다. 건축물을 최종적으로 이용하는 이용자들을 고려한 공공건축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공공건축의 조성에는 다양한 사업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존재한다. 더 나아가서 결국 ‘좋은’ 공공건축이라는 것은 제도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을 넘어서 기획, 설계, 시공자가 노력한 것을 이용자가 공감할 때 완성된다. 공공건축에 관한 사회적 목표와 방향은 많은 논의를 통해서 법령 등에 반영되어야 하며, 이러한 과정은 우리 생활 주변에 있는 공공건축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될 것이다.

2024년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역할과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본다. 양적인 성과에만 매몰된 것은 아닌가? 공공건축 기획 내실화를 통해 공공건축을 조성하는 사람들과 이용하는 사람들이 행복해졌는가? 행정 절차가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센터를 찾고 있는가 혹은 센터가 공공건축 조성 과정에 실제로 도움이 되고 있을까? 단순히 업무의 처리를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공공건축을 통해 공공성이라는 가치를 실현한다는 목표와 노력을 담고 있는가 또



2022년 공공건축 포럼

한승연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원

지역과 함께하는 공공건축지원센터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와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2018년 12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은 공공건축의 품격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에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 그중 하나가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명시한 점이다. 이전까지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공건축을 담당해 왔으나, 공공건축 조성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현황과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국가센터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공공건축에 집중하고, 지역 센터는 해당 자치단체를 전담하도록 하는 역할 구분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제도가 시행되자 지역 센터 설립에 적극적인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인가가 시작되면서 2024년 5월 기준 총 11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지정되었다. 2020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충청남도·부산시·경기도·경상남도·제주도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가 인가되었고(인가순), 해당 시·도를 비롯한 기초자치단체의 공공건축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 경기도, 대구시, 충청남도, 경상북도(인가순)는 교육청 센터를 별도로 운영하여 교육(지원)청의 발주사업을 전담하고 있다.

지역 센터가 설치됨에 따라 국가 센터의 자치단체(광역·기초·교육청) 지원 비율은 2020년 79.1%에서 2022년 57.4%로 감소하게 되었다.**

*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자치단체의 공공건축 사업은 센터 설치 이전까지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다.

**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주요 업무인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수행 건수를 기준으로 작성하였다(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2023, p44).

한 살펴봐야 할 지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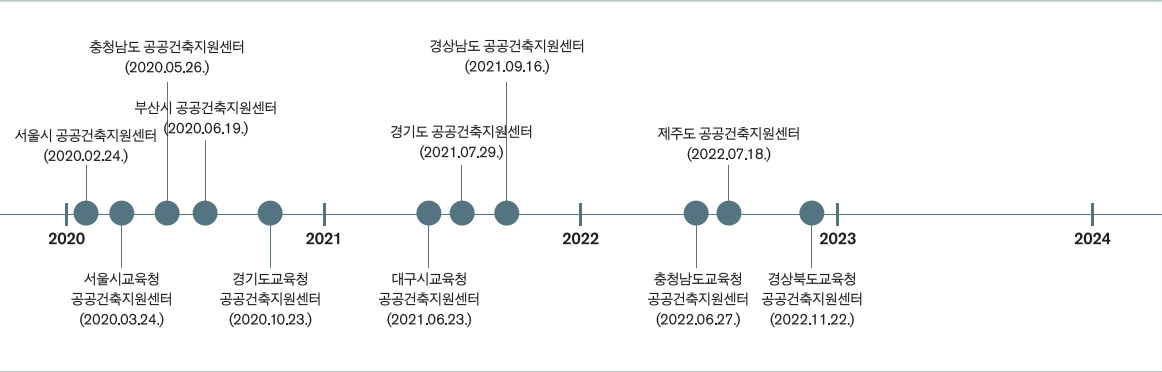
공공건축지원센터는 명칭 때문인지 공공건축의 모든 것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보일 수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다. 즉 ‘건축물의 품격 제고를 통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해 설계공모, 설계의도 구현, 공공건축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등을 수행한다.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역할과 목표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제시된 업무를 수정하거나, 장기적으로는 공공건축특별법에 반영하여야 한다.

과거 공공건축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업무는 현재의 업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법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은 ‘공공건축사업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목표가 제시된 것은 2020년으로 벌써 4년의 시간이 흘렀다. 2024년 5월 30일 제22대 국회가 시작되었다. 그동안의 공공건축 정책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목표 설정을 통한 공공건축특별법 제정을 바라본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 10년 뒤 공공건축지원센터 20년의 중간점검을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1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2023). 2022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연차보고서.
- 2 서수정, 김영현, 조시은, 이연화, 류현숙, 정지범. (2012). 국가 공공건축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II).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3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H1S2P0C9K1R3O1L0J0U4A4Z4Z0N5K1(검색일: 2024.5.23.)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시기



출처: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내부자료를 토대로 작성.

지역 센터 설립이 보다 확대된다면 이러한 역할 구분은 더욱 명확해질 것이다. 사실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와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가 담당하는 업무의 종류는 상이하지 않으나, 운영 방식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 국가 센터는 공공건축 조성 과정 전반에 대한 자문에 응답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개별 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은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로 한정된다. 반면 지역 센터는 관할 지역에서 모든 절차가 진행되므로 기획단계 초기부터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지원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일상생활에서 지역 여건과 실정이 반영된 좋은 공공건축을 마주하기 위해서는 지역 센터 설립이 필수불가결(必須不可缺)한 것이다.

국가 및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공공건축 기획단계 수행주체 차이

	공공건축 기획단계			
	건축기획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설계공모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발주기관	공공건축지원센터	발주기관	발주기관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시·도 발주부서	시·도 공공건축지원센터	시·도 담당부서 (지역 공공건축 지원센터 설치부서)	시·도 발주부서
	시·군·구 발주부서		시·군·구 담당부서	시·군·구 발주부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역할

공공건축 기획단계 업무 지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르면 공공건축 기획단계 업무는 건축기획,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 설계공모 순으로 진행된다. 현재 법·제도에서는 건축기획 업무 대행과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업무까지를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과 설계공모는 업무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다만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과 설계공모는 공공건축 사업 추진에 있어 의무 절차로 대부분 센터가 설치된 담당부서에서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역할은 법 제24조의 2(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등)에 따른 법정업무와 지역 맞춤형 지원업무로 구분할 수 있다. 법정업무는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이하 사전검토), 자문에 대한 응답, 공공기관 관계자에 대한 교육,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구성된다.

다음의 표는 국가와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가 매달 공유하는 운영현황 자료의 일부이다. 사전검토와 자문에 대한 응답은 지역 센터의 기본 업무로 모든 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다. 공공기관 관계자에 대한 교육은 법정업무이나 일부 센터는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모든 센터가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다. 센터마다 조직과 인력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맞추어 운영되고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2024.4.30. 기준)

지역 센터 (인가순)		법정업무			지원업무			기타
		사전검토	자문응답	관계자교육	건축기획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계공모	
광역시	서울시	○	○	×	○	○	○	홍보
	충청남도	○	○	○	×	×	-	연구
	부산시	○	○	○	○	○	-	-
	경기도	○	○	○	○	×	-	-
	경상남도	○	○	○	×	○	-	-
	제주도	○	○	×	×	○	○	-
교육청	서울시교육청	○	○	×	○	○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운영	-
	경기도교육청	○	○	○	○	○	-	-
	대구시교육청	○	○	○	×	○	-	-
	충청남도교육청	○	○	×	×	○	-	-
	경상북도교육청	○	○	×	×	○	-	-

출처: 2024년 4월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월간 운영현황 내부자료를 토대로 작성.

있다. 센터에 따라서 법정업무뿐만 아니라 건축기획 업무 대행, 설계공모 운영 대행, 공공건축 관련 연구 등 지역 맞춤형 지원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월별 업무수행 현황을 기준으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연간 사전검토 신청 건수는 지역에 따라 최대 110건에 달하며, 6개 광역자치단체 센터는 연간 평균 61건을 처리하였다(2023년 기준). 연도별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처음 설치된 2020년은 5개 센터 합계 151건, 2021년은 8개 센터 합계 361건, 2022년은 10개* 센터 합계 379건의 사전검토를 수행하였다. 2023년은 11개 센터 합계 512건으로, 2023년 전체 사전검토 수행 건수의 38.8%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사전검토 세부 절차는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다. 사전검토 수행 과정에서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지역·인력 등의 한계로 일부 사업에 한해 현장 방문과 기관 면담을 수행하고 있으나, 경기도·경기도교육청 등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는 현장 방문을 필수로 포함하는 등 사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사전검토 의견서가 제시될 수 있도록 강화된 절차로 운영하고 있다.

공공기관 관계자에 대한 교육은 건축기획, 사전검토, 설계공모 등 공공건축 기획단계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 공공건축지원센터는 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지만 <건축기획의 기술>, <건축기획 자료집>, <설계공모의 기술>, <설계공모 자료집> 등 공무원과 실무자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를 발간함으로써 많은 사람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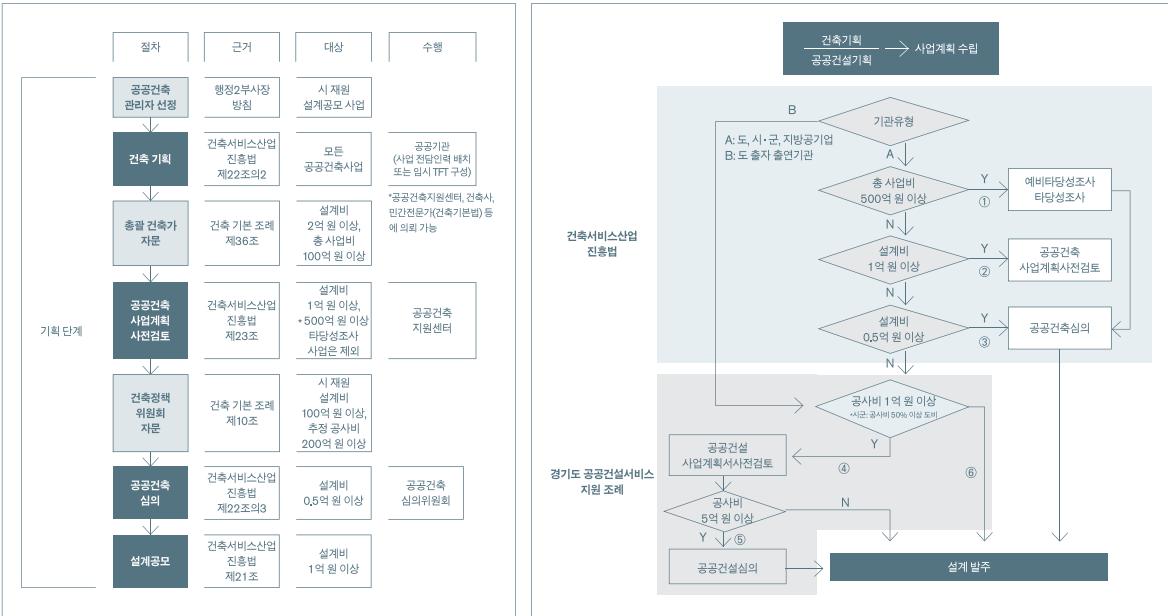
지역 맞춤형 지원업무로는 공공건축 기획단계 업무 관련 발간물 제작 및 홍보, 건축기획 업무대행 등이 있다. 앞서 서울시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사례처럼 많은 센터가 건축기획, 사전검토, 설계공모 등 기획단계 업무 절차와 방법에 대한 교육 기능의 발간물을 제작하고 있다.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발간하는 자료는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와 달리 시·도에서 조례나 지침 등으로 운영되는 절차를 포함하고 있어, 해당 시·도의 실무자가 발간물을 참고하여 공공건축 조성 사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더불어 서울시와 제주도 등의 경우 공공건축 조성과정의 의무

* 경북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는 2022년 인가되었으나, 실질적인 운영은 2023년부터 시작하였다.
** 2024년 3월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월간 운영현황 내부자료(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2023, p.40)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기획단계 안내 등의 홍보업무를 병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기획 업무는 법 제22조의 2(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에 따라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수행할 수 있다. 서울시, 부산시,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등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는 공모를 통해 건축기획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설계공모 운영 등은 센터의 법정업무가 아니므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설치된 부서에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로 부서의 인력 일부가 센터의 전담인력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결국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법정업무와 공공건축심의 운영, 설계공모 운영 등 기획단계 업무를 병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센터는 사전검토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접수 건수가 많아 담당자의 업무 과중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기획단계의 절차 외에도 제주도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센터 전담인력이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업무도 맡고 있어 공공건축 사업 추진 시 기획단계의 업무지원의 일환으로 공공건축가를 연결해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역의 공공건축 기획단계 업무 절차 예시



출처: (좌)서울시 공공건축지원센터(2023, p.9), (우)경기도 공공건축설지원센터(경기도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2023, p.15)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와의 협력

개별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는 법정업무와 기획단계의 각종 업무를 지원하며, 국가 센터와 협력도 이어 나가고 있다. 가장 먼저 설립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이제 운영 5년 차에 접어들었다. 센터마다 운영 노하우가 축적되고 있고, 공공건축 조성 관련 가이드라인이나 사례집과 연구보고서 등 다양한 형태의 참고자료를 자체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이제는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가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운영을 지원하는 관계에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관계로 성장하고 있다.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류하고, 정기회의에 참석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등 상생 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 국가와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가 협력하고 있는 주요 업무 세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공공건축지원센터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국가-지역 협의체 회의다. 협의체는 2020년부터 매년 1~2회 국가 센터 주도로 국토교통부와 국가 및 지역 센터가 참여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공통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이다. 2020년 국가-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협력체계 구축 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사전검토 업무수행 효율화(2021년), 사전검토 통합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방안(2022년),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업무수행 현안(2023년) 등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올해는 하반기에 협의체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두 번째 협력사업은 사전검토 데이터베이스 통합 구축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데이터베이스는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구축되고 있다. 2020년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설치된 이후, 국가와 지역의 사전검토 데이터를 중합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향이 국가-지역 워크숍의 첫 번째 협력업무로 논의되었다. 이후 협의체를 통해 사전검토 데이터 통합 실현 방안을 모색하였고, 현재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사전검토 DB 시스템에 지역의 사전검토 결과를 등록하는 방식으로 데이터가 누적되고 있다. 다만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마다 데이터 항목(신청서 및 의견서 항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현재의 데이터 구축 방식은 단기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데이터베이스 통합 구축을 위한 중장기 방안 도출이 필요하다.

국가-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협력 추진 사례



국가-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협의체 세미나(2022.10.14.)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 성과 및 발전 방향 세미나(2022.6.9.)

세 번째는 센터 미설립 자치단체에 대한 설립 지원이다.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센터 미설립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열어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립 과정 및 운영 성과를 소개하였다. 부산시·경기도·충청남도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운영 사례를 소개하였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와 미설립 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세미나는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협력이 있어 추진될 수 있었다.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이러한 행사에 참여할 뿐 아니라 설립 관련 자문에도 상시 대응하고 있다.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 방향

공공건축 기획단계 업무지원 강화를 위한 노력

모든 자치단체는 공공건축 조성을 위한 절차로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건축기획 수행, 사전검토 신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설계공모 운영 등을 하여야 한다. 시·도에서는 사전검토를 제외한 건축기획, 공공건축심의·설계공모 운영 등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관련 업무를 이미 수행하고 있다.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지역의 통합적인 공공건축 조성이 가능하도록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미설립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센터 설립 지원 컨설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시·도에서 운영하는 공공건축 사업추진 절차를 정립하고, 기획단계 업무수행을 위한 관계자 교육, 사전검토 업무 수행 등 조직 내 수요에 대응하고, 외부적으로 지역의 여건과 지역사회의 수요를 파악하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공간계획 수립방향을 제시하는 등 공공건축 품질 향상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건축지원센터와 민간전문가

윤여갑
(주)지역도시건축사사무소
리플래폼 소장,
당진시 총괄건축가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지역 공공건축의 품격 향상과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 등을 목적으로 설치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공공건축지원센터의 고유 업무와 이미 소관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설계공모 운영 등 공공건축 기획단계 일련의 과정을 센터 업무로 포괄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협력사업 추진 방향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를 네트워크 구축 단계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를 협력형 지원단계로 중장기 로드맵을 설정하여, 2022년까지 국가와 지역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2023년부터는 협력형 지원단계에 돌입하여 국가와 지역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작년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전기획 및 적정성 검토가 본격 시행되면서 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와 협력방안을 모색하였고, 올해는 앞서 소개한 세 가지 주요 협력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와 협동사업 추진을 논의 중이다. 예를 들어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는 건축기획, 사전검토 등의 업무 과정에서 또는 지역 건축문화제 기획 과정에서 지역의 우수 공공건축 사례를 발굴하고 있으나, 센터 간 우수 사례가 원활히 공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수 공공건축 조성 사례 통합관리 및 답사 프로그램 기획 등 국가-지역 협업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에는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장기 협력과제를 기획해 볼 수 있다.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와 달리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는 관계부서에서 공공건축 사업을 직접 발주하여 기획부터 준공까지 사업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국가 및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지역의 공공건축 조성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토대로 기획단계의 업무효과를 검토하며 이후에 조성될 공공건축 기획단계의 내실화 방향 등을 고민할 수 있는 든든한 협력관계가 형성되길 바란다.

참고문헌

- 1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2023). 2022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연차보고서. 건축공간연구원.
- 2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경기도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2023). 경기도 공공건설·건축 기획업무 작성 가이드북. 경기주택도시공사.
- 3 서울시 공공건축지원센터. (2023). 건축기획의 기술(2023년 개정판). 서울특별시.

2014년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내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국토교통부로부터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받은 후 10년의 시간이 흘렀다. 좋은 공공건축물의 건립을 위한 갈증이 많았던 그때, 놀라운 제도적 변화가 있었다.

10년의 시간이 흐르는 사이에 다수의 사전검토에 참여하였고, 소규모 건축물 민간전문가 지원사업으로 당진시와 인연이 되어 5년 동안 공공건축가로 활동하였다, 1기 총괄계획가의 뒤를 이어 올해부터 2기 당진시 총괄건축가로 활동하고 있다. 10년 동안 공공건축지원센터의 다양한 업무에 외부 전문가로 참여하고, 지자체의 사업에서는 공공건축의 공공적인 가치 향상과 제도의 정착을 위한 크고 작은 업무에 참여하고 있다.

1기 총괄계획가가 활동한 5년의 자료를 정리하고, 설계공모 예정인 사업의 공모 방식을 상의하는 과정에서, 1기 총괄과 2기 총괄의 의견이 일치되는 팬츠는 공공건축물을 선정하고, 그 이유에 대해 간략하게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한 시스템과 인적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지역의 상황에서 결국은 책임 있는 건축가(사)의 희생과 관계자의 의지가 좋은 공공건축물을 만들어 왔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다양한 경험과 건축물에 대한 책임감을 겸비한 인적자원이 지역에는 매우 부족하다. 그런 만큼 지역에서 좋은 공공건축물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민간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2021년 2022년 국토교통부 지원사업으로 당진동과 신평읍 공간환경전략계획이 수립되고, 세 번째 공간환경전략계획은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시 자체 예산을 투입해 ‘송악읍 공간환경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공공건축가로 활동하는 동안에는 공간환경전략계획의 활용 방안과 취지에 대하여 큰 관심이 없었다. 현장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듣고, 시정 최고 결정권자의 의지를 파악하고, 흠어져서 추진되고 있는 많은 사업이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제각각 진행되고 있음을 알게 되면서, 공간환경전략계획의 수립과 민간전문가의 역할 및 사회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공건축지원센터와 민간전문가의 다음 10년의 역할에 대하여 고심하게 되었다.

이에 건축정책기본계획,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지역건축기본계획 등에 건축계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정책적으로 잘 담겨 있기는 하지만, 2020년 기준 건축설계 계약 2만 2,125건에 달하는 공공건축물(이경재, 방재성, 2021, p.15)의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관계자들에게 시급한 선결과제를 간략하게 정리해 제시한다.

사전검토 자문, 설계공모 심사·심의 등 일회성 참여를 넘어선 지속가능한 참여

대부분의 공공건축물은 기획에서 시작해 준공까지 정부기관·공공기관의 인사이동 보직기간 2년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등)에 따른 사전검토, 제21조(설계공모의 활성화 등)에 따른 설계공모, 「건축법」 제23조(건축물의 설계)에 따른 설계업무, 「건축법」 제24조(건축시공)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축시공과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여 통칭되는 공사감리업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설계의도의 구현)에 따른 설계의도 구현,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따른 사용승인이 완료되는 기간은 사업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공사비 100억 내외의 사업은 34~40개월, 공사비 20억 내외의 사업은 18~24개월이 소요된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공공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전 공정에 책임감 있게 참여할 수 있는 관계자는 아무도 없다. 사업부서의 주

무관과 건축 분야 담당 감독관은 주기적으로 교체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설계사의 업무 담당자가 설계업무를 완료하고 설계의도 구현에 참여하는 경우도 드물다. 질적으로 향상된 공공건축물의 건축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지속적으로 책임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다.

공공건축물 건축의 전체 과정에 책임감 있는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 당진시 공공건축가로 참여하는 동안 사전검토 단계에서부터 건축물의 준공단계까지 민간전문가로 참여할 수 있었던 송악 건강생활지원센터 프로젝트 진행 과정을 간략히 소개한다.*

©건축사사무소 연화

	<p>프로젝트 개요</p> <p>사업명: (당진시) 송악 건강생활지원센터 위치: 충남 당진시 송악읍 복운리 1628-1 용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강생활지원센터) 규모: 지상 1층 건축면적/연면적: 914.87m² 설계공모기간: 2018.5.~2018.6.(2개월) 설계기간: 2018.7.~2019.3.(9개월) 시공기간: 2019.3.~2019.12.(10개월) 설계 및 감리(설계의도 구현): 건축사사무소 연화 시공: (주)송아산업</p>
---	--

건강생활지원센터 중정 전경

사전검토 단계

2018년 국토교통부의 소규모 건축물 민간전문가 지원사업 ‘당진시 로컬푸드매장’ 사업의 자문에 따른 미팅에 참여하였을 때, 설계공모를 예정하고 있는 다른 사업 ‘송악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대지 위치에 대해 관계자들과 논의하게 되었다. 논의 결과 주민 접근성이 양호하며, 추후 공공건축물의 건축에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상지의 위치를 큰 범위 안에서 조정하여 이동하게 되었다.

설계공모 단계

다수의 우수한 작품이 접수되었다. 심사 과정에서 1층 규모의 계획안과 2층 규모의 계획안이 대등한 가운데 최종적으로 근소한 점수 차이로 1층 규모의 계획안이 당선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1층 규모와 2층 규모에 대한

* 당진시 공공건축기록화 자료, 건축사사무소 연화가 제공한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였다.

설계 지침 위반 여부와 계획적 합리성에 대한 이슈가 있었다.

설계 단계

설계자, 행정, 민간전문가가 ‘공공건축물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에 기반한 수평적 의사결정’ 원칙에 따라 일곱 차례 업무협의를 진행하였다. 그중 공공건축가 정례회의를 활용해 설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체크하고 대안을 논의하였으며, 계획안 실현을 위해 공사비 부족분에 대하여 발주처가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디자인 원안대로 공사를 발주할 수 있었다.

시공 단계

설계자가 설계의도 구현과 「건축사법」에 따른 감리(비상주)를 수행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설계의도 구현의 목적에 맞게 현장 협의 및 계획안에 적합한 자재를 선정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과 도면의 해석 및 상세도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네 차례의 관계자 협의를 통해 다양한 현안이 합리적으로 결정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보기 드물게 사업을 진행하는 21개월 동안 설계자, 담당 주무관, 민간전문가가 변경되거나 교체되지 않았다. 민간전문가가 사업 사전검토 단계에서 대지의 선정과 조정, 설계공모 심사와 설계의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시공 과정과 설계의도 구현 과정의 의사결정에도 참여하여 설계공모 원안을 구현하였다. 공공건축물의 공공적인 가치를 실현할 수 있었던 대표적 사례이다. 장마철 우수 처리에 대한 문제와 결로 발생 부위가 있다고 해서 얼마 전 설계자와 현장을 방문하여 하자 보수에 대한 방법을 협의하였다.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유지·관리를 포함하는 공공건축물 전 생애 기간에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프로젝트가 되었다. 수년 후 건강생활지원센터의 효용성이 다해 리모델링이 필요할 때 다시 민간전문가로 참여할 수 있을까?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사업의 전 과정에 참여하여 다양한 의사결정 단계에 합리적인 결정을 유도하고,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관계자가 업무를 지속하기 힘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설계안을 포함한 사업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설계

지역의 공공건축 수준과 방향을 제시하는 민간전문가 역할 모색

자와 시공자·감독관·감리자의 업무 역량 부족이 민간전문가의 직접적인 스트레스가 되지 않고, 민간전문가의 지나친 자문이 자칫 관계 전문가의 영역을 과도하게 침범하지 않도록 할 법적·제도적인 장치의 마련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

현상공모 참여를 위해 설계사무소에서 프로젝트를 찾아볼 때 원칙이 있다. 몇몇 특정 지자체의 공모를 우선적으로 리스트업하고 검토하게 된다. 지면을 통해 언급하기는 매우 곱고스럽지만 몇몇 특정한 지자체는 그리 많지 않다. 물론 민간전문가가 설계공모 발주에 참여하여 원칙과 내용을 정하지 않는 조달청은 당연히 제외다.

설계공모의 공고 단계에서부터 지역의 공공건축 수준과 방향의 작은 부분이 어렵듯이 드러난다. 심사위원의 구성, 공모 참여 시 제출 결과물의 적합성, 건축물의 종류와 난이도에 적합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공사비 책정, 설계금액과 설계기간 등 주요한 사항이 전체 의사결정의 핵심이 된다. 일 잘하고, 자신의 건축물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이 있는 설계사무소의 내부 의사결정에 민감한 항목을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관계자들은 잘 모른다. 따라서 공공건축물의 공공적 가치를 실현하려면, 설계공모의 내용과 방향 설정을 위해 민간전문가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결과 몇몇 지자체의 설계공모에 참여를 신청하고 작품을 제출하는 업체의 쏠림 현상이 심하게 발생한다. 어떤 지자체의 설계공모에는 100여 팀의 작품이 접수되지만, 어떤 지자체의 설계공모에는 두세 팀이 제출하거나 아무도 제출하지 않아 재공고하는 경우도 많다. 재공고하는 사업은 사업기간이 줄어들어 좋은 공공건축물에서 더욱 멀어진다.

설계공모를 통해 안이 선정되고 수차례의 보고와 심의 과정에서 의사결정자의 예기치 못한 제언과 다양한 의견으로 설계 원안이 수정되기도 한다. 몇 차례 수정을 거치면 설계 원안은 사라진다. 이를 예방하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전문적인 경험과 역량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꼭 필요하다. 이 경우에는 정무형 민간전문가가 필요할 것이다.

**사회 변화를 고려한
종합적인 역할 재정립: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공간환경전략계획**

설계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한다. 공사비 부족, 전문 공종별·분야별 문제점, 법적인 적용과 발주제도의 특징, 세부적인 내용에 너무 깊게 관여한다면 관계자가 수동적으로 대응할 것이 염려되지만 관계자와의 소통이 원활하고, 유사 프로젝트의 경험이 풍부하며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실무형 민간전문가를 통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1기 총괄계획가가 5년의 임기를 마치고 떠난 자리에 2기 총괄건축가로 자연스럽게 자리하였다. 1기 총괄계획가가 있는 동안 공공건축가로 함께 활동하면서 지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있고, 그동안 추진되고 있는 공공건축물의 구체적인 실현 전략이 이제 필요하다는 점과 민간 건축가 제도의 운영 및 공간환경전략 계획의 수립 등 전국 지자체 중 운영 우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는 점 등 때문에 그 명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기존 공공건축가 중에서 역할을 해줘야 하지 않겠냐는 분위기가 있었고, 심사숙고 끝에 총괄건축가의 임무를 수락하게 되었다.

공공건축가로 활동할 때는 프로젝트 단위로 좋은 공공건축물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했는데, 총괄건축가의 자리에서는 총괄 조정 및 자문응답에 대한 업무가 우선시되었다.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2019.7.)’에 따른 일곱 가지 업무에서 총괄 조정 및 자문응답에 대한 업무가 62.5%로 연구에서 확인된 바 있다(임유경 외, 2022).

당진시에서는 2022년 당진동 공간환경전략계획, 2023년에는 전국 최초의 먼 단위 공간환경전략계획, 신평면 공간환경전략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시 차원의 관리계획과 필지 단위 사업계획 간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고, 현재는 시의 예산을 투입해 송악읍 공간환경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공간환경전략계획은 지역의 정체성과 통합적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한 공간관리 방향과 전략을 설정하면서, 기존 단위 사업을 체크·조정·발굴한다는 측면에서* 총괄건축가의 활동에 대한 보물지도 같은 역할을 한다. 또한 주민들에게는 그들이 살고 있는 공간과 추진되고 있는 여러 사

* Google 키워드 검색 ‘공간환경전략계획’이란 내용 참조

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백과사전이, 행정 관계자들에게는 부서별·시기별로 종합적으로 파악되지 않는 사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송악읍 공간환경전략계획은 먼저 실시된 두 건의 공간환경전략계획과 다른 점이 있다. 앞의 두 건은 정부예산 지원이 있어서 계획을 수립하였지만, 송악읍 공간환경전략계획은 당진시의 예산으로 수행된다는 점과 지자체장이 바뀌었다는 점이다. 지자체장이 바뀌면서 민간전문가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가 흔들리고 사업의 목적과 방향이 바뀐 사례가 적지 않은데, 최근 가장 이슈의 중심에 있는 사례는 청주시청사 건립 설계 재공모일 것이다.

청주시 총괄건축가 신춘규는 2019년 청주시청사 국제 공모 추진을 맡아 시작하고, 한국건축가협회에서 국제 공모 용역을 맡아 진행하여, 2020년 7월 2차 심사에서 당선작을 선정한다. 하지만 2022년 민선 8기 시장이 취임하면서 청주시청사 건립의 근본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국제 공모 선정안에 대해 새로 취임한 시장은 본관동 존치를 전제로 한 당선 설계안의 구현이 어렵다는 점 등을 내세워 2023년 9월 국제 공모를 재공모하였고, 2023년 3월에는 본관동을 철거한다.*

공공건축가로 활동하면서 지역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키우고 총괄건축가로 봉사를 시작하는 시점에 성향이 매우 다른 지자체장의 교체는 업무환경 변화에 가장 큰 요소가 되었다. 대부분의 민간전문가가 지자체장과 코드가 맞는지에 따라 업무의 질적인 정도가 정해지는 현실이라면, 가깝게는 공간환경전략계획의 수립은 민간전문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기초적인 수단임이 틀림없을 것이다. 수립된 계획의 실효성 평가와 다양한 환경 변화의 내용을 담아내기 위한 재수립 계획을 지자체장 임기 4년 중 중간 지점에 할 것을 제안한다.

4년마다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공간환경전략계획을 재수립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지역별 건축기본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기 위한 시작점이어야 한다.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공공건축물의 건립을 위한 목적과 방향이 갈팡질팡한다면 좋은 공공건축물은 언제 건축될 수 있겠는가. 2008년 「건축기본법」 제정 이후 제10조(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에

* 신춘규(2023), 〈건축과 사회〉 기고글을 요약하여 작성하였다.

의 시작 단계를 관리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다. 공공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공공건축물 구축을 위한 전 과정 모니터링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공공건축 관계자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지속될 필요가 있다. 공공건축지원센터의 교육 모델을 계속 가져가고, 지역 공공건축 담당자와 사업 담당자에 대한 교육도 이어져야 할 것이다.

공사발주 시스템의 개선도 필요하다. 입찰 시스템은 시공사의 기술력을 보장하지 않는다. 시공능력을 공사수주 실적 공사비로 평가하기보다 실질적인 시공능력 평가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전문 분야별 분리 발주는 건축물의 시공 품질 저하 문제를 더 가속화시키고 있다. 설계와 시공 감리 수행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를 위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전 공정을 잘 수행하고 공공건축물의 질적 향상에 기여한 설계사무소는 이후 더 많은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고민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건축물 설계 납품물의 표준화도 주요한 과제이다. 현재 발주처와 지자체마다 상이한 설계 납품물을 요구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 설계비의 2~8%가 소요된다(새건축사협의회, 2023). 설계 단계에 있어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매뉴얼을 마련하거나 도서 표준화를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

나아가 공공건축물 건립 과정에 대한 아카이빙도 필요할 수 있다. 설계사 선정이나 공사비 산정과 조정, 이슈에 대한 조정, 건축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대응 방안 등 조성 과정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구축해야 한다.

참고문헌

- 1 건축공간연구원. (2019). 공공건축의 미래를 생각하다. 건축과 도시공간, vol.34.
- 2 건축공간연구원. (2019). 건축서비스산업,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다. 건축과 도시공간, vol.36.
- 3 건축공간연구원. (2021). 건축의 시대, 건축산업의 가치와 과제. 건축과 도시공간, vol.44.
- 4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2020).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공공건축 지원체계 재정립 방안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 5 임유경, 심경미, 백선경, 배선훈, 유제연, 홍예은, 김민서, 양진현. (2022). 공간환경전략계획 및 민간전문가 지원사업 관리와 개선방안 연구. 국토교통부.
- 6 국토교통부. (2023). 제2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2024~2028).
- 7 새건축사협의회. (2023). 2023년도 (사)새건축사협의회 건축 분야 정책, 제도 제안.
- 8 신춘규. (2023). 청주시청사 본관동 철거 유감문: 정치로 묻든 우리의 도시, 그리고 건축. 건축과 사회, 18-23.
- 9 이경재, 방재성. (2021). 숫자로 보는 공공건축 2020. 건축공간연구원.
- 10 염철호, 서수정, 이여경. (2019). 제1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안. auri brief No.187. 건축공간연구원.

따라 제1차(2010~2014), 제2차(2016~2020),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2021~2025)이 수립·공표되었다. 또한 제12조(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서 지역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제는 법적으로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여, 국가 건축정책기본계획은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고, 지역건축기본계획은 지역별 공공건축의 공공적인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기본 틀을 각 지자체에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공공건축지원센터와 민간전문가는 국가 건축정책기본계획에 부합하면서 지역의 특색이 효과적으로 반영된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과 실현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세부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공공건축물의 건립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건축인의 한 사람으로서 지난 10년 동안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노고와 성과에 무척 감사드린다. 몇 가지 큰 변화가 있었다. 초기에는 관계자들에게 단어도 생소한 건축기획과 사전검토, 현상공모(제안공모, 일반공모, 2단계공모)의 용어와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썼다.

점점 단어에 대한 설명보다는 건축기획과 사전검토, 현상공모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미팅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제는 건축기획과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 그리고 현상공모의 절차상 차이점과 목적, 소요되는 기간을 설명하면서 관계자 미팅을 하게 된다. 공공건축지원센터 관계자의 노력으로 제도가 정착되었다.

제도가 정착되고 나니 실효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희망하게 된다. 제도의 취지보다 더 훌륭한 성과를 거둔 사례가 적지 않지만, 귀찮고 힘든 또 하나의 행정 절차로 인식하는 경우도 많이 목격하게 된다. 실효적인 성과를 위해 현장에서 겪게 되는 시급한 과제 몇 가지를 나열해 본다.

먼저 설계 계약(업무) 변경기준을 법제화하는 등 변경 관련 제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새건축사협의회, 2023). 사전검토 수행 사업의 전체 프로세스 모니터링도 중요하다. 현재 사전검토 및 공공건축심의는 사업

지난 10년 노고와 다음 10년의 과제

공공건축의 내일을 위한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역할

일시
2024년 6월 5일 14:00

참석자(가나다순)
권지희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사무관
김빈 코어건축사사무소
공동대표
염철호 건축공간연구원 부원장
유종수 코어건축사사무소
공동대표
전영훈 중앙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진행
염운진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
(공공건축지원센터장)

<건축과 도시공간> 2024년 여름호에서는 건축공간연구원의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 10년을 맞아 센터의 역할과 그간의 성과, 공공건축 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참석자들은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립 이후 공공건축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해 온 제도적 노력을 되짚어 보고, 앞으로 공공건축의 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법제도를 발전시켜 갈 것과 이때 공공건축지원센터가 큰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염운진 건축공간연구원이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것이 2014년 6월의 일이고, 좌담회가 열리는 오늘이 2024년 6월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 공공건축과 관련된 관·학·산·연 전문가들을 모신 만큼 여러분들이 공공건축지원센터와 센터 업무를 대면했던 때의 이야기나 소회를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전영훈 먼저 건축공간연구원 공공건축지원센터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2008년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TF에 참여한 것을 시작으로 연구원, 그리고 센터와 함께 일했던 10년이 스쳐 갑니다. 건축의 공공성을 증진한다는 설립 취지에 맞게 연구원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공공건축과 디자인 품질관리를 주제로 많은 연구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연구들이 결국 전문성을 갖춘 공공건축 지원기관 즉, 공공건축지원센터나 공공건축가 제도 등이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설득하는 논리를 구축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제정과 개정 속에서 센터의 역할과 업무가 크게 확장되어 왔고, 공공건축특별법안의 마련까지 외부 환경 변화에 부딪히고 시대의 요청을 받아들이며 10년을 걸어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염철호 2013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되고 이듬해 시행되면서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등 법정 업무를 담당할 기관으로 건축공간연구원이 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되었습니다. 당시 연구를 하는 기관으로 법정 업무를 실행하는 것이 가능할지 연구원 내부에서도 여러 목소리가 있었는데, 최소한의 인력으로 시작한 것이 벌써 10년 전의 일입니다. 그동안 사업계획 사전검토와 설계공모 의무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건축기획 업무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제도가 도입되는 등 공공건축의 품질 제고를 위한 법제도 정비가 계속 이루어져 왔습니다. 다만 한편으로는 공공건축 조성 과정의 앞부분이 지나치게 복잡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고민도 들었습니다. 제도의 본래 취지는 유지하면서, 절차를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지 고민했던 10년이 아닌가 합니다.

권지희 시작과 발전 과정을 두 분께서 충분히 짚어주셔서, 저는 비교적 최근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가 많이 늘어서

이제 전국에 10개가 넘습니다. 설립 준비사항에 대한 문의전화도 많은데, 지자체의 자발적인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느낍니다.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수가 크게 늘었고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업무를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초기단계를 넘어서면서 국가와 지역의 협력관계가 더욱 중요해지고도 있습니다. 기존에는 정기적인 협의체 운영을 통해서 센터 운영과정에서 애로사항을 공유하는 것으로 진행되었으나, 점차 협력사업으로 공공건축의 품격향상과 관련한 기초데이터구축, 정책대안 마련 등을 위한 연구수행 등에 있어서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작년 4월에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이 크게 바뀌면서 심사총량제가 도입되고 심사 과정이 온라인으로 실시간 공개되는 등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발주기관은 설계공모 운영에 대해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할 텐데, 이를 위한 지원방안으로 1월에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도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설계공모 운영 및 지원을 포함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업무 영역과 역할이 더욱 확대되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엄철호 건축공간연구원 부원장



전영훈 중앙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엄윤진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공공건축지원센터장)



권지희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사무관

유종수 총괄·공공건축가 제도, 공공건축 설계공모가 건축사사무소와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업무가 만나는 지점일 겁니다. 전국에 많은 공모전이 나오지만, 저희는 주로 총괄건축가가 있는 지역의 설계공모에 많이 참여하고 실제 설계 업무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김빈 총괄건축가 제도를 활용하는 지자체의 설계공모에만 참여한다든가 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참여할지를 결정할 때 설계공모의 기획 의도나 심사위원회 구성, 기간 등을 고려하게 되는데, 총괄건축가 제도를 통해 보다 내실 있는 건축기획이 이루어지고, 공정한 설계공모나 합리적인 사업 운영 등이 구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여할 확률이 더욱 커지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좋은 공모’에 건축사사무소의 참여가 물리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 준비 과정과 시간 등을 고려하면 다소 낭비라는 생각도 듭니다.

염철호 그런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검토한 것이 ‘쇼트리스트’ 방식인데, 간단한 참가의향서를 받아 1차 심사를 하고 이를 통과한 설계사무소만 공모에 참여하도록 하는 식입니다. 하지만 참가의향서 평가기준은 어떻게



김빈 코어건축사사무소 공동대표



유종수 코어건축사사무소 공동대표

할 것인지 등 공정한 공모 운영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을 겁니다. 공공건축 설계자를 선정하는 효율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공건축지원센터의 더욱 많은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엄윤진 공공건축지원센터의 10년 중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공공건축특별법의 추진입니다. 공공건축특별법이 제정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고, 또 무엇이 담겨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전영훈 공공건축특별법안의 핵심은 기존의 건축서비스산업 관련법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딜레마를 해소한다는 데 있습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등이 실효적으로 민간을 제외한 공공 부문의 건축만을 다루고 있다는 점, 기획에서 설계발주까지의 과정만 포함하고 있다는 점 등입니다. 기획부터 설계, 시공, 사후관리, 나아가 DB 구축까지 공공건축 조성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자는 것이 골자였고, 공공건축부터 선진적인 제도적 틀을 만들고 나면 일종의 낙수효과로 민간 건축과 건축산업 전반에 건강한 변화가 생기지 않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조문을 살펴보면 분명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가져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만, 「건축기본법」의 민간전문가 조항을 정교하게 다듬어 총괄·공공건축가 제도를 법정화함과 동시에 기존의 자문역을 넘어서는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여기에 공공건축정책기본계획과 지역공공건축관리계획 수립, 발주 이후 설계의도 구현과 성과평가의 의무화, 선도사업의 실시와 우수 공공건축 선정, 그리고 이용자를 포함한 관계자 의견수렴 조항이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유종수 공공건축 조성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합니다. 시공 단계에서 상황에 따라 안전성 검토나 추가 인허가·인증 관련 업무가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라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설계 단계와 관련해서는 또 다른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업무에 대한 대가 기준을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자체 등 일선에서는 비용과 예산을 책정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엄철호 총괄·공공건축가 조항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건축기본법」에서 총괄·공공건축가 같은 민간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음을 이미 명시하고 있고,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제도가 돌아갈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또 총괄·공공건축가가 지역의 공공건축뿐 아니라 건축·도시·경관, 공공 디자인 등에 정책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라고 본다면, 공공건축만을 다루는 공공건축특별법보다는 「건축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공공건축특별법에는 공공건축에 한하여 조금 더 필요한 일들을 담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엄윤진 마지막으로 공공건축지원센터의 다음 10년을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공공건축의 품질 제고를 위해 앞으로 센터가 더 중요히 해야 할 역할, 풀어가야 할 과제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유종수 공공건축지원센터의 법정 업무 중에 ‘공공건축 관계자 교육’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노력 덕분에 현장에 가면 일선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역량이나 이해도가 매우 높아졌다고 느낍니다. 나아가서 발주처의

장(長), 즉 결정권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결정권자의 선택으로 초기 설계와 상관없이 방향이 갑자기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기획이나 설계의도 구현 제도처럼 좋은 품질의 공공건축을 만들기 위해 마련된 방안들과 과정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공공건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일도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공공건축 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단계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오늘 계속 해왔는데, 이러한 차원에서도 조성 전후 아카이빙이 꼭 필요할 겁니다. 또 그 대상이 건축상 수상작 위주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수상 여부보다는 공유할 가치와 의미가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정보를 축적하고 자산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권지희 담당자 교육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국토교통부에서도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공공건축을 발주하는 경우를 보면 공공건축만을 담당하는 인원이 충분히 있는 곳은 많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보육시설 발주는 보육 업무를 맡은 부서에서, 보건시설 발주는 보건 정책과와 같은 부서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꽤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과 관련 지침 제시, 지자체 담당자의 교육 등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공공건축지원센터가 공공건축 관계자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교육에 앞으로도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영훈 앞으로 공공건축은 ‘공공이 발주하는 건축’을 넘어 ‘시민이 사용하는 건축’으로 확장될 것이고, 설계발주뿐 아니라 시공과 유지관리 영역까지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질 겁니다. 이는 공공건축지원센터가 다뤄야 할 공공건축의 대상과 관리 범위가 확대될 것을 의미합니다. 공공건축지원센터의 법정 업무인 공공건축 DB 구축, 관계자 교육, 산업 실태조사 등에서 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며, 정량적 데이터의 축적이 지금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공공건축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이 또한 큰 변곡점이 될 겁니다. 현재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자문 성격의 업무들이 대거 법정 업무가 될 것이고, 설계발주 이후 단계와 관련한 업무 대응, 공공건축 기본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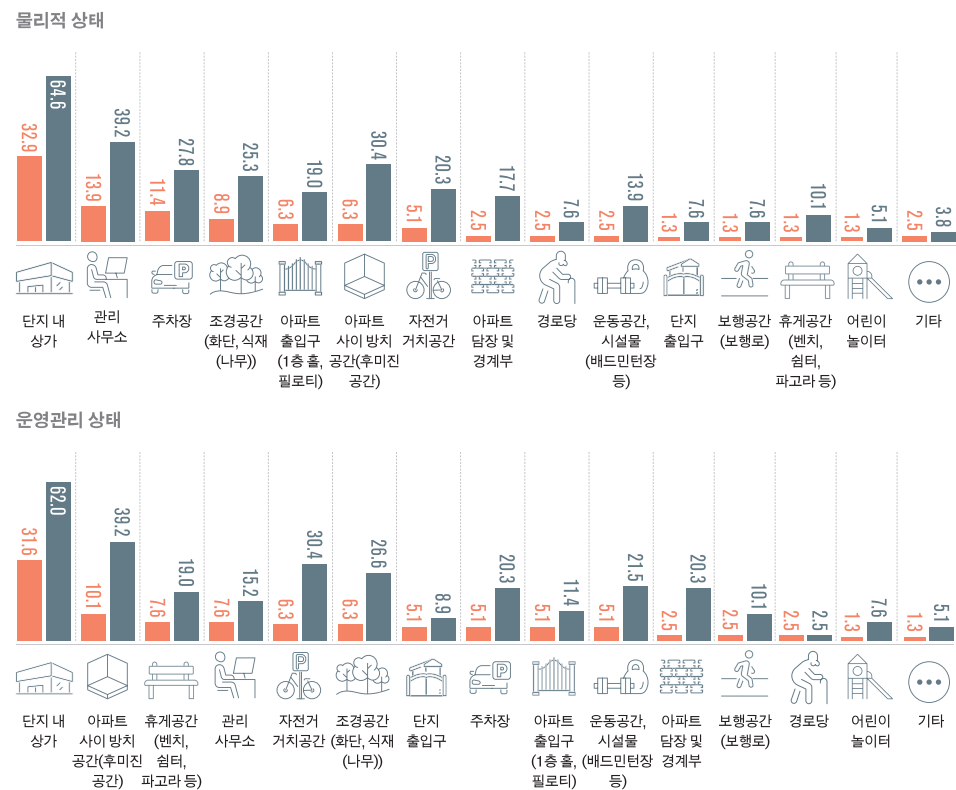
과 지역 공공건축 관리계획 수립 및 지원 등 역할과 업역이 변화할 겁니다. 이때 센터 운영에 대한 인적·자원적·제도적 지원과 이에 대한 공감대, 협력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해질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초기 롤 모델로 삼았던 영국의 CABE, 프랑스의 MIQCP처럼 연구 기능이 분리된 실행기관이자 독립적인 전문기관으로 나아가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염철호 오늘은 연구원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 10주년을 맞으면서 여러분들의 그간의 소회와 함께 공공건축지원센터에 대한 기대와 당부의 말씀을 듣는 의미 있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공공건축지원센터는 그간 여러 난관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공공건축의 효율적 조성과 품질·품격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왔는데,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논의의 큰 주제처럼 공공건축의 내일을 위하여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가 참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공공건축지원센터만이 아니라 정부부처, 지자체, 학계, 업계까지 여러 주체들이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 또한 많기 때문에 더욱 협업과 소통이 중요할 것이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바뀌어야 할 장소는 어디일까?

건축공간연구원은 영구임대주택의 공간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사회 고립과 주민 내부 갈등 완화 가능성을 파악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40개 노후 영구임대주택단지의 관리자 79명과 영구임대주택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사회 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2023년 10월 온라인 조사를 진행하였다. 통계자료실을 통해 조사 및 분석 내용의 일부를 소개한다.

Q 관리자 영구임대주택 내 공간환경 개선이 가장 필요한 장소는? (N=79, 단위: %, 복수응답)



A 물리적 상태와 운영관리 상태 모두 가장 개선이 필요한 공간환경은 상가시설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였거나 노후도에 따른 물리적 상태가 가장 열악하다고 본 장소는 상가시설(32.9%), 관리사무소(13.9%), 주차장(11.4%), 화단 등 조경공간(8.9%) 순으로 나타났다. 또 시설 파손 및 청소관리 상태 등 운영관리 점검이 필요한 장소로는 상가시설(31.6%), 주동 사이 방치된 후미진 공간(10.1%), 휴게공간(7.6%), 관리사무소(7.6%) 순으로 조사되었다.

Q 관리자 단지 공간환경 개선과 지역사회 소통 및 교류 시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인식 변화 가능성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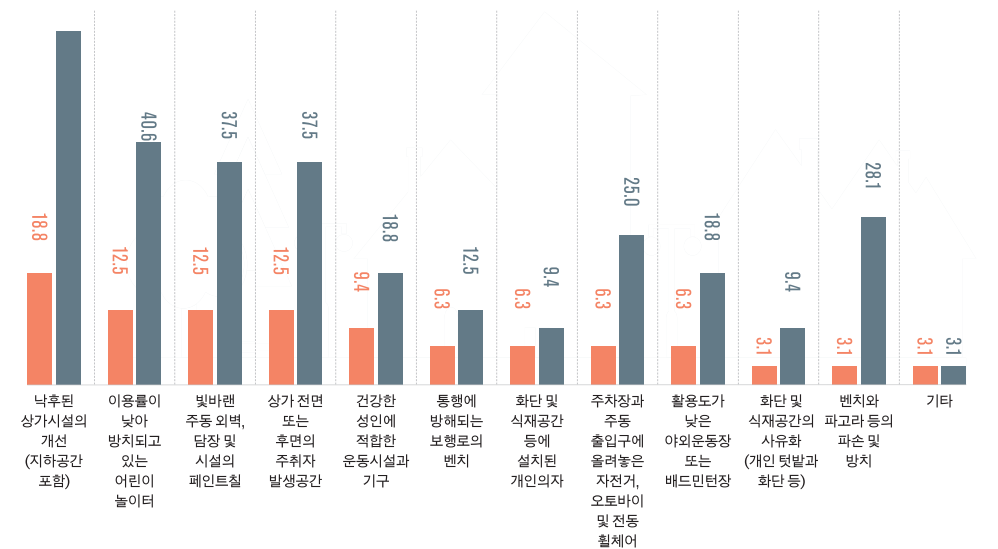


A 지역사회의 인식이 긍정적, 우호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

관리자의 66.7%는 영구임대주택의 공간환경이 개선된다면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와 단지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이 긍정적이거나 보다 우호적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관리자의 57.9%는 단지 입주민과 지역사회 주민 간 소통 및 교류가 이루어진다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와 단지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이라 생각하였다. 이는 지역사회 고립과 단절 완화를 위해서 입주민과 지역사회 주민이 보다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Q 관리자 지역사회 고립, 단절 및 차별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간환경 개선이 필요한 장소는?

[N=32(차별, 고립에 일조하는 단지 내 공간환경이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단위: %,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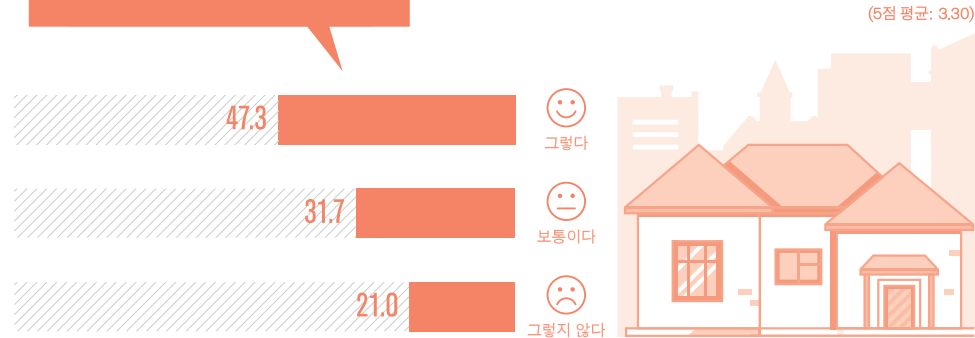
A 낙후된 상가시설의 개선이 가장 시급

관리자의 65.3%는 지역사회에서 영구임대주택의 고립, 단절 및 차별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환경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였다. 개선이 가장 시급한 장소는 낙후된 상가시설(18.8%)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이용률이 낮은 어린이 놀이터, 빛바랜 주동 외벽과 담장, 상가 주변의 주취자 발생 공간이 동일한 비율(12.5%)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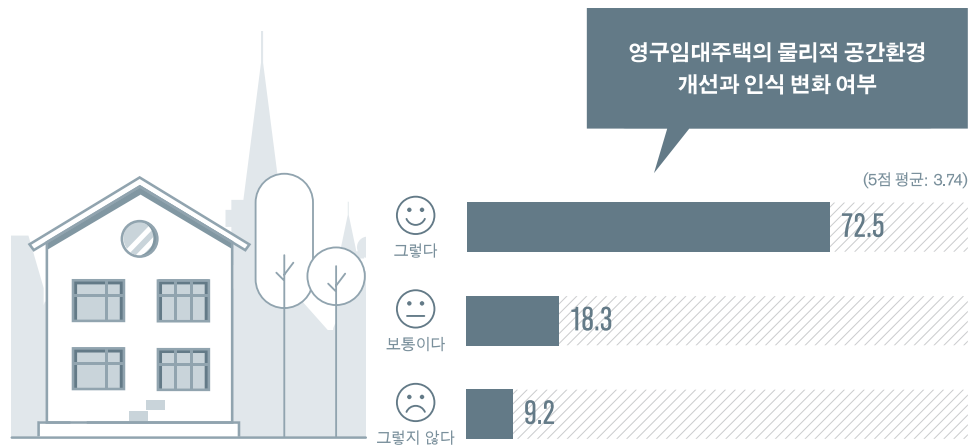
Q 지역사회 주민 공간환경 개선을 통한 부정적 인식의 개선 가능성은?

[N=142(물리적 공간환경 차별로 인해 부정적 이미지가 축적되었다는 데 동의한 응답자), 단위: %]

영구임대주택의 부정적 이미지와 물리적 공간환경 관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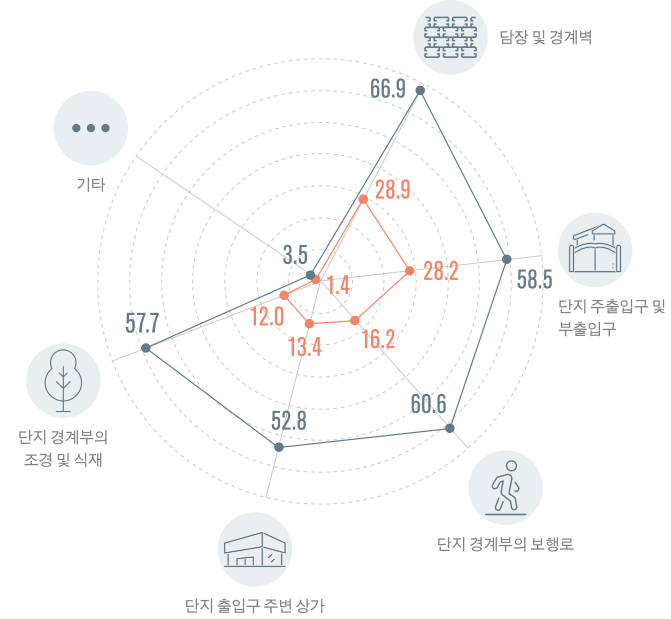
영구임대주택의 물리적 공간환경 개선과 인식 변화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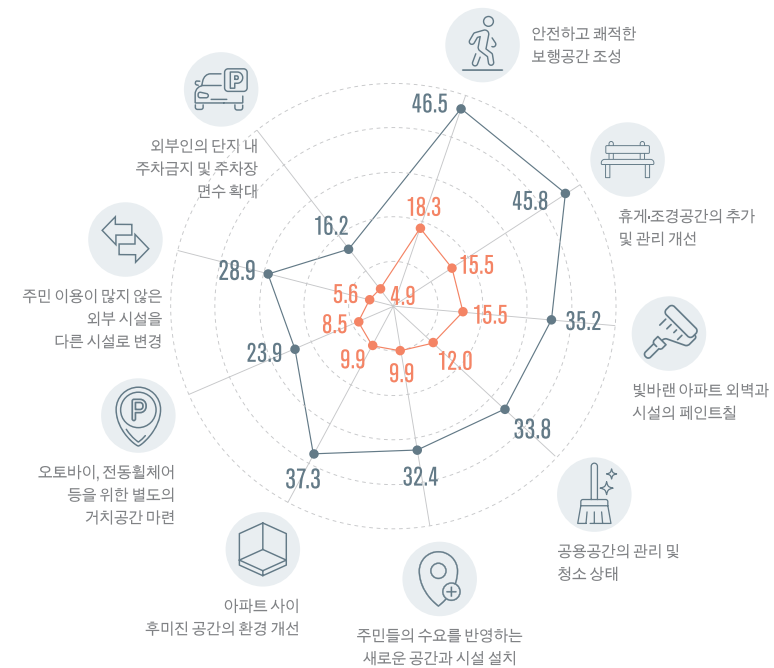
A 노후화 등 주변과 이질적인 단지 모습이 개선된다면 긍정적 인식 변화 기대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해서 지역사회 주민의 47.3%는 아파트 외관(물리적인 공간환경)의 노후화 등 주변과 이질적인 모습이 지속적으로 축적된 결과라고 생각하였다. 특히 부정적 인식에 동의하는 지역사회 주민 중 열악한 공간환경이 개선된다면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이 보다 긍정적·우호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보는 주민이 72.5%로 나타나, 공간환경 개선을 통한 부정적 인식의 개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선이 시급한 공간



효과적인 공간 개선 방법



Q 지역사회 주민 공간환경 개선이 시급하거나 인식 개선과

같은 완화에 효과적인 공간은 어디?

[N=142(물리적 공간환경 차별로 인해 부정적 이미지가 축적되었다는 데 동의한 응답자), 단위: %, 복수응답]

● 1순위 ● 1+2+3순위

A 지역사회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담장 및 경계벽을, 인식 개선과 같은 완화를 위해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공간 조성이 필요

지역사회 주민들은 지역사회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공간환경 개선이 가장 필요한 장소로 담장 및 경계벽(28.9%)을 꼽았으며, 단지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28.2%)와 단지 경계부 보행로(16.2%)도 개선 필요성이 높게 조사되었다. 또한 인식 개선과 같은 완화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개선 방법으로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공간 조성(18.3%), 휴게 조성 공간의 추가 및 관리 개선(15.5%)과 빛바랜 아파트 외벽과 시설의 페인트칠(15.5%)을 꼽았다.

2

일본 가나자와시는 반세기가량 시를 중심으로 지역주민, 중앙 정부가 소통하며 역사도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국가 주도로 문화유산을 관리해 온 국내 상황과 다른 점은 무엇이고 그 관리 방식에서 배울 점은 무엇인지, 가나자와시 나무 문화도시 정책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도심의 자동차 통행량과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한 자체 시스템을 도입, 발전시켜 온 싱가포르의 정책 사례에서도 시사점을 찾아본다.

국내동향으로는 제2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2024~2028)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한옥의 새로운 매력 발견과 지원 확대를 위해 시도되는 '서울한옥 4.0 재창조 계획'의 의미를 확인해본다.



싱가포르 도로에 설치된 ERP 갠트리



제8회 서울우수한옥 한옥건축양식 부문 수상작인 한민회계협관



독일 재생에너지법에 따른 태양광 지원 대상

건축 도시 동향

Trend Report

해외

나무 문화의 계승과
창조를 위한 가나자와시
나무 문화도시 추진계획
048

도시 교통 혼잡과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싱가포르의
Next-Gen ERP 2.0 시스템
056

국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통한
품격 있는 공간환경의 구축
- 제2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060

시대를 반영한
서울한옥의 진화
- 서울한옥 4.0 재창조 계획
064

나무 문화의 계승과 창조를 위한 가나자와시 나무 문화도시 추진계획 | 가나자와시 도시계획과가 주도하는 나무 문화도시 정책은, 대한민국 저변에 깔린 문화유산 규제 인식에 따라 각 시·군·구에 설치된 도시계획과와 문화재과의 상호 견제의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그간의 역사도시 관리 방식을 점검할 수 있는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도시 교통 혼잡과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싱가포르의 Next-Gen ERP 2.0 시스템 | 현재 싱가포르 도심에는 98개의 갠트리가 설치되어 있으며, 차량이 혼잡한 곳에 집중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이 시스템은 도로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르게 가격을 징수하며 도로 상황은 평균 속도로 결정된다. 도로마다 목표 속도가 있고 그 속도에 못 미치면 요금이 탄력적으로 올라가도록 설정되어 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통한 품격 있는 공간환경의 구축 - 제2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 제2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은 1차 기본계획에 비해 '산업적 관점'에서 활동 기반의 내실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정책을 담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건축물 및 공간환경 품질의 향상을 목표로 한다.

시대를 반영한 서울한옥의 진화 - 서울한옥 4.0 재창조 계획 | 서울한옥 4.0의 취지는 앞으로 지어지는 서울의 한옥들이 전통에만 머무르지 않고 보다 편리하게 창의적으로 지을 수 있도록 디자인 규제를 최소화하고, 한옥과 한옥의 디자인 요소를 재해석한 현대건축물까지 지원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나무 문화의 계승과 창조를 위한 가나자와시 나무 문화도시 추진계획

김종범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원

들어가며

일본 교토부에서 북동쪽으로 약 230킬로미터 떨어진 노토반도에 위치한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金沢市)는 인구 45만 명에 행정구역의 60%가 산으로 덮인 역사도시이다. 가나자와시는 사라져 가는 역사적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1968년 ‘가나자와시 전통환경 보존조례(金沢市伝統環境保存条例)’를 제정하였다. 이는 일본 내에서 전통적인 도시경관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자주조례로, 상위법에 근거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 조례이다. 역사도시의 개발과 보존이라는 숙제를 긴 시간에 걸쳐 풀어 온 가나자와시와 주민들의 노력을 잘 보여주는 역사적 단면이다.

가나자와시는 2022년 4월에 ‘가나자와시 나무 문화도시의 계승과 창출의 추진에 관한 조례(金沢市における木の文化都市の継承と創出の推進に関する条例, 이하 나무문화도시조례)’를 제정하고, 이듬해 ‘가나자와시 나무 문화도시 추진계획(金沢市木の文化都市推進計画, 이하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추진계획이 지향하는 모습은 ‘나무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생활과 마을 만들기’에 있고, 이를 위해 필요한 나무의 문화를 이해하는 과정, 나무를 통한 생업의 영위 방법, 일상생활에서 나무를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지속가능한 산림과 임업의 순환구조 만들기 등이 시책의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 글은 부여군이 발주하고 건축공간연구원이 수행 중인 ‘부여 고도보존육성 시행계획 수립’ 연구의 일환으로, 2024년 4월에 진행한 가나자와시 도시계획과·역사도시추진과·문화재보호과의 정책담당자를 면담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2004년 제정된 대한민국의 「고도(古都)보존에 관한 특별법」과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바탕으로 부여·경주·공주·익산의 고도 정책이 운영된 지 20년이

지났다. 올해는 법률의 일부 개정을 통해, 그간 각 고도에서 개별적으로 수립하던 ‘고도보존육성 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으로 바뀌고, 부여를 포함한 기초자치단체는 사업의 실행을 위한 세부계획 중심으로 ‘고도보존육성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계획체계가 변화였다.

이렇게 변화 중인 국내 역사도시 정책 흐름 속에서 가진 가나자와시 정책담당자와의 면담은 상당히 흥미로웠다. 반세기가량 시 중심으로 지역주민·중앙정부와 소통하며 만들어 온 역사도시 정책은 국가 중심으로 문화유산을 관리해 온 한국의 보편적 상황과는 다소 차이점이 있었다. 특히 가나자와시 도시계획과가 주도하는 나무 문화도시 정책은, 대한민국 저변에 깔린 문화유산 규제 인식에 따라 각 시·군·구에 설치된 도시계획과와 문화재과의 상호 견제의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그간의 역사도시 관리 방식을 점검할 수 있는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가나자와시 나무 문화도시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

나무 문화와 나무 문화도시의 정의 및 의의

나무 문화는 나무로 만들어 내는 자연환경, 건축, 공예품 등 ‘나무의 질감’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거리와 생활에 폭넓게 도입되어 만들어지는 문화이다. 여기에는 목조건축(전통공법, 재래식 공법, 신공법 모두 포함), 목재를 활용한 내·외장, 목공예품, 공공장소에 설치된 시설물 그리고 가로수와 정원, 숲 등이 모두 포함된다. 나무 문화도시는 이러한 나무가 갖고 있는 환경과 사람과의 친화적 특성을 도시만들기에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도시를 뜻한다. 추진계획에서 정의 내린 나무 문화도시는 단순히 눈으로 보는 나무 또는 건축재료로서의 나무에 한정하지 않고, 나무의 공급과 활용이 순환하는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마을만들기와 나무 문화의 접목

가나자와는 고고학적으로 조몬시대* 취락 유적으로 알려진 지카모리(チカモリ) 유적에서 밤나무 거목을 쪼개어 만든 기둥열이 일본 내에서 최초로 발견되었다. 이후 중세와 근세에도 목조건축이 활발히 이어졌고, 일본의 3대 정원으로 불리는 겐로쿠엔(兼六園)이 도심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다. 나무와 관련된 이러한 역사적 가치는 도시와 문화재를 관리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하고 있다. 가나자와는 역사뿐만 아니라 2009년 ‘유네스코 창조도시’(공예 부문)로 인증받은 도시로, 지역 고유의 전통공예가 자리하고 있다. 특히 목공예는 나무 문화의 기저를 형성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시 전역이 경관계획구역인 가나자와는 역사적 경관을 형성하는 전통건조물군, 전통적 가로경관의 나무 담당, 도시계획상 건축물 높이규제 강화 등 경관관리에 노력을 기울인 도시이다.

가나자와시는 문화유산, 창조도시, 경관도시라는 세 가지 토대 위에 나무 문화도시의 비전을 수립하였다. 이 세 가지 토대는 현재의 가나자와시 마을만들기에 이미 정착한 계획과 정책으로, 이곳에 나무 문화를 접목하여 ‘지금까지의 마을만들기에 나무의 문화를 더해 더 많은 매력 창출로!’를 가나자와의 새로운 마을만들기 테마로 설정하였다.

생업에 대한 나무 현황

일본은 산림청을 중심으로 2005년부터 ‘목재이용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국산 목재 보급을 위해서 건축물의 목조화·목질화 활동을 장려하는 ‘WOOD CHANGE’가 대표적인 국가 단위의 정책이다. 이러한 국가 정책 동향에 맞추어 가나자와시는 그간 ‘숲 조성 조례(森づくり条例)’, ‘가나자와의 농업과

* 일본 신석기시대 문화 중 하나이다.

숲 조성계획’, ‘숲에서 시작되는 가나자와의 미래 제언’ 등의 정책을 추진해 왔다.

가나자와시는 나무 관련 산업 종사자를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전 산업 종사자의 약 2.2% 수준인 약 5,400명이 나무와 관계된 직업*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이와 관련된 종사자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는 점에 주목하였다. 가나자와는 1996년에 장인대학을 개설하여 전통건축 관련 직종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2009년에 개교한 임업대학에서 임업 기초과정과 전문과정을 교육하고 있다. 나무 문화도시가 생활과 생업에서, 나무의 생산과 활용을 함께 도모하는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던 것은 이러한 토대가 사전에 준비되었기 때문이다. 가나자와시 정책담당자는 가나자와시만큼 나무와 관련된 선진적 정책을 펼치는 도시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전하기도 하였다.

나무 문화도시를 구성하는 건축과 공간의 과제

가나자와시는 ‘역사적 풍치유지향상계획(歴史的風致維持向上計画)’이 수립된 2009년 이래로 역사적 목조건축물의 보존·활용을 위한 지원사업을 통해 목조건축의 멸실을 막는 효과를 보고 있다.** 또한 문화재로 지정된 6개의 정원을 가꾸기 위한 보존 활동도 지속하고 있다.

일본은 2010년에 ‘공공건축물 등에서의 목재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公共建築物等における木材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제정, 2021년에 ‘탈탄소 사회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건축물 등에서의 목재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脱炭素社会の実現に資する等のための建築物等における木材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이 시행되는 등 목조건축 확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다. 가나자와시가 속한 이시카와현은 목조건축 시장 확대를 위해 ‘이시카와 나무와

친해지는 마을만들기 학원’을 개설하고 목조화·목질화에 필요한 지식을 갖춘 설계자 양성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실제 가나자와시에는 목조건축 비율이 주거목적의 건축물은 69.7%, 비주거 목적의 건축물은 12.6%에 이른다. 특히 4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에 목조를 활용하는 신공법의 도입에 힘입어 나무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추진계획이 수립되었다.

나무 문화를 지탱하는 숲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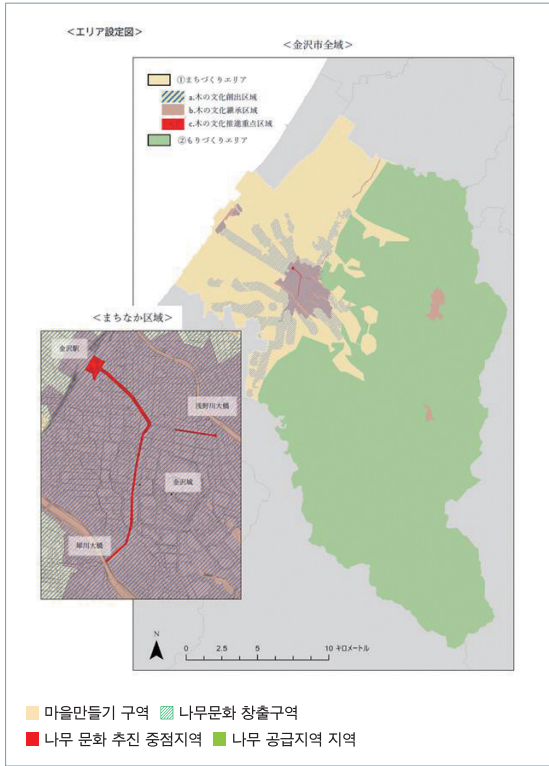
‘녹색성장’이라는 사회경제적 분위기 속에서 이시카와현은 목재 제품 확대와 공공건축물이나 민간의 비주거용 건축물의 지역 목재 사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가나자와시는 시 면적의 60%가 산림이지만, 인구의 고령화와 임업을 통한 수익창출의 어려움으로 관리되지 않는 산림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나무의 문화도시를 이루기 위해 가나자와시는 산림의 관리와 보전, 정비의 필요성을 추진계획에서 강조하고 있다. 특히 산림 재생을 위한 산림자원 순환을 촉진하고 적절히 벌채된 나무를 활용하여 건강한 산림을 유지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보고 있다.

계획의 지향점: 계승과 창출

추진계획에 적힌 계획의 기본이념은 다음과 같다. “나무 문화도시의 계승과 창출의 추진은 본 시에서 축적된 나무 문화의 의의를 인식하고 이를 존중함과 동시에 선조들이 쌓아온 나무 문화도시를 계승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켜 새로운 모습을 창출하고 발전시켜 후대에 계승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 * 임업, 원예 서비스업, 목조건축공사업, 건축리모델링공사업, 목공공사업, 목재·목제품 제조업, 가구·장비 제조업, 칠기 제조업, 가구·장식품 도매업, 가구·장식품·다다미 소매업, 토목업, 건축서비스업, 농림수산업협동조합
- ** 1999년에서 2009년 사이 목조건축인 마치야 멸실은 2,600여 채였으나, 2008년에서 2017년 사이에는 1,170채로 감소하였다.



나무 문화도시 구역 설정도
출처: 金沢市(2023, p.67)

여기서 ‘계승’은 가나자와에 남겨진 나무 문화를 중점으로, 실제 공간상에는 기존에 ‘마치야 보전활용 촉진구역’으로 설정되어 역사적 건축물과 거리·정원 등이 보존된 지역을 ‘나무 문화 계승구역’으로 설정하였다. 이 구역에서는 역사적 건축물 보존 및 활용, 장인대학 운영, 문화재 유지·관리 지원, 보존수립 지정 등의 활동이 진행된다.

‘창출’은 계승된 나무 문화를 바탕으로 이를 새롭게 창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창출구역은 ‘가나자와시 집적도시조성계획(金沢市集約都市形成計画)’의 ‘거주유도구역’ 범위에 중첩시켰다. 이를 통해 중층 또는 대형 건축물에서 목재문화를 느낄 수 있는 건축을 유도하고, 목재문화 축진을 유도한다.

이 구역에서는 중대형 목조건축 실현을 위한 지원사업, 도심 속에 보행자가 느낄 수 있는 조형물 설치, 나무 문화도시 모델이 될 수 있는 주택에 대한 지원, 가나자와산 자재를 사용한 주택 지원, 녹화사업 지원 등이 예정되어 있다.

주요 시책과 정책 사업

가나자와시는 추진계획에서 5개의 시책 방향과 구체적인 대응 방안 그리고 32개의 세부 활동 내용을 제시하였다. 각 시책은 시에서 운영 중인 나무 관련 계획과 조례, 제조업 전략계획, 문화유산 관련 계획, 건축 및 토목공사에서의 목재 관련 방침, 환경계획과의 촘촘한 연계에 기반하여 작성되었다.

추진계획의 시책 방향과 구체적 대응 방안*	
시책 방향	구체적 대응 방안
나무의 문화를 알고 이해하기	나무 문화에 대한 정보 제공 목재, 숲을 접할 기회 제공
나무를 일로 삼고, 일상생활에 활용하기	나무와 관계 맺고 일하기 나무를 이용한 제품, 공예, 기술 사업 활동에 접목하기 나무를 이용한 제품, 공예, 기술을 일상에 녹여내기
나무를 이용한 건물과 공간을 지키고 만들기	나무의 문화를 이어가는 건축물과 공간 계승하기 민간시설 등에서 나무 이용 촉진하기 시 시설에서 적극적으로 나무를 이용하기 공원과 거리 등 공공공간에서 나무를 활용하기
숲과 마을의 선순환 구조 만들기	도시와 생활을 지탱하는 숲을 정비하기 숲의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숲을 순환적으로 갱신하기
나무 문화를 책임지는 주체가 연결되고 함께 추진하기	나무를 둘러싼 관계자들 간 협력 추진하기 산·학·관이 협력하여 나무 문화 진흥에 힘쓰기 폭넓게 관련 지자체와 연계하여 나무문화 확산하기

가나자와시 도시계획과에서는 가까운 시일 내에 다음과 같은 정책 사업을 추진한다.

* 시책별 세부 활동 내용은 가나자와시 도시계획과 웹사이트 참고 요망



가나자와시 나무의 문화도시 창출 모델 사업 보조금 및 연선 수목 문화도시
가시화 사업 보조금 지원 안내
출처: 金沢市 都市計画課(2022)

①나무의 문화도시 미래상을 그리기 위해 CG로 방향성을 제시하는 사업, ②사업 인지도 향상을 위한 로고 제작, ③나무의 문화도시를 확산하고 이해하기 위한 세미나 개최, ④나무와 숲을 체험하기 위한 목공 수업, ⑤나무를 생업으로 하기 위해 가나자와 임업대학에서 연수생 교육, ⑥나무를 활용한 제품, 공

예 기술을 통한 사업 지원, ⑦나무 문화 계승을 위해 건조물과 공간에 목재를 활용하는 사업(3층 이상 건축물에 보조금 지원, 실시설계비의 100만 엔 상액으로 3분의 2 보조, 시공 시 1,000만 엔 상액으로 5분의 4 보조), ⑧가나자와시 시설에 나무를 활용하는 사업(시청, 도서관 등), ⑨공원, 가로 시설물에 나무를 사용하는 사업(버스정류장 등), ⑩학생 공모전을 비롯해 다양한 이벤트 개최 등이 그것이다.

위의 사업 중 일부는 정책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시범사업 성격으로 이미 추진된 사례도 있다. 가나자와 새 시청사 내장에 목재 사용, 4층 목조 사무실 및 상업 건축 가상설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앞서 추진계획의 비전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 가나자와를 대변하는 세 가지 토대인 역사문화, 창조도시, 경관도시라는 토대에 나무의 문화를 접목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내고 실행하는 것이 사업계획의 주된 방향이라 하겠다.

시민사회와 함께 만드는 도시계획: 나무 문화도시를 만드는 가나자와 회의

본 추진계획은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계획으로, 계획에서 제시한 시책이 2024년 4월 기준으로 실제 진행된 사업은 없다. 그러나 2020년 3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나무 문화도시를 만드는 가나자와 회의’ 활동 등 제도가 시행되기까지의 몇 가지 경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추진계획의 자료 편에는 ‘나무 문화 활동 연표’와 ‘계획 수립 과정’ 그리고 ‘나무 문화도시 가나자와’의 계승과 창조를 위한 제언서)가 함께 붙어 있다. 이들 자료는 ‘나무 문화도시를 만드는 가나자와 회의’의 발자취에 관련된 것으로, 이 회의*는 다니구치 요시로·요시오 기념 가나자와 건축관(谷口吉郎·吉生記念金沢建築館) 관장인 미즈노 이치로(水野一

郎)를 좌장으로 하여, 유관 대학·경제동우회·연구기관·마을만들기 관련 기관의 구성원이 회의체를 구성하고 있다. 이들은 2020년부터 마을만들기와 나무의 관계 찾기, 가나자와에서의 ‘목질 도시’가 갖는 의의 확립, 독자적 조례의 구상, 공공건축물 중심의 건축물 정비 방향 마련, 시범지구 구상 등의 활동을 하였다. 이를 정리하여 ‘나무 문화도시 가나자와’의 계승과 창조를 위한 제언서)를 2021년 2월에 발표하기도 하였다.**

제언서는 추진계획의 근간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인들의 삶에 녹아 있는 오래된 목공예품, 일본의 기후에 의해 국토에 우거진 숲에서 나오

는 나무라는 재료, 일본 조몬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목조건축 등 나무 문화를 현재의 도시문화로 계승할 필요성을 적고 있다. 아울러 목재라는 유기물이 현대도시 건설의 주재료로서 지속가능성 담보, 풍수해 예방, 자연적 경관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지구친화적 가치에 기반하여 목재 신기술과 전통의 접목이라는 목질 도시의 기본 이념을 담고 있다.

- * 2020년 발족한 준비위원회를 의미한다.
- ** 제언서에 담긴 나무 문화도시 가나자와의 실현을 위한 6대 축의 중심사업: ①「나무 문화도시 가나자와」의 계승과 창조, ②공공시설에서의 적극적인 나무 활용, ③민간 시설에 대한 나무 활용 촉진, ④생활과 생업에서의 나무 활용, ⑤나무를 둘러싼 순환경 사회 구축, ⑥나무 문화도시를 뒷받침하는 가나자와형 추진체계 구축

「木質都市」の創出に向けて

1. まちづくりと「木」を考える

(1) 「木」の文化の衰退

国土の約7割を森林が占める我が国では、古来より「木」の文化が息づいており、風土に根ざした生活や生業の営みを通して自然と人間の共生が図られてきた。

しかしながら明治以降、特に戦後においては不燃化が都市建設の主要な目的となり、その結果、一定の性能向上は図られたが木造建築は否定される傾向にある。このことが、現在の林業衰退の要因となっており、まちの中に無機質な要素が増加し、日本人の安らぎや誇りにつながる「木」の文化の衰退を感じざるを得ない状況にある。

(2) 「木」にこだわるまちづくり

日本建築の基本は木造にあり、ここを舞台に様々な伝統や文化が紡がれてきた。このことから、日本人のDNAに「木」は深く刻まれており、「木」にこだわりの「木」に敬意を払ったまちづくりは国民性として受け入れやすく、まちづくりの目的である「住民の心豊かな生活を支える空間の創出」を実現する上でも有効な手段である。

(3) なぜ今、取り組むのか

近年の木質建材の進化は目覚ましく、木造建築の可能性が広がり、全国でこれら新木質建材を活用した建築物が登場し、高層建築を目指す動きも始まっている。今後の更なる技術開発により、これらの取り組みは加速していくことが予想される。

加えて、人や自然に優しい環境への市民意識も大きく高まっていることから、新たなまちづくりに踏み出す土台は形成されつつあり、今こそ「木」にこだわるまちづくりを都市環境として面的に展開していく時期にきており、これは日本らしいSDGsの取り組みともなり得るものである。

この金沢における取り組みが成果を上げ、諸処の課題解決が前進することは、金沢のステップアップはもちろんのこと、我が国の「木」にこだわるまちづくりの未来を拓き、「木」の文化の再評価にもつながるものであると考える。

重要伝統的建造物群保存地区
(東山ひがし)

金澤町家の情報発信、空間体験機能である金澤町家情報館

CLTを用いた金沢駅東口地区のシティーゲート(銀門)

木質化に挑戦した民間ビル
(金沢市広岡1丁目地内)

‘나무 문화도시를 계승·창출하는 가나자와 회의’의 회의자료
출처: 金沢市 都市計画課. 木の文化都市を継承・創出する金沢会議(웹사이트 자료)

052

건축과 도시공간

053

Vol.54 - Summer 2024

가나자와시는 UN이 2015년에 발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구현을 위한 시 차원의 전략으로 나무 문화도시 제언을 채택하였다. 2022년 제정된 나무문화도시조례 제17조에는 ‘나무 문화도시를 계승·창출하는 가나자와 회의’를 명시하고 있다. 이어서 제18조에는 앞의 회의가 “나무 문화도시의 계승과 창출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시장·에 의견을 말할 수 있다”라고 적고 있다. 가나자와의 나무 문화도시 정책은 출범 준비부터 시민사회와 시정부가 함께 정책을 만들었음을 알게 하는 대목이다. 현재 ‘나무 문화도시를 만드는 가나자와 회의’는 ‘나무 문화도시를 계승·창출하는 가나자와 회의’로 이름을 바꾸어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목공예·임업분야와 건축사협회 위원을 추가하여 운영하고 있다.

위에 소개한 가나자와 회의의 첫 좌장이었던 미즈노 이치로는 가나자와 출신 건축가 다니구치 요시로를 기념하는 박물관의 관장이다. 다니구치 요시로는 일본의 ‘영빈관 아카사카 별궁’을 설계한 건축가로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다. 다니구치 요시로는 개인의 건축 작업과 별개로, 서두에 소개한 가나자와시 전통환경 보존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제언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당시 다니구치 요시로는 역사적 건조물이 사라지는 것을 우려하여 지식인들과 함께 ‘가나자와 보존과 도시 재개발 진단’을 실시하고, 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 조성을 위한 방침을 가나자와시에 제언하였다. 미즈노 이치로 관장 역시 1970년대부터 가나자와의 전통공예 중심의 마을만들기를 제창한 인물이다. 공공료계도 나무 문화도시 정책의 촉발이 과거와 현재를 이으려 노력한 다니구치 요시로를 기념하는 건축관의 대표가 맡고 있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 가나자와시는 지역주체가 직접 참여하는 역사문화 관리체계가 자리 잡은 지역이다. 이 점이 우리가 지역의 시민사회와 산업, 역사

와 문화를 도시계획이라는 큰 틀에서 아우르는 이번 추진계획에 주목해야 할 이유이다.

나가며: 역사적 풍치유지향상계획에 담긴 나무의 문화도시·가나자와 창출모델 사업

본 추진계획은 2008년부터 일본 국토교통성을 중심으로 문화청·농림수산성 등 모두 3개 중앙부처와 현급·시급 지자체 공동 정책으로 추진 중인 ‘지역의 역사적 풍치 유지 및 향상에 관한 법률(地域における歴史的風致の維持及び向上に関する法律)’과 이의 시행을 위한 지자체별 역사적 풍치유지향상계획과제를 같이하고 있다.

가나자와는 일본 안에서 천년 고도인 교토와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중세·근세·근대를 거치며 도시에 남겨진 문화유산의 높은 역사적·문화유산적 가치를 잘 보존하고 활용·관리하는 대표적 도시로 알려져 있다. 가나자와시는 일본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 아래 2009년 1월에 일본 최초의 역사적 풍치유지향상계획을 수립한 도시이다.* 10년마다 갱신하는 역사적 풍치유지향상계획의 계획 기간에 따라 가나자와시도 2018년에 제2기 가나자와시 역사적 풍치유지향상계획을 수립하여 일본 정부로부터 계획을 인정받았다. 제2기 계획은 2023년 3월 변경 인증을 거치며, 신설 사업으로 ‘나무의 문화도시·가나자와 창출모델 사업’이 추가되었다. 이 과정에서 창출모델 사업은 국토교통성과 사전 협의를 거쳤다.

창출모델 사업은 앞서 소개한 3층 이상 목조건축물에 실시설계비와 목질화 시공비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추진계획에서 나무 문화도시 구

* 일본에는 현재 95개 지자체가 역사적 풍치 유지향상계획을 수립하였다.

역 설정 시 창출모델 사업을 시행하는 오와리초(尾張町)는 추진 중점지역으로 설정되었다. 오와리초는 에도시대 초기부터 형성된 전통적 상업가로이다. 전통적인 중층의 목조건축이 상업가로를 형성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많이 멸실되어 목조건축을 찾기 힘든 지역으로 변하였다. 가나자와시는 제1기 역사적 풍치유지향상계획에서 오와리초 일원의 건축물 높이 제한을 강화하는 경관관리를 실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소통하여 민·관이 모두 만족하는 성과에 이르렀다. 제2기 계획에서는 오와리초 일대의 새로운 목조건축을 통해 역사적 경관을 만드는 실험이 추진될 예정이다.

가나자와시의 추진계획은 나무의 문화도시를 가꾸는 도시계획이자 도시경관을 관리하는 경관계획이며, 동시에 새로운 도심 활력 거점을 조성하는 재생사업이고 역사적 풍치를 향상시키고 관리하기 위한 문화유산 정책이다. 역사적 경관을 만드는 일은 문화재나 문화유산만의 고유한 영역이 아니다. 이를 잘 보여주듯이 가나자와시는 시민의 생업과 생활, 건축과 도시계획과 함께하는 역사도시 만들기를 실천하고 있다. 이런 도전이 가능한 이유는 자구조례를 입법하고 운영하는 지역 시민사회 문화와 더불어, 문화청·국토교통성이 협업할 수 있는 법과 행정, 예산 운용 체계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1 장민영, 박성현, 이명훈. (2015.12.) 지역주체 참여에 의한 사적 소유 역사문화유산의 보전관리체계. 한국도시행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93-112.

2 金沢市. (2009). 金沢市歴史的風致維持向上計画.

3 金沢市. (2023a). 金沢市歴史的風致維持向上計画(第2期).

4 金沢市. (2023b). 金沢市木の文化都市推進計画.

5 金沢市 都市計画課. 木の文化都市を継承・創出する金沢会議 (웹사이트 자료).

6 金沢市 都市計画課. (2022). まちなかでの建築物の木質化を支援します(안내 브로슈어).

7 金沢市 都市計画課. (2024). 木の文化都市金沢の継承と創出に向けて “木”を取り入れたまちづくり(면담 제공 자료).

8 金沢市 歴史都市推進課. (2023). 金沢市歴史的風致維持向上計画平成30年3月26日認定・中間評価(平成30年度～令和4年度).

9 国土交通省. (2006). 金沢市の都市景観施策(웹사이트 자료).

10 西村幸夫. (2016). 金沢の歴史文化保全施策. 建築雑誌 JABS, 131(1683).

11 水野一郎. (2018). 犀川、兼六園は造形の図書館. 北國文華, 第78号(2018冬), 特集: 近代建築の巨匠 谷口吉郎の金沢.

도시 교통 혼잡과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싱가포르의 Next-Gen ERP 2.0 시스템

육승철

파리정치대학 행정학 석사

들어가며

최근 국내, 특히 서울과 수도권 도시에서 교통 혼잡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서울 시내 차량 통행 평균 속도는 2013년 시속 26.4킬로미터에서 2023년 시속 22.9킬로미터로 줄었다. 도시 교통이 혼잡해지고 출퇴근 시간이 늘어나면서 개인의 시간, 연료 등 유무형의 자원이 낭비되고 있으며, 탄소 배출에 따른 지구 온난화와 미세먼지 증가 등 환경 오염과 이를 처리하는 경제적 비용 또한 매년 늘어나고 있다. 도시는 고도화되고 소득이 늘어나며 사람들의 삶이 질이 높아지는 데 반해, 도로의 교통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교통 체증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

싱가포르는 이러한 문제를 예견하고 도시의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1975년부터 120명의 경찰과 공무원들이 직접 도로에서 요금을 받았으나, 1998년 혼잡통행료 징수 자동화 시스템인 ‘Electronic Road Pricing(ERP)’ 시스템을 도입, 도로에 갠트리(Gantry)라고 불리는 터널처럼 생긴 구조물을 설치해 자동차가 갠트리 밑을 통과하면 요금이 자동 부과 되도록 운영해 왔다.

이를 통해 도심의 통행을 31% 감소시켰고, 현재도 교통 체증을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싱가포르는 ‘Next-Gen ERP 2.0’ 프로젝트를 발표, 2025년까지 기존 도로 위에 설치된 갠트리를 없애고, 위성으로 자동차에 부착된 디바이스를 통해 도로의 특정 구간에서 자동차가 지나갈 때 자동으로 통행료가 결제되는 시스템으로 개선하는 중이다.

ERP 시스템 운영과 성과

싱가포르는 1975년부터 ERP 시스템의 전신인 ‘Area Licensing Scheme(ALS)’을 도입해 활용했는데, 육상교통청(Land Transport Authority)의 주도하에 혼잡도에 따라 특정 도로에서 차량 통행료를 부과해

©Vulcan Post



싱가포르 도로에 설치된 ERP 갠트리

출처: BRZE. <https://brze.sg/blog/erp-rates-gantries-and-operating-hours-in-singapore-june-2021/>

왔다. 1998년부터는 도로 위에 갠트리를 설치하여 그 아래를 통과하는 자동차에 자동으로 요금이 부과되는 시스템을 운영해 왔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하이패스 통행 시스템과 비슷하다.

현재 싱가포르 도심에는 98개의 갠트리가 설치되어 있으며, 차량이 혼잡한 곳에 집중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이 시스템은 도로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르게 가격을 징수하며 도로 상황은 평균 속도로 결정된다. 도로마다 목표 속도가 있고 그 속도에 못 미치면 요금이 탄력적으로 올라가도록 설정되어 있다.

요금을 지불하고 싶지 않은 운전자들은 대체 경로를 사용하여 돌아가야 한다. ERP 목표 속도는 일반 도로에서 시속 20~30킬로미터, 고속도로에서 시속 45~65킬로미터이며 이 범위에서 차량 흐름이 원활히 유지되도록 자동으로 요금이 조정된다.

차량이 클수록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며, 30분마다 도로 상황을 파악하여 요금이 변경된다. 혼잡한 시간대별, 도로 종류별로 다르지만 보통 0.5~6싱가포르달러(한화 약 500~6,000원) 사이로 책정된다.

운영 시간은 도로마다 통행이 물리는 시간을 분석하여 다르게 운영되며 보통 도심의 경우 평일과 토요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 간선도로는 평일



ERP 설치 현황

출처: Chng et al.(2019, p.4)

오전 7시부터 9시 30분, 도시 고속도로는 오전 7시부터 9시 30분, 오후 5시 30분에서 8시까지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비용을 부과하지 않는다.

오토바이를 포함해 싱가포르에 등록된 모든 차량은 ERP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결제 박스 IU(In-Vehicle Unit)를 설치해야 하며,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 갠트리를 지날 때 70싱가포르달러(한화 약 7만 원)가 벌금으로 부과된다.

결과적으로 싱가포르 ERP 시스템을 통해 상당한 교통량의 감소 효과를 거뒀으며, 평균적으로 10~30%의 자가용 이용률이 감소하였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등 피크타임에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2만 5,000대 감소하였고, 도로에서 차량의 평균 속도가 20% 증가하였다. 가격 탄력성을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10%의 통행료 인상이 1~4%의 자동차 사용 감소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스럽게 대중교통 이용과 카풀 같은 차량 공유가 증가하였고, 환경적으로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따른 공기질 개선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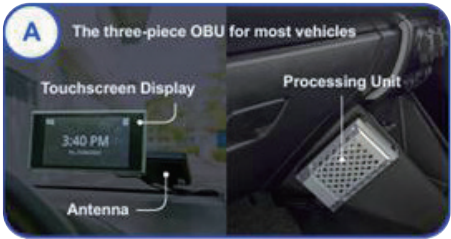


자동차(상)와 오토바이(하)에 설치된 IU
출처: 싱가포르 육상교통청 One Motoring 홈페이지. <https://onemotoring.lta.gov.sg/content/onemotoring/home/driving/ERP/ERP.html>

next-gen ERP 2.0 시스템의 도입

싱가포르는 갠트리 대신 위성을 활용하는 Next-Gen ERP 2.0 시스템으로 전환 중이며, 2025년까지 모든 전환을 완료하려고 하고 있다. ERP 2.0 시스템은 도로 위 갠트리 구조물을 이용할 필요 없이, 오로지 위성 시스템과 차량에 설치된 디바이스를 통해서 요금을 지불하도록 한다.

위성 시스템 활용을 위해 차량과 오토바이 등에는 새로운 디바이스가 설치된다. 이 디바이스(On-Board Unit: OBU)는 터치 디스플레이, 위성항법장치, 안테나, 카드 삽입 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디스플레이를 통해 실시간 교통 통행료, 요금 부과도로, 혼잡도 등 교통정보를 한눈에 보여준다. 또한



자동차(상)와 오토바이(하)에 설치된 새로운 OBU
출처: Jay Tee(2023)

공용 주차장 요금 결제에도 활용된다. 개발자들은 이 디바이스의 공개 소스를 바탕으로 향후 다양한 앱을 만들어 제공할 수 있다. 오토바이에는 작은 디스플레이가 달린 디바이스를 설치하도록 한다.

2023년 11월부터 ERP 2.0 시스템 적용을 위한 OBU 설치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약 1만 3,000대의 버스, 업무용 오토바이 등에 설치되었다. 올해 5월 1일 이후부터 출고되는 신규 차량에는 OBU를 무조건 탑재해야 하며, 2025년까지 싱가포르를 달리는 모든 차량에 설치가 완료될 예정이다. 싱가포르에 등록된 모든 차량은 새로운 디바이스 OBU를 무료로 수령할 수 있다.

새로운 OBU 신청 및 설치 과정

- 1) 정부로부터 OBU 설치 안내 이메일 및 휴대폰 문자 수령
- 2) QR 코드로 OBU 설치 예약
- 연락을 받은 후 2개월 안에 설치 의무
- 3)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 설치를 원하는지 체크

- 4) 근처 지정된 자동차 공인 정비소에서 OBU 설치(디스플레이와 카드 결제 어댑터)
- 5) OBU 터치스크린 기능을 선택하지 않으면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주요 정보 수신



출처: 싱가포르 육상교통청 One Motoring 홈페이지. <https://onemotoring.lta.gov.sg/content/onemotoring/home/driving/ERP/erp-2-0.html>

국내에 던지는 시사점

한국, 특히 서울 도심과 외곽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출퇴근 교통이 매우 혼잡한바,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ERP 시스템의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 도로 혼잡으로 인한 유무형의 낭비를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 감소 등 선진국형 친환경 도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ERP 시스템의 도입이 정치적, 대중적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 자동차를 이용할 때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서 저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더욱 부담이 될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요금 인하, 기타 세금 감면 등을 통해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하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며, 동시에 창의적인 정책으로 보행과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일례로 싱가포르에서는 스마트워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시민들이 보행을 통해 이동한 거리를 계산하여 식료품 쿠폰으로 교환할 수 있는 등 생활 밀착형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보행을 유도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만드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싱가포르를 모델로 ERP 시스템을 도입했던 국가들 또한 처음에는 대중적 반대에 부딪혀 시민들의 정책 수용도가 낮았으나, 시범 도시 선정 및 시범 기간을 거친 후에 대중의 이해도와 수용도가 높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스웨덴 스톡홀름의 경우가 대표적인데, 시범 적용 과정을 거친 후 주민투표를 통해 수용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에 도달하였다. 시범 사업의 추진과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대중의 설득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특히 ERP 시스템 도입을 통해 얻은 세수를 낙후된 지역의 대중교통 인프라 등에 재투자하거나 저소득층을 위한 요금 감면 지원 정책 등을 제시한다면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1 박신원. (2023). 신고된 집회만 '1.5만건'...서울 차량 속도 10년 만에 '최악'. 서울경제. 7월 3일 기사.
- 2 싱가포르 육상교통청 One Motoring 홈페이지. <https://onemotoring.lta.gov.sg/content/onemotoring/home/driving/ERP/ERP.html>, <https://onemotoring.lta.gov.sg/content/onemotoring/home/driving/ERP/erp-2-0.html>
- 3 BRZE, ERP Rates, Gantries and Operating Hours in Singapore (June 2021). <https://brze.sg/blog/erp-rates-gantries-and-operating-hours-in-singapore-june-2021>
- 4 CTCN 홈페이지. Road pricing. <https://www.ctc-n.org/technologies/road-pricing>
- 5 Chng, S., Abraham, C., White, M. P. & Skippon, S. (2019). To drive or not to drive? A qualitative comparison of car ownership and transport experiences in London and Singapore. Transportation Research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s, 2.
- 6 Jay Tee. (2023). Will the new ERP 2.0 On-Board Unit monitor drivers? CarBuyer. <https://carbuyer.com.sg/erp-2-obu-monitor-drivers/>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통한 품격 있는 공간환경의 구축

- 제2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오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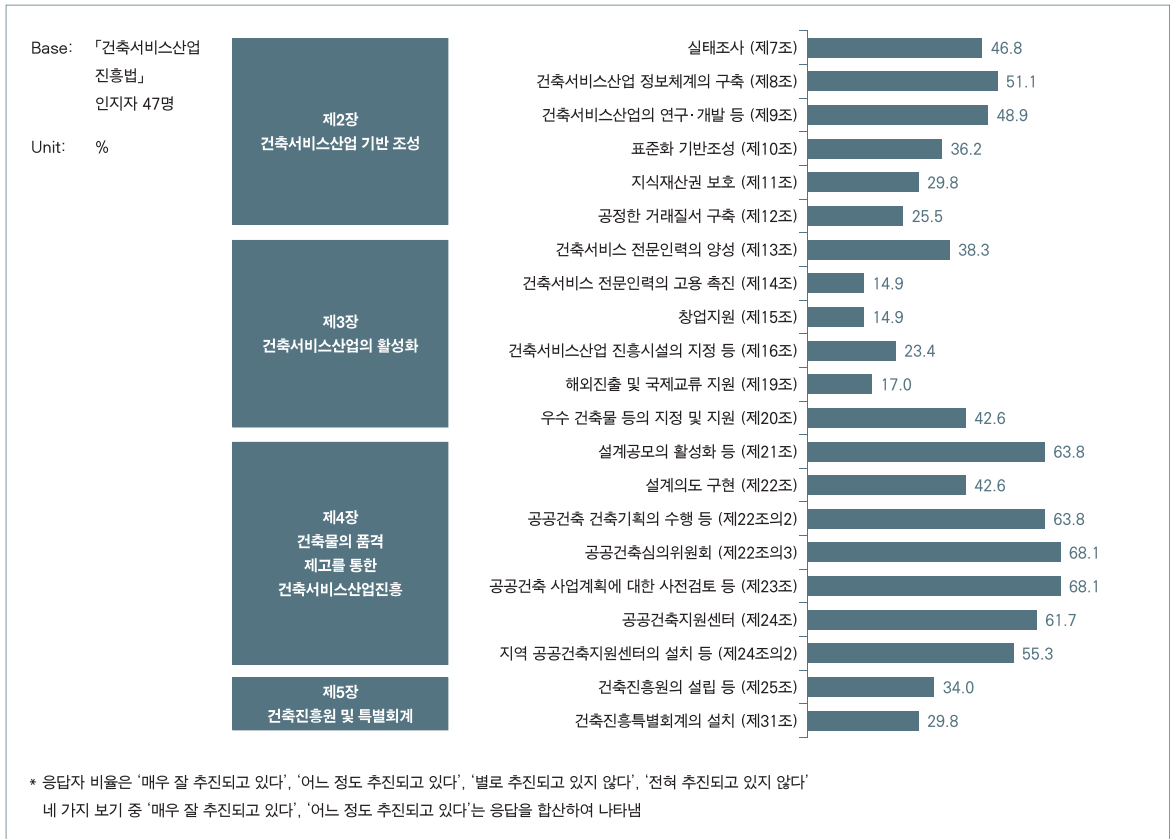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원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 정책 추진 현황과 한계

2013년 건축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위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되었으며, 현재 시행된 지 10년이 되었다. 이를 통하여 공공건축의 기획 업무, 사업계획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등 여러 제도가 신설·개정되었으며, 공공건축의 절차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였다. 2018년에는 ‘제1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지난 5년 동안(2019~2023년) 건축서비스산업의 기반 구축, 시장 정상화,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건축서비스산업이 건축물과 공간환경 조성 등에 관련된 여러 활동을 포함함에도 불구하고 건축 설계를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되었으며, 주로 공공 분야 건축사업의 관리와 품질 향상에 집중되었다. 이는 2020년과 2023년에 건축공간연구원이 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건축서비스산업 인식조사 결과에 나타나듯이 공공건축 관련 제도와 정책이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듯 편중된 정책 추진으로 인하여 창업 지원, 인력양성, 해외진출 지원, 공정거래질서 구축 등 건축서비스산업 발전에 필요한 일부 정책의 성과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다양한 수요와 산업 여건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였고,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현안이 남아 있다. 발주 및 계약제도, 대가 기준, 업무 범위 등과 같이 건축서비스산업 기반 정상화에 필요한 숙제가 남아 있고, 산업을 이루는 구성 요소인 인력과 사업체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이 부족해 지속적인 산업 성장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건축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가치를 높이고 균형 잡힌 산업 육성을 위해 다각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근거한 제도와 정책의 추진 성과에 대한 산업계 평가(2023년)

출처: 김상호 외(2023, p.124)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정책의 추진 방향

그간의 성과를 미루어볼 때 앞으로는 건축서비스산업 기반과 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공 분야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의 건축서비스산업 구조와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발주 및 계약제도, 대가 기준 등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수요를 반영하거나 성과가 미진한 정책도 보완이 필요하다. 즉 새로운 기반을 형성하기보다 현재 건축서비스산업 기반의 정상화와 고도화에 주력해야 할 시점이다.

더불어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도모하는 정책도 요구된다. 산업 성장동

력을 확보하고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산업 기반을 보강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분야와의 융·복합, 기술 개발 및 접목, 창업 및 해외 진출 등을 통하여 산업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등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건축서비스산업이 건설업의 일부 산업으로 인식되면서 그동안 산업적 위상 제고와 산업 활동의 기반 구축, 시장 확대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지금부터는 건축서비스산업의 내실을 다지고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지속적인 산업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산업적 가치를 확산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해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정책의 추진 동향

해외에서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해 공공 분야의 기반 구축과 고도화를 위한 정책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해외 건축산업 육성·지원제도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등 해외 주요 국가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정책은 사회 이슈 대응과 공공 및 민간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진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김은희 외, 2021).

주요 국가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정책은 기술 발전, 기후 및 환경 문제 등 산업의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더불어 공공 및 민간 분야에 대한 다각적인 제도 기반과 협업체계 구축, 공정한 경쟁체계 마련, 인력 역량 강화 등 건축서비스산업 기반의 내실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 중이다. 이는 산업 종사자의 권리 보호, 역량 강화와 동시에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현안을 해소함으로써 안정적인 산업 기반 마련을 지원한다.

이와 같이 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한 산업적 측면에서의 선제적인 대응, 인적 자원의 역량 강화 정책 등은 산업 성장을 도모하며, 공공 및 민간 분야의 종합적인 정책과 협업은 우리를 둘러싼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수준을 향상하고 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이끌 수 있다.

제2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과정과 주요 내용

제1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이 종료되고 향후 5년 동안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에 필요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제2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제2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은 네 단계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로 그간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정책

의 추진 성과를 검토하고 정책적·환경적 변화와 동향을 분석하여 건축서비스산업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문제점으로는 ①건축서비스산업 시장 특성에 맞는 생활밀착형 건축산업 성장 기반의 취약성, ②수요 변화 및 기술 발전에 대한 건축서비스산업 시장 경쟁력의 미흡, ③수요자 요구에 대응하는 신뢰할 만한 산업정보의 부족이 확인되었다.

다음은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총괄 및 분과위원회를 운영하여 기본계획의 수립 방향을 설정하였다. 도출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①건축서비스산업 구조 합리화, ②건축서비스산업 시장 고도화, ③건축서비스산업 정보 활용 기반 확충의 수립 방향이 설정되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위원회 운영과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기본계획의 추진 전략과 전략별 실천과제를 도출하고 내용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실행방안과 성과 관리 방안을 도출하여 제2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제2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은 ‘건축서비스산업 선진화를 통한 품격 있는 공간환경 구축’을 비전으로 ①산업활동 기반 확충을 통한 건축서비스 창의성 제고, ②기술·기업 혁신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 ③건축서비스 역량 강화를 통한 사용자 만족도 제고를 목표로 한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3개의 추진전략과 7개의 실천과제가 구성되어 있으며, 3개의 추진전략은 앞서 도출된 계획의 수립 방향과 동일하고 각각의 실천과제는 49개의 세부 실천과제로 구성된다.

제2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추진과제는 건축서비스산업 구조 합리화를 위하여 불공정한 경쟁체제의 개선, 관련 법·제도의 정비, 건축사업 프로세스의 내실화 및 건축물의 품질 향상과 관리 등 건축서비스산업 시장 및 산업 활동 과정에서

비전	건축서비스산업 선진화를 통한 품격 있는 공간환경 구축		
목표	산업활동 기반 확충을 통한 건축서비스 창의성 제고 기술·기업 혁신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 건축서비스 역량 강화를 통한 사용자 만족도 제고		
추진전략	1. 건축서비스산업 구조 합리화	2. 건축서비스산업 시장 고도화	3. 건축서비스산업 정보 활용 기반 확충

제2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비전 및 전략
출처: 국토교통부(2023)

건축서비스산업 시장 고도화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기술 수용 및 활용 기반 조성, 스타트업 및 혁신·강소기업과 소형 사업체 지원 강화, 우수 사업체 발굴 및 육성 등의 과제가 추진된다.

마지막으로 건축서비스산업 정보 활용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통계 개발, 정보 거버넌스 구축, 수요에 맞는 정보서비스의 확대와 활용 지원 등과 같이 정보서비스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디지털 정보를 기반으로 증가하는 산업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가 추진될 예정이다.

49개의 세부 실천과제는 법·제도의 제·개정, R&D 및 시범사업, 교육·홍보 등의 추진체계를 기반으로 시행된다. 특히 매년 시행계획의 수립을 통해 추진 동력을 확보하게 된다.

제2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추진전략별 추진과제

추진전략	1.건축서비스산업 구조 합리화	2.건축서비스산업 시장 고도화	3.건축서비스산업 정보 활용 기반 확충
추진과제	1.1 건축서비스산업 구조 개선 1) 공정한 경쟁을 위한 기반 구축 2) 건축서비스산업 법령체계 정비 1.2 건축사업 품질관리체계 강화 1) 건축사업 프로세스 관리 내실화 2) 건축사업 안전·품질관리 강화	2.1 건축서비스산업 스마트화 1) 스마트 건축서비스 기술개발 및 활용 기반 마련 2) 건축 부문 BIM 활용 확대 방안 마련 2.2 강소기업 육성 및 혁신 지원 1) 새로운 건축서비스 스타트업 육성 지원 2) 혁신·강소·첨두기업 지원체계 마련 2.3 소형 사업체 역량 강화 1) 소형 사업체 및 인력 역량 강화 2) 우수 사업체 발굴 및 육성 지원	3.1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 구축 1) 건축서비스산업 정보 거버넌스 구축 2) 건축서비스산업 통계 개발·작성 3.2 맞춤형 정보활용 서비스 확대 1) 기술 기반 건축서비스산업 정보 활용 지원 2) 수요자 대응형 정보 서비스 확대

출처: 국토교통부(2023)

제2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은 1차 기본계획에 비해 ‘산업적 관점’에서 활동 기반의 내실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정책을 담고 있다. 이는 산업 여건 변화에 대한 대응, 사업체 및 인력의 역량 강화 등을 기반으로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건축물 및 공간환경 품질의 향상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앞으로 5년 동안 새롭게 시작하는 제2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이 내실 있게 추진되어 품격 있는 공간환경이 구축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1 국토교통부. (2019). 제1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 2 국토교통부. (2023). 제2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 3 김상호, 김은희, 조시은, 오민정, 방홍순. (2023). 건축서비스산업 동향과 이슈 2023. 건축공간연구원.
- 4 김은희, 김상호, 조시은, 오민정, 방홍순, 전소영. (2023). 제2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관련 연구. 국토교통부.
- 5 김은희, 조시은, 유제연, 김효정. (2021). 해외 주요국의 건축산업 육성·지원제도 비교분석 연구. 국가건축정책위원회.
- 6 엄철호, 서수정, 이여경, 김효정, 박혜련. (2019). 제1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국토교통부.
- 7 이여경, 송혜진. (2020). 건축서비스산업 동향과 이슈 2020. 건축공간연구원.

시대를 반영한 서울한옥의 진화

- 서울한옥 4.0 재창조 계획

안인향

서울시 한옥정책과
정책담당 주무관

4.0 버전의 새로운 정책 전환 필요성 대두

서울시 한옥정책은 지난 2000년부터 한옥을 보전하고 진흥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 오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도시한옥이 약 1,000동 밀집한 북촌의 ‘북촌가꾸기사업’을 시작으로 한옥이 없었던 뉴타운정비구역 내 은평한옥마을 신규 조성까지 지난 24년 동안 한옥(마을), 비한옥 건축자산에 대한 보전·지원 및 활용·진흥 정책을 확대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서울을 더욱 매력 있게 하는 서울다움(Identity)의 집약체인 서울한옥(마을)은 살아보고 싶은 대상이 되었고, 지속적인 성과를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아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문화유산상(2009년), 아시아도시경관상(2022년)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21세기 한옥의 진화로 현대한옥, 한옥 같은 집 등 다양한 한옥과 현대건축이 등장하면서 디자인 규제에 대한 비판의식이 존재해 왔고, 보다 편리하고 창의적인 현대한옥이 지어질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등 정책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자연과 어우러진 한옥마을 조성 과 케이팝(K-pop), 케이푸드(K-food), 케이드라마(K-drama) 등 한국문화에 대한 국제적 관심 증가로 한옥마을과 우리 주거문화 수요(needs)도 증가하고 있다.

서울한옥 4.0 정책 발표, 3대 실천과제

2023년 2월 서울특별시장은 한옥에 새로움을 담아 서울을 더욱 트렌디하고 경쟁력 있게 하는 향후 10년간의 한옥정책 비전, 실천과제, 실행사업을 담은 ‘서울한옥 4.0 재창조 계획’을 발표하였다. 기존과의 차별점은 한옥과 주거문화의 가치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욕구를 자극하는 인센티브 기능을 하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이다. 서울한옥 4.0의 취지는 앞으

로 이어지는 서울의 한옥들이 전통에만 머무르지 않고 보다 편리하게 창의적으로 지을 수 있도록 디자인 규제를 최소화하고, 한옥과 한옥의 디자인 요소를 재해석한 현대건축물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3대 실천과제가 ‘일상 속 한옥’, ‘새로운 한옥’, ‘글로벌 한옥’이다.

‘일상 속 한옥’과 관련해서는 도시경관을 매력 있고 삶을 풍요롭게 할 자연 속 한옥마을을 새로이 조성하고자 지난 2023년 9월에 암사동·불광동·수유동·도봉동·제기동 등을 1차 선정하여 관련 계획을 수립 중이다. ‘새로운 한옥’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현대한옥을 다양하고 편리하게, 가치 있고 개성 있게 지을 수 있도록 서울한옥의 개념을 확장하고, 심의기준을 완화하는 것과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경관 특성별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2023년 5월 심의기준을 개정하고(73개 중 34개 완화, 12개 폐지) 한옥건축양식 심의기준을 신설하여 지금까지 지원받기 어려웠던 한옥양식을 한옥건축양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지원 중이다. ‘글로벌

별 한옥’에 대해서는 우리 주거문화의 매력 확산을 위해 K-문화를 브랜드화하고 서울 공공한옥 라운지를 북촌과 서촌에 개관하여 국내외 방문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서울한옥 4.0 실행사업

일상 속 한옥: 자연 속 한옥마을 신규 조성

서울시 곳곳에 자연과 어우러진 한옥마을을 향후 10년간 10개소 이상 조성하는 사업이 진행된다. 서울시에는 12개의 한옥마을(종로구 6개소, 성북구 5개소, 은평구 1개소)이 있으며, 2009년부터 추진된 은평한옥마을(약 156필지) 이후 신규 조성 사례가 아직 없다. 삶을 풍요롭게 할 서울형 한옥마을 조성 대상지 발굴을 위해 자치구 공모를 통해 약 20개소가 신청하여 2023년 9월 1차 대상 지역을 선정하였다.

한옥마을 신규 대상지로 선정되어 관련 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은 암사동·도봉동·수유동·불광동·제기동 등 5개 지역이다. 사업 유형은 신규택지 조성형과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 수립형으로 나뉜다. 암사동 등 신규택지형 4개 지역은 도시개발 관련 계획 수립에 착수하였고, 제기동 일대는 지난 3월부터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마련에 들어가 2025년까지 관련 절차 이행을 통해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대상지는 개발 여건 등의 한계로 훼손이 심한 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에 적합한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개발사업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기동 일대는 1960년대 한옥이 밀집한 전통시장 인접 지역으로 상업·창고·거주용 한옥이 약 260동 혼재돼 있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수선 가이드라인과 활성화형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한옥 4.0 재창조계획(2023~2032년)의 3대 실천과제



신규 조성 한옥마을 1차 대상지(2024년 5월 기준)				
구분	유형	대지 위치	면적(m2)	비고
1	신규 택지	강동구 암사동 252~8번지 일대	70,244	도시개발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2024~2026년)
2		도봉구 방학동 543~2번지 일대	21,146	
3		도봉구 도봉동 산96~4번지 일대	35,859	
4		강북구 수유동 산123~13번지 일대	19,840	
5		은평구 불광동 35번지 일대	22,623	
6	지구 단위	동대문구 제기동 988번지 일대	98,000	전통시장과 연계한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2024~2025년)

새로운 한옥: 디자인 확대 지원

최근 한옥건축은 기존 전통한옥과 도시한옥 이외에도 현대적인 재료와 기술을 사용한 현대한옥과 한옥을 재해석한 한옥 디자인 건축물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한옥의 창의적인 디자인에 대한 기반 조성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비용 지원 심의제도를 대폭 개선하였으며, 한옥실대조사 및 우수한옥인증을 개선하고, 심포지엄과 교육영상을 통해 제도 홍보 등을 추진 중이다.

먼저 정책 대상인 ‘서울한옥’의 개념을 현대적 재료와 기술이 사용된 현대한옥과 한옥을 재해석한 한옥 디자인 건축물까지 확장하였고, 한옥건축양식은 5개 필수항목만 지키면 지원금의 50%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023년 5월과 10월 각각 한옥 비용지원 심의기준을 개정 및 제정하여 심의기준 73개 중 34개를 완화하고 12개를 폐지하였다. 주요 완화 항목은 구조, 창호, 기와, 처마길이, 마당상부 구조물 설치 등이다. 창의적 한옥 디자인 기반을 강화하고 이와 동시

에 서울한옥의 가치 역시 전승·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최대 20% 이내에서 서울 한옥의장과 구법·경관·구조·전통기술 전승을 지원하고, 한옥스테이 활성화(5년 이상 유지 시 수선비용 인센티브 10% 제공 등)도 추진해 전통과 현대가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별 특성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해 지역별로 개성 있는 경관 유지와 관리가 가능하도록 순차적으로 재정비하는 한편 서울시 한옥 약 8,983동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등록한옥*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방문 안내, 방문 컨설팅 지원, 홍보 등도 추진 중이다.

그리고 새롭게 개선된 제도와 변화에 대한 정책 공감과 교류,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2023년 10월에는 ‘동아시아 전통건축의 미래’를 주제로 한·중·일 건축가가 모여 대도시 내 전통목조건축이 가진 당면과제와 창의적인 사례를 함께 공유하



2023 한옥정책 심포지엄(2023.10.) 참석자들
출처: 서울시 제공

* ‘서울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16조)’에 의거 소유자가 신청, 심의를 거쳐 등록한 한옥으로 정책지원 대상임

고 토론하는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어 올해 4월에는 ‘서울한옥, 새로운 도전과 실험’을 주제로 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동시대의 당면과제와 고민들, 지속가능한 미래건축으로서 한옥이 지닌 가치와 잠재력, 혁신적 디자인 등을 공유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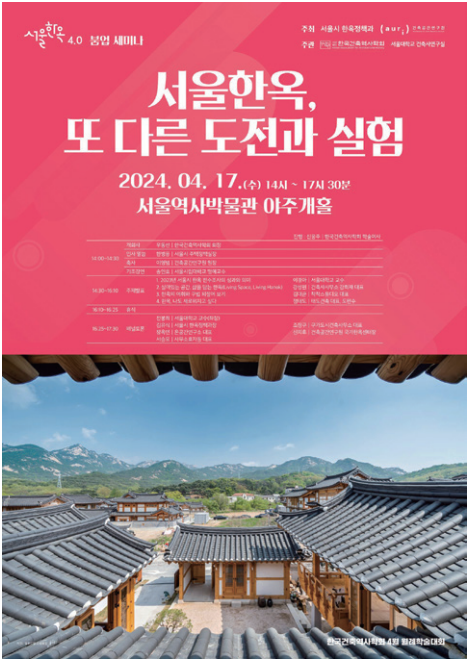
한옥건축 심포지엄 및 세미나 프로그램은 주제와 관련된 전문가들의 기조강연을 비롯해 주제강연과 패널토론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현장과 동시에 공유할 수 있도록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되었다. 이 외에도 서울시는 좋은 한옥디자인을 발굴하고 전파하기 위해 서울우수한옥 인증제를 시행 중으로, 2023년에는 전통미를 중시한 한옥 분야 5개소와 전통과 현대적 요소를 결합한 한옥건축양식 분야 3개소, 한옥디자인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한옥디자인 건축물 분야 1개소 등 모두 9개소가 선정되었다. 이 중 한옥건축양식 분야에 선정된 한문화체험관은 시민공감상을 받기도 하였다. 현대한옥 및 한옥건축양식 등은 세미나 사례로 건축가와 시민들에게 소개되었으며, 한옥건축양식에 대한 영상자료와 서울우수한옥 사진자료집 등을 연계하여 배포·활용 중이다.

글로벌 한옥: 우리 주거문화 매력 확산

서울한옥 4.0 버전의 세 번째 실천과제인 ‘글로벌 한옥’을 실천하기 위해 서울한옥 주거문화(K-하우스, K-리빙)의 가치 및 매력 확산을 위한 공공한옥라운지 조성·운영, 대시민 홍보사업을 추진 중이다. 실행사업으로는 먼저 북촌·서촌 서울 공공한옥에 라운지를 조성해 2023년 10월부터 개관하여 운영 중이며, 서울한옥 브랜드 개발을 비롯해 ‘2023 서울한옥위크’ 개최와 파빌리온 전시 등을 진행하였다.



2023 한옥정책 심포지엄(2023.10.) 포스터
출처: 서울한옥포털, <https://hanok.seoul.go.kr/front/index.do>



‘서울한옥, 새로운 도전과 실험’ 세미나(2024.4.) 포스터
출처: 서울한옥포털, <https://hanok.seoul.go.kr/front/index.do>



서울한옥위크 파빌리온 전시 '짓다'
출처: 서울시(2023a)



제8회 서울우수한옥 한옥건축양식 부문 수상작인 한문화체험관
출처: 서울시 제공



북촌라운지
출처: 서울시(2023b)



서촌라운지
출처: 서울시(2023b)

이러한 서울공공 라운지와 연계하여 K-리빙과 융합된 매력적인 한옥스타일, 디자인, 스폿, 굿즈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서울한옥의 매력과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24년 서울한옥 4.0 재창조 붐업(boom-up) 추진

서울한옥 4.0 발표 후 한옥마을 신규 조성 대상지 1차 선정과 한옥건축양식 심의기준 제·개정 등 제도 개선, 한옥조사, 심포지엄, 공공한옥 라운지 개관 등 일차적인 정책 기반을 조성하였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서울한옥 4.0 재창조 붐업(boom-up)을 본격 추진 중이다.

도시경관과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일상 속 한옥’을 위한 한옥마을 조성 관련 계획을 지역별로 각각 착수하되 기초조사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세밀한 검토 과정을 거쳐 2025년까지 수립할 예정이며, 향후 2차 대상지 발굴을 위한 선정계획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누구나 가보고 싶은, 살고 싶은 한옥을 서울시민들이 일상에서 만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다.

2023년 한옥 비용지원 심의기준 제·개정 이후 달라진 한옥 지원제도에 대한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여 홍보물 제작 및 전수 발송 등 안내 홍보와 홍보 마케팅 리서치를 시행하였고, 이 결과 등록한옥 동수가 최근 5년 중 최대치를 나타냈다. 2024년도에도 한옥 및 한옥건축양식 지원 확대에 대한 교육 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관련 종사자 및 시민의 이해도를 높여 비용지원 및 한옥등록 활성화 등 보다 편리하고 창의적인 현대한옥 건축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 외에도 서울한옥 주거문화(K-리빙) 확산 및 브랜드화를 위해 서울한옥 굿즈를 개발 중이며

핫플레이스를 선정하여 홍보하고 공공한옥 라운지에서는 이러한 주거문화 교류확산을 위한 전시 행사 팝업 스토어 등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그뿐 아니라 서울한옥 붐업(boom-up)을 위해 효과적인 공감자료로 다양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일부는 기획 중이다. 시민을 위한 한옥정책, 장인에게 배우는 한옥 고치기, 사례로 알아보는 新(한옥 4.0) 한옥(건축)양식 강의 영상, 서울우수한옥 홍보영상 등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해 시민에게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홍보 이외에 정책 교류, 시민 공감과 소통의 자리로 한옥마을 심포지엄과 세미나, 주한 외국대사관과의 협력 전시 등 지속가능한 한옥정책 발전에 대한 토론과 공유의 자리도 계속 마련할 예정이다.

이로써 서울한옥 4.0 재창조 계획의 효과적인 실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관련 전문가들과 시민들 그리고 관련 단체와의 협력으로 서울을 보다 매력 있게, 서울시민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 한옥 등 한옥건축양식 지원금액(2024년) (단위: 백만 원)

구분			한옥		한옥건축양식	
			한옥보전 구역 내	한옥보전 구역 외	한옥보전 구역 내	한옥보전 구역 외
신축	계		150	100	75	50
	외부	보조	120	80	60	40
	내부	용자	30	20	15	10
전면수선	계		180	120	90	60
	외관	보조	90	60	45	30
		용자	30	20	15	10
부분수선	내부	용자	60	40	30	20
	보조		20		10	
	용자		10		5	

참고문헌

- 1 서울시. (2023a). 서울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한옥 파빌리온 '짓다'〉 선보여. 9월 1일 보도자료.
- 2 서울시. (2023b). '지역 안내부터 한옥 리빙 체험까지' 서울시, 북·서촌에 '공공한옥 라운지'. 11월 9일 보도자료.
- 3 서울한옥포털. <https://hanok.seoul.go.kr/front/index.do>

독일, 건물형 태양광 발전 지원 강화

문기덕
베를린 환경부 기후보호국
건물, 도시계획 담당관

기후보호에 속도를 가하는 정책

지구 온도상승을 가능한 한 1.5℃ 이하로 제한하는 파리 기후협정을 기반으로 독일 주도의 G7 국가들은 2035년까지 전력 공급을 ‘거의 제로(Nearly Zero)’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다. 2023년에 개정된 독일 재생에너지법(EEG)은 2030년까지 전력 소비의 8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을 중간목표로 확정했으며, 이는 태양광 부문에서 2026년부터 매년 22기가와트(GW)가 급속도로 추가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2030년까지 독일 정부가 달성해야 하는 태양광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재생에너지법은 도시 외 지역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확장하면서도, 임야·농지 등 식량안보 또는 자연보호에 배치될 만한 발전은 면밀하게 대응한다는 내용을 함께 담고 있다. 그러나 정작 에너지 소비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는 도시지역에서는 건물이나 방음벽 등에 최소 50%의 태양광 시설 설치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까다로운 행정 절차와 운용상의 불분명한 법적 문제를 때문에 발전 용량의 확장에 어려움이 있었다.

독일 연방의회가 4월 26일 통과시킨 ‘태양광 지원 패키지’는 금전적 지원보다는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한 정책으로, 도시 내 태양광 발전 잠재력을 대폭 확장할 수 있는 혁신적인 출발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과 더불어 타 재생에너지, 전력 저장장치와 전력망, 그리고 공동·임대주택의 운용, 분배모델에 대한 중요한 개선 사항들을 포함한다. 하지만 자가주택과는 달리 세입자들이 주로 거주하는 임대주택 등에 태양광 발전을 도입하는 일에는 한계가 있었다. 설치, 관



재생에너지법에 따른 태양광 지원 대상
출처: Dünzen et al.(2024, p.7). https://www.oeko.de/fileadmin/oekodoc/PVFFA_Ueberblicksstudie.pdf

리, 배전 등에 있어 시행 및 비용 부담의 주체가 불명확하고, 안전 문제의 책임소재 확인 절차가 복잡하여 태양광 발전 참여가 어렵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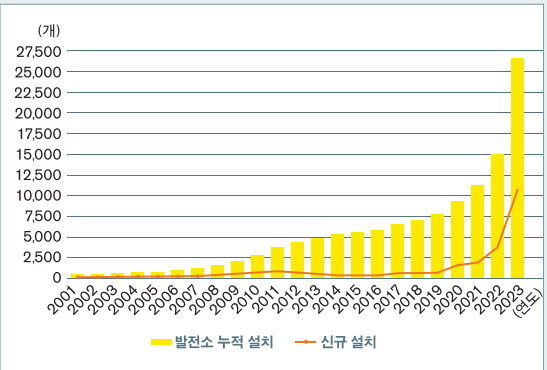
베를린 세입자 태양광 발전모델

베를린주는 대부분이 도시지역으로 재생에너지 생산에 활용할 수 있는 토지가 협소한 데다가, 전체 주택의 84%나 되는 165만 호(Wohnraumversorgung Berlin, 2021)가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어 선도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였다. 이에 베를린주는 2020년 ‘솔라시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태양광 설치를 자문하고 독려하는 ‘솔라센터(SolarZentrum)’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그동안 시작이 쉽지 않았던 세입자 태양광 발전 운용에 모델을 제시하거나, 건축문화재와 건축자산에 관련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담당 허가관청(도시계획, 건축허가, 문화재 유산, 소방 등)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난 2년간 베를린 주의 건물형 태양광 발전소는 크게 증가하였다.

이번 태양광 지원 패키지의 통과로 독일의 건물형 태양광 발전이 더욱 공격적으로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베를린 주정부는 2035년까지 베를린 전기생산량의 25%를 태양광 발전으로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베를린 세입자 태양광 발전 참여모델
출처: 베를린주 홈페이지. <https://www.berlin.de/ba-neukoelln/politik-und-verwaltung/aemter/stadtentwicklungsamt/stadtplanung/artikel.1310911.php> 참고하여 번역.



베를린 건물형 태양광 발전소 설치 현황
출처: SolarZentrum(2024). <https://www.berlin.de/solarcity/solarcity-berlin/was-ist-der-masterplan-und-wo-stehen-wir/monitoring/>

참고문헌

- 독일 경제기후보호부(BMWK). (2024). Bundestag und Bundesrat beschließen Solarpaket I. <https://www.bmwk.de/Redaktion/DE/Pressemitteilungen/2024/04/20240426-bundestag-bundesrat-solarpaket-i.html>
- 베를린 솔라센터(SolarZentrum) 홈페이지. <https://www.berlin.de/solarcity/solarzentrum/>
- 베를린주 홈페이지. Mieterstrom. <https://www.berlin.de/ba-neukoelln/politik-und-verwaltung/aemter/stadtentwicklungsamt/stadtplanung/artikel.1310911.php>
- Dünzen, K., Krieger, S. & Ritter, D. (2024). Photovoltaik-Freiflächenanlagen in Deutschland. Öko-Institut e.V. https://www.oeko.de/fileadmin/oekodoc/PVFFA_Ueberblicksstudie.pdf
- Senatsverwaltung für Wirtschaft, Energie und Betriebe. (2024.5.8.) Berlin startet Informationskampagne: „Solar zahlt sich aus“. <https://www.berlin.de/sen/web/presse/pressemitteilungen/2024/pressemitteilung.1444823.php>
- SolarZentrum. (2024). Monitoringbericht 2023. <https://www.berlin.de/solarcity/solarcity-berlin/was-ist-der-masterplan-und-wo-stehen-wir/monitoring/>
- Wohnraumversorgung Berlin. (2021). Ausgewählte Kennzahlen der landeseigenen Wohnungsunternehmen. https://www.stadtentwicklung.berlin.de/wohnen/wohnraumversorgung/download/WVB_Schulungsmaterial_2020-Kennzahlen.pdf

프랑스 문화부, 국가유산 보존사업 추진 및 대상 건축물 공개

<https://www.culture.gouv.fr/en/press/press-releases/national-collection-for-religious-heritage-rachida-dati-minister-of-culture-unveils-the-list-of-the-first-100-buildings-that-will-benefit-from-t>
https://strapi-upload.cdn.fondation-patrimoine.org/DP_Annonce_des_100_premiers_edifices_beneficiaires_de_la_collecte_nationale_pour_le_patrimoine_religieux_Fondation_du_patrimoine_12b2f54e2a.pdf?_ga=2.88119067.1417579492.1714140984-1202579312.1714140984

프랑스 문화부는 지난 2023년 9월, 유럽 문화유산의 날을 맞아 종교유산 을 위한 국가유산 보존사업의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올해 4월 프랑스 문화부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건축물 100개를 최초로 공개하였다.

프랑스 전역에 걸쳐 3,000~5,000개에 달하는 종교유산이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유지보수 등을 못하고 있으며, 소규모 도시의 경우 필요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사업은 지역문화국(The Regional Directorates of Cultural Affairs)과 연계한 The Heritage Foundation이 사업대상지 선정을 맡았으며, 인구수 1만 명 미만, 해외영토의 경우 2만 명 미만인 소규모 도시를 대상으로 종교와 관계없이 4년 동안 1,000개의 건축물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건축물 중 50%는 인구수 1,000명 미만의 소규모 도시에 위치하는데, 60%는 역사 기념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55%는 방치되어 있다. 이러한 건축물 보존을 위해 총 1,500만 유로를 모금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만 2,000명이 230만 유로를 기부하였다. 특히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복원 작업과 마찬가지로 기부자에 대해 최대 1,000유로까지 75%에 달하는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Fondation du patrimoine - MyPhotoAgency - Ivan Portal Chaignet

©Fondation du patrimoine - MyPhotoAgency - Renaud Chaignet

국가유산 보존사업 대상 건축물 목록

출처: 프랑스 문화부 홈페이지 및 The Heritage Foundation 홈페이지. https://strapi-upload.cdn.fondation-patrimoine.org/DP_Annonce_des_100_premiers_edifices_beneficiaires_de_la_collecte_nationale_pour_le_patrimoine_religieux_Fondation_du_patrimoine_12b2f54e2a.pdf?_ga=2.88119067.1417579492.1714140984-1202579312.1714140984(검색일: 2024.5.23.)

소외 지역에 야외 공공공간 우선 공급하는 ‘Outdoors for All Act’ 추진

<https://www.asla.org/land/LandArticle.aspx?id=65324>

지난 4월 미국 하원에서 소외 지역의 야외 공공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Outdoors for All Act’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는 미국 국민들이 공공의 토지와 수역 공간에서 다양한 야외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Expanding Public Lands Outdoor Recreation Experiences Act(EXPLORE Act)’의 패키지 법으로 함께 입법 추진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미국 국립공원관리공단(National Park Service)에서 운영 중인 ‘Outdoor Recreation Legacy Partnership Program’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공원 신규 조성 ▲기존 시설 개보수 ▲야외 교육, 공공부지 자원봉사를 지원하는 인프라 확충에 투자하게 된다. 그리고 이때 ▲소외된 커뮤니티 내 야외공간 확충 ▲지역사회 청소년 역량 강화 ▲공원, 야외활동에 대한 접근성 강화와 관련된 프로젝트에 우선 투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법안의 통과를 강력히 지지하고 있는 미국조경가협회(American Society of Landscape Architects: ASLA)는 “야외공간에서 시간을 더 보낼수록 삶의 질(well-being) 또한 높아진다는 것은 이미 연구로 증명된 사실”이라고 설명하면서, “전국 지역사회에 따뜻하고 역동적이며 안전한 야외공간을 만드는 데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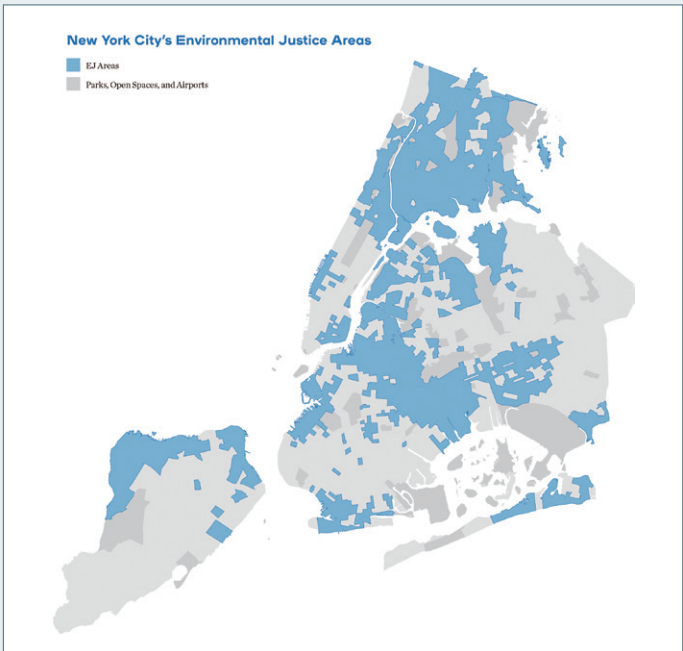
출처: shutterstock

뉴욕, 도시 내
환경 불평등 평가한
연구결과 발표

<https://archinect.com/news/article/150423413/new-york-releases-city-s-first-study-on-environmental-justice>
<https://climate.cityofnewyork.us/ejnyc-report/>

뉴욕 시의회는 2017년 도시 내 환경 불평등을 평가하고 환경 정의(Environment Justice)*를 의사결정 구조에 통합시키는 계획을 개발하도록 한 지방법 60호와 64호를 채택하며 ‘Environment Justice NYC(EJNYC)’ 이니셔티브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오염된 공기와 물, 유해물질, 폭염과 홍수, 안전한 주거지 등 다양한 요소에 대한 환경 위험을 분석한 보고서 <EJNYC: A Study of Environmental Justice Issues in New York City>를 발간하였다.

보고서는 뉴욕 시민들에게 도시 내 환경 불평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연구결과를 제공하며, 환경 정의의 발전 및 형평성을 고려한 계획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구, 사회 등 45개 지표를 기반으로 불이익 지역 사회(DAC) 지정을 통해 도시 내 환경 정의 지역**으로 구분하는데, 조사 결과 뉴욕시 전체 면적의 44%가 환경 정의 지역에 해당하며 뉴욕시 인구의 49%를 포함하고 있다. 이 중 저소득층, 유색인종 등이 거주하는 취약 지역의 경우 발전소, 폐기물 처리 시설, 고속도로 등 오염원 노출을 일으키는 기반 시설로 인해 건강 격차를 나타내며, 공원 등 환경적 이점에 대한 투자 중단을 경험한 바 있다고 밝혀졌다. 이외에도 보고서는 사용자들에게 인근 지역의 환경 문제를 시각화한 매핑도구를 함께 제공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NYS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isadvantaged Communities Criteria, 2023

* 인종, 장애, 연령 또는 사회경제적 배경에 관계 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하며 유해한 환경 조건이 없는 지역사회에서 살고, 일하고, 놀 권리가 있다는 원칙

** 기존 사회적, 역사적 불평등 및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경험한 지역

뉴욕시 환경 정의 지역
출처: 뉴욕시 기후, 환경 정의 홈페이지.<https://climate.cityofnewyork.us/ejnyc-report/>
(검색일: 2024.5.23.)

시드니, 공동주택에서
지속가능성 높이기 위한
가이드 3종 발표

<https://news.cityofsydney.nsw.gov.au/articles/energy-water-waste-3-handly-guides-for-apartment-buildings>

시드니시가 공동주택(apartments)에서 탄소 배출과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솔루션을 담은 가이드 3종을 발표하였다.

시에 따르면 시드니 지역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의 대부분이 건물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시드니 주민의 8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시는 최근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이점을 고려하여 개인의 자산(부동산)을 개선하고자 하는 주택 소유주와 관리자가 늘고 있다면서, 저비용 또는 무비용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하여 가이드로 발간하였다고 밝혔다. 가이드 개발을 위해 269개 공동주택 블록과 협력하였는데, 각각의 가이드에는 제안된 솔루션을 통해 에너지와 탄소 배출, 관련 비용을 줄이는 데 성공한 공동주택의 실제 사례가 소개되어 있다.

가이드는 에너지(energy), 수도(water), 폐기물(waste) 3종으로 구분된다. 에너지 가이드는 에너지 실행 계획 수립 방법과 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평가하는 방법, 태양열 시스템 설치 등을 담고 있다. 수도 가이드는 공동주택에서 물 사용량과 관련 성능을 측정·추적·절약하는 방법을 안내하며, 물 낭비 원인을 찾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시드니수도공사(Sydney Water)의 컨설팅 사업인 ‘WaterFix Strata’ 프로그램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폐기물 가이드는 주민들의 분리수거에 대한 인식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사이니지 활용법과 공간 조성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가이드에 따르면 사이니지를 명확히 하는 것만으로도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14%까지 높일 수 있다. 더불어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다양한 수거 서비스도 소개하고 있다.



시드니시의 에너지, 폐기물, 수도 가이드
출처: 시드니시 홈페이지. <https://www.cityofsydney.nsw.gov.au/guides/waste-guide-apartment-buildings>(검색일: 2024.6.10.)

국토교통부, 건축서비스산업 통합정보 플랫폼 ‘건축HUB’ 새 단장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2024.4.17.

국토교통부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건축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해 2022년 건축서비스산업 통합정보 플랫폼 ‘건축HUB’를 구축하였으며, 지난 4월 17일 새롭게 단장한 건축HUB를 소개하였다.

새로운 플랫폼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이나 나라장터 등 12개 시스템과 연계하여 분산되어 있던 데이터를 통합 제공한다. 또한 기존에 제공하던 지도 기반 건축물 및 건축사사무소 정보와 건축서비스산업 지식, 산업정보뿐 아니라 수요자 맞춤형 건축정보, 입찰 정보 알림 서비스, 건축 설계공모 운영서비스 등을 추가하였다.

2022년	건축행정, 건축물생애이력, 건물에너지, 건축공간연구원, 대한건축사협회
2023년	국가주소관리시스템, K-GEO플랫폼, 디지털원패스, 나라장터, NICE 등

건축HUB 연계 시스템

특히 건축 설계공모 서비스는 모든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통합 설계공모 플랫폼으로, 공공기관 설계공모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자문, 심사위원 등 업무지원을 위해 고도화하였다. 이에 기관별로 관리하던 2,500여 명의 심사위원 정보를 통합 제공하여 심사총량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공모절차 등을 표준화함으로써 참가자 부담은 줄이고 담당자의 업무 효율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건축HUB 포털 메인 화면

출처: 국토교통부, (2024). 건축서비스산업 통합 정보 플랫폼 “건축HUB”새 단장 오픈, 4월 17일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
2024.4.26.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추진동력을 강화하고자 4월 27일부터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한다. 이번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강화,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미래도시 전환을 위해 안전진단 면제, 용적을 상향, 용도지역 변경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여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법이다.

이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국토교통부가 제시하는 기본방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후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공간구조 개선계획과 연차별 추진계획 등 특별정비계획을 수립 및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개별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특별법에 따른 각종 혜택의 경우 특별정비구역에 한해 적용된다. 베드타운으로 조성된 신도시의 도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도시 차원의 공간 재구조화가 필요한데, 기존 재건축 사업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에 여러 단지를 묶어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각종 특례를 부여하여 구역 내 통합 재건축 등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출범 및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지구 지정 등을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체계를 마련하였으며, 향후 특별법 시행에 맞춰 선도지구 선정 등 구체적인 사업추진에 착수할 계획이다.

주민들의 신속한 정비 요구	정부의 도시 재창조 목표
배관부식·충간소음·주차난 등 열악한 주거환경 정주인구 대비 부족한 도시서비스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도시경제구조	주차난, 기반시설 노후화 등 도시문제 해결 스마트시티, 미래모빌리티 등 도시기능 향상 주거·업무·상업 복합화 등 자족기능 강화
계획도시 특성을 고려한 질서 있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특별법 마련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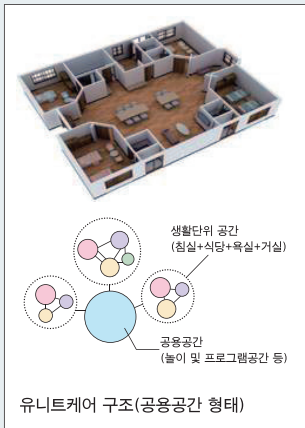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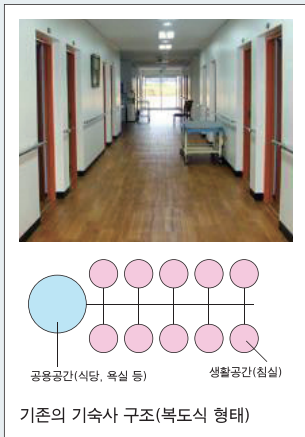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방향

출처: 국토교통부, (2024). 노후계획도시특별법 27일 본격 시행… 내달 선도지구 규모·기준 등 발표, 4월 26일 보도자료.

고령자 돌봄, 주거환경 개선을 고민하는 도시들

서울시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2024.4.26.

부산시 노인복지과 노인정책팀
2024.5.2.



기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형태와
안심돌봄가정 표준안 비교
출처: 서울시, (2024). '집 같은' 서울형 노인요양시설
'안심돌봄가정'...2030년까지 170개 조성. 4월 26일 보도자료.

서울시, 유니트케어 구조 도입한 '안심돌봄가정' 조성 지원

서울시가 복도식의 기숙사 구조가 아닌 2~3인실 위주의 방과 거실을 갖춘 집 형태의 노인요양시설인 '안심돌봄가정'을 시내 곳곳에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노인복지법」에서 5~9인 정원의 소규모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일컫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서울시에서 마련한 '안심돌봄가정 표준안'을 적용해 '유니트케어(Unit Care)' 구조를 도입한 시설이다.

유니트케어 구조는 인간 중심 돌봄을 위한 시설환경 구조로, 기존 복도식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3~4인 위주의 생활실을 탈피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실을 비롯한 2~3인실 위주의 생활실과 공용거실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개인영역과 공용공간을 구분하고 집과 같은 공간구성으로 어르신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다. 또한 1인당 면적도 법적 면적인 20.5제곱미터보다 넓은 25.1제곱미터를 충족하도록 하였다.

안심돌봄가정 사업자로 선정되면 리모델링을 포함한 시설 조성비와 초기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안심돌봄가정 5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하며, 2030년까지 170개소 확충을 목표로 지원 수를 늘려 나갈 방침이다.

부산시, 지역사회와 함께
고령자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부산시가 지역사회와 함께 취약계층 고령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부산형 해비타트 챌린지'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는 노인가구의 노후화된 주택을 노령층 사용자에 맞춰 생활하기에 안전하고 편리한 구조로 개조하는 사업이다. 사업을 통해 가구당 주택 개조와 노인복지용구 설치 등에 3,000만 원 내외를 지원하게 되며, 고령자의 생활동선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공간 리모델링을 진행하게 된다.

시는 지역 기업·단체 및 자원봉사자들도 참여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대상 주택에 대한 전문가 사전 진단부터 고령친화적 개조에 이르기까지, 고령화로 인한 주거 문제를 세밀히 파악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부산에 거주하면서 지역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노인가구이며,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노인가구가 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지원 대상 접수와 더불어 이번 사업에 참여할 지역 기업·단체와 자원봉사자도 함께 모집하였다.

시는 "많은 어르신이 자신이 오랜 기간 살던 곳에서 편안하고 건강하게 나이들 수 있길 바라고 있다"고 사업에 대한 기대를 밝히기도 하였다.

탄소중립, 녹색도시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

충청남도 기후환경정책과 기후변화대책팀
2024.5.7.

경기도 하천과 하천정책팀
2024.5.16.

세종시 건설교통국 건축과
2024.5.17.



합덕수리민속박물관
출처: 충청남도, (2024). 외부 전력 '0' 탄소중립
공공건물 탄생. 5월 7일 보도자료.

충청남도, 탄소중립 공공건축물 조성

충청남도와 당진시는 합덕수리민속박물관의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이를 통해 외부 전력 사용이 전혀 없는 탄소중립 공공건축물이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서는 전력을 생산해 합덕수리민속박물관에 공급할 수 있는 40킬로와트급 고정형·건물일체형 태양광 설비가 박물관 옥상에 설치되었다. 또한 건물 외부 단열재 보강공사를 실시하고, 창호를 고성능으로 교체하였으며, 냉난방공조와 공기순환기 등을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였다. 지난 4월 박물관의 전력 소비량은 3,264킬로와트인데, 태양광으로 4,290킬로와트의 전력을 생산하여 100%를 웃도는 에너지 자립률을 기록하였으며, 전력 사용량 또한 전년 동기의 약 60%였다고 도는 설명하였다.

경기도, 폐천부지 활용한 에너지자립공원 조성

경기도가 하천길 주변 산책로 조성 사업의 하나로 하천길 주변 폐천부지를 활용한 도민 체감형 'RE100 공원'을 만든다. RE100 공원은 하천길 주변 농지와 적치물 방치 폐천부지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해 조성하게 된다. 도시공원과 캠핑장 등도 조성해 도민들이 RE100을 직접 체험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공원 내 사용 전력을 충당한 뒤 남은 전력은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이나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도는 올해 1개소당 10억 원의 예산으로 총 4개소에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시·군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세종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마련

세종시는 건축 부문 온실가스 16% 감축을 목표로 세종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제정하여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새 기준은 신축·중축하는 연면적 합계 500m²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환경성능 ▲환경관리 ▲에너지성능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 총 5개 부문 14개 항목에 적용된다. 해당 기준은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4개 군(群)으로 분류하고 차등 적용하는데, 주거 30세대 미만 중 연면적 500m² 이상과 비주거 연면적 500m² 이상~3,000m² 미만인 '라'군은 저녹스보일러·기계환기장치 등 친환경·고효율 설비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녹색건축물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는 5~10%, 재산세는 3~10% 범위에서 각각 감면받을 수 있다.

3

국립어린이박물관은 국내 최초의 독립형 어린이박물관으로서, 재미있고 안전하며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지역 속에서 주변 경관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앞으로 들어설 국립박물관단지의 다른 주제의 박물관들과 함께 문화균형발전의 주춧돌이 될 것이다.

인제기적의도서관은 주민의 일상과 함께하고 그들의 언제든지 편히 머무를 수 있는 '장소'가 되기를 바랐다. 겸손하면서도 지역의 정체성을 충분히 반영한 디자인과 주변 환경, 상징적 공간들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설계와 배치는 이러한 건축의 목표를 충분히 설명해준다.

국립어린이박물관 진입전랑과 체험관 영센터



하늘에서 바라본 인제기적의도서관



장소 탐방

Place Review

문화, 균형, 성장의 공간 - 국립어린이박물관 | 국립어린이박물관은 아이들이 즐길 수 있고 교육적인 공간을 만들기 위해 따뜻한 느낌의 나무로 된 입면과 작은 정원, 테라스를 계획하였다. 재미있고 안전한 공간에서 아이들이 지역의 생태에 대해 배우고 체험할 수 있다.

독서 이상의 경험을 만드는 장소 - 인제기적의도서관 | 이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보관하는 공간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성장하는 살아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곳은 문화와 예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국립어린이박물관

이동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공시설건축과
국립박물관단지팀장

개요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어을누리로 130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대지면적	29,635m ² (문S-1 용지 중 2, 3, 4, 5)
건축면적	4,572.82m ²
연면적	16,847.94m ²
규모	지상 2층, 지하 1층
높이	24.20m(통합운영지원센터 기준, 4층)
건폐율	15.43%
용적률	22.86%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구조설계	(주)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시공	계룡건설산업(주)
시공기간	2018.12.28.~2023.2.28.
공사비	약 362억 원



진입광장과 통합운영센터

어린이박물관은 아이들이
문화적 상상력과 다양성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기에 모든 전시실의
공간감을 다르게 구성하였다.
박물관 내 전시관들은 중앙 경사로로
연결되어 어린이들에게 적합한 전시공간이다.
지역의 토착식생을 적용한 자연친화적이고
안전한 외부공간을 자유롭게 경험하며
아이들이 지역의 조화로운 생태에 대해 배우고
체험할 수 있다.



주출입구 공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공

입구 공간에서 보이는 숲속놀이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공

기획전시실 외부와 2층 중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계곡



상 토착 식수가 식재된 중정
하 회랑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계곡



상 지구마을놀이터
하·좌 도시디자인놀이터
하·우 숲속놀이터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 어린이를 위한
국립어린이박물관의 건립과 운영은 적극적인 국가적 지원과
관심의 표현으로, 앞으로 어린이의 전인적 성장과
창의적 인재 양성에 기여하는 국립어린이박물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주제의 체험전시
기획·운영과 국제학술행사 개최 등을 통해
국립어린이박물관의 위상을 확보하고 비전을 구현해 나갈 예정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계관

문화균형발전의 거점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조성 목적은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문화 분야의 수도권 집중도 심각한 상황으로, 국립박물관의 38%가 수도권에 소재하는 데다 관람객 100만 명 이상 대규모 박물관은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소재함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의 문화예술활동 건수도 수도권이 지방 대비 2.1배에 이른다. 앞으로 그 격차는 점차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문화 분야의 균형발전도 간과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다행히도 행복도시건설사업 초기 법정계획인 기본·개발계획 수립 당시 문화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도시건축박물관, 디자인미술관, 역사민속박물관, 국가기록박물관 등 4개의 개별 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반영한 이후 국립박물관단지 조성의 필요성에 공감한 행복청·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문화유산청 등 5개 기관이 참여하는 차관급 MOU를 2012년 6월 체결하였다. 이를 계기로 예산당국과 협의한 후 국립박물관단지 마스터플랜(2016) 등을 거쳐 2020년 12월 국립박물관단지 내 첫 번째 박물관인 국립어린이박물관을 착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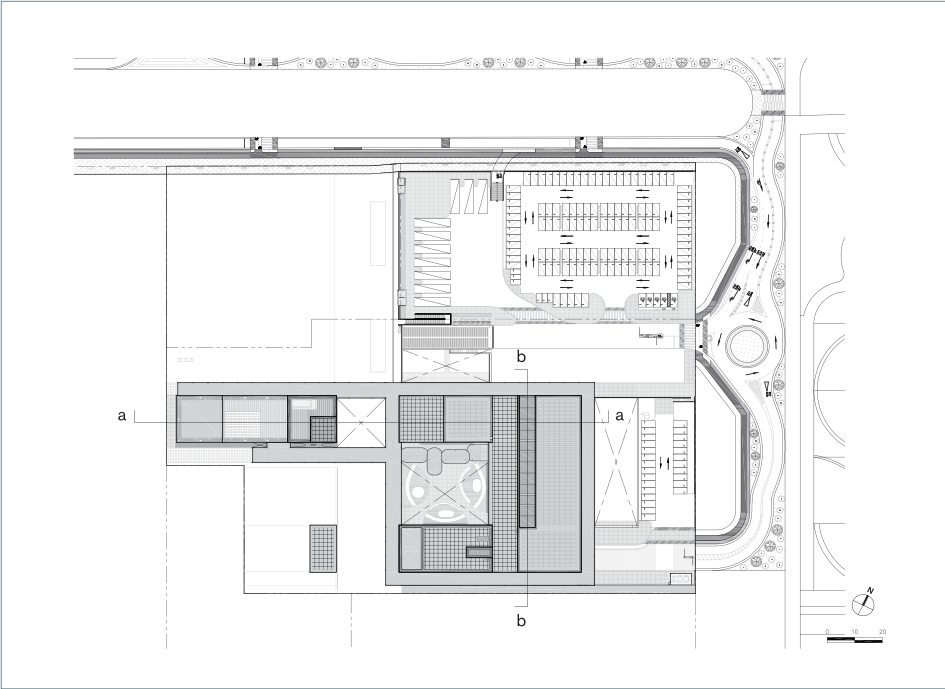
국립박물관단지 마스터플랜

마스터플랜 국제공모는 2016년 5월 18일 공고 후 2016년 11월 14일 당선작을 발표하였다. 박물관단지의 대지는 강, 절벽, 공원, 다양한 문화시설, 도심지, 겹겹이 둘러싸인 매우 흥미로운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도시와 자연이 조화로운 대지는 박물관단지가 문화와 자연 사이의 연결다리로서 디자인되도록 요구한다. 대지는 하안도화지와 같이 비어 있는 곳이 아니고 자연의 아름다움이 압도하고 있다. 이에 박물관단지는 주변 환경의 다양함을 관찰하고 강조하는 역할에 주안점을 두었다. 대상지는 다른 곳과는 차별화된 지역 풍경을 가진다. 프로젝트의 아이디어는 이렇게 특별한 풍경을 장점으로 살릴 수 있는 건물을 만드는 것이다. 그곳이 이미 존재하는 것들을 활용하고 더 어울리는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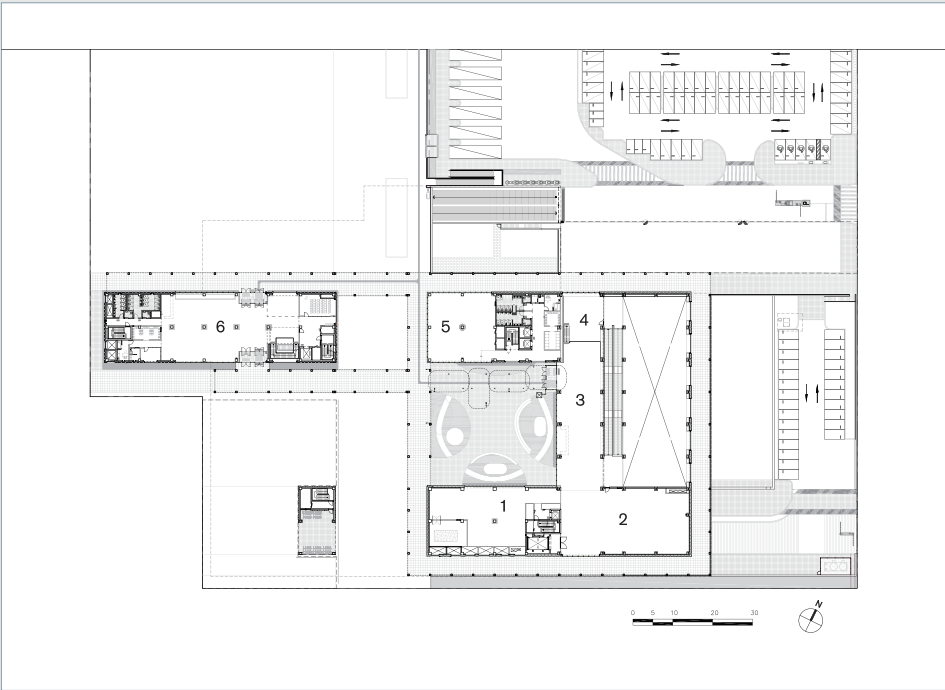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계관



상 진입광장과 통합운영센터
하 입구 공간에서 보이는 숲속놀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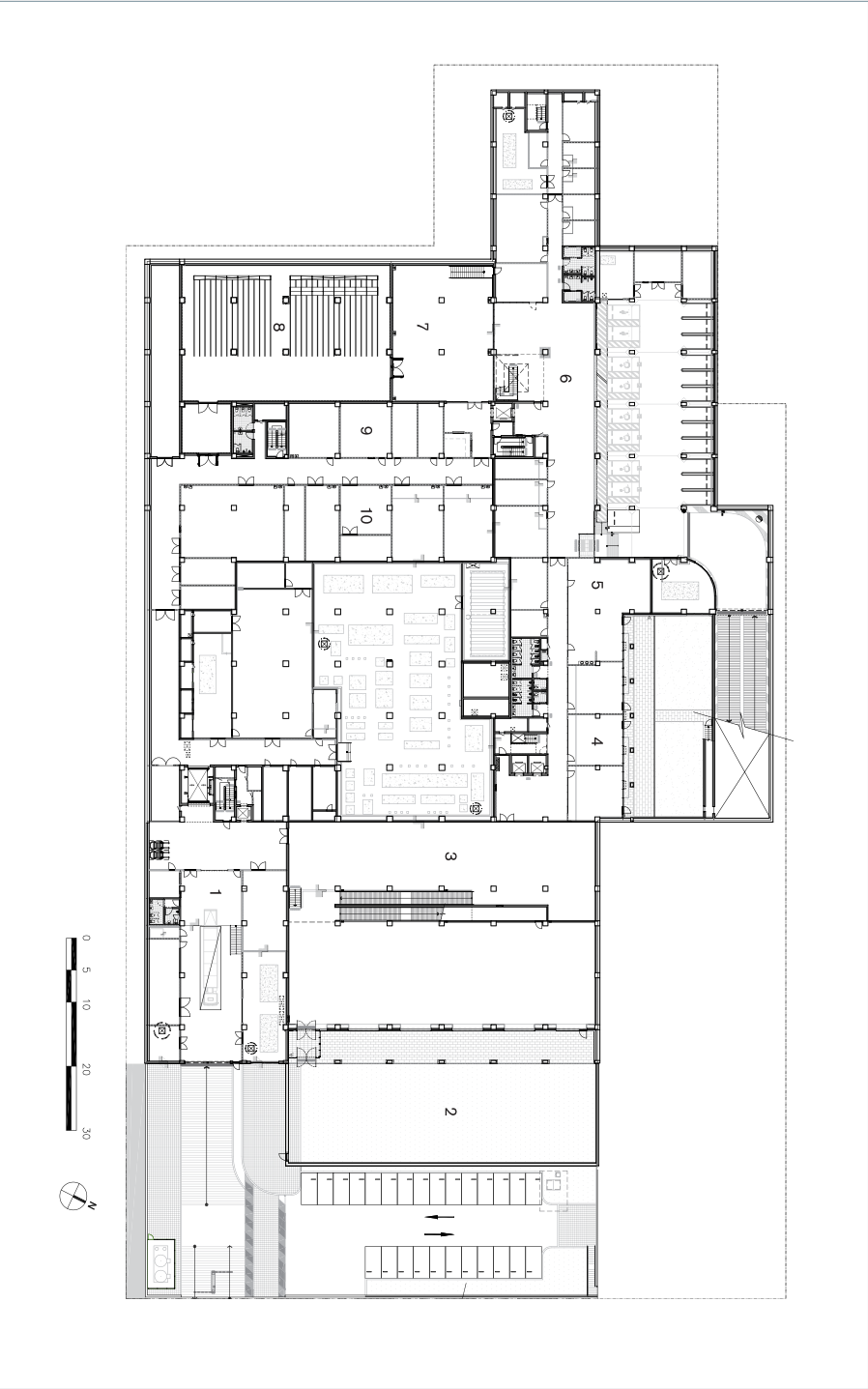


배치도



지상 1층 평면도

- 1 임시전시실
- 2 전시실(지구마을놀이터)
- 3 로비
- 4 복합전시실
- 5 영유아 상설전시실
(숲속놀이터)
- 6 통합운영지원센터 로비



지하 1층 평면도

- 1 하역장
- 2 전시실(우리문화놀이터)
- 3 전시실(도시디자인놀이터)
- 4 교육실
- 5 피크닉룸(식사공간)
- 6 수장고 복도
- 7 수장고1
- 8 수장고2
- 9 사무실
- 10 보존처리실



행정동시립립도시간설청 제공

주출입구 공간

건물의 캐노피는 일정 높이의 단순한 선을 제안하는데, 이것은 대지 내 다양한 지형이 일정한 면을 형성하는 박물관의 볼륨과 교차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경관은 박물관 외부를 시간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보이도록 하고, 흥미로운 전시공간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보행자 동선은 북측을 주진입으로 계획하였고, 부진입으로 서측의 나성1교, 동남측의 금강보행교를 통한 진입과 동측 중앙공원에서의 진입을 고려하여 계획하였다. 차량의 주출입은 북측도로(왕복 4차로)이고, 서측 나성1교는 부출입으로 계획되었으며, 하역동선은 동측 공원관리도로를 통해 어린이박물관 남쪽으로 진입한다.

북측 남북·동서 방향 도로는 회전교차로로 계획되었다.

국립어린이박물관 건축계획

국립어린이박물관은 아이들이 즐길 수 있고 교육적인 공간을 만들기 위해 따뜻한 느낌의 나무로 된 입면과 작은 정원, 테라스를 계획하였다. 재미있고 안전한 공간에서 아이들이 지역의 생태에 대해 배우고 체험할 수 있다. 외부공간은 지역의 토착식생과 지역의 상징이 되는 꽃, 과실수를 적용하여 주변 경관과의 조화 및 균형을 고려하였다. 아울러 국립어린이박물관은 단지 외부의 시설로 손쉽게 접근하기 위해 중앙공원과 인접해 배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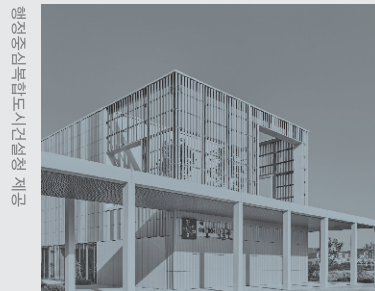
특히 국립어린이박물관은 세종시민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등 관람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국가 상징문화시설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는 곳이어야 한다. 이에 지역시설이 아닌 국가 상징문화시설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박물관단지 마스터플랜의 계획개념 및 구체화 결과를 반영하여 인접한 중앙공원·금강 등 주변 시설 및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패시브 디자인, 신재생에너지 도입, 저영향개발기법(LID) 등 최신 기법을 활용하여 친환경 건축물로 계획하고, 장애인·임산부 등 모든 이용자의 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설계하였다. 특히 어린이박물관은 아이들이 문화적 상상력과 다양성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기에 모든 전시실의 공간감을 다르게 구성하였다. 박물관 내 전시관들은 중앙 경사로로 연결되어 어린이들에게 적합한 전시공간이다. 지역의 토착식생을 적용한 자연친화적이고 안전한 외부공간을 자유롭게 경험하며 아

이들이 지역의 조화로운 생태에 대해 배우고 체험할 수 있다. 아울러 박물관단지의 핵심 편의시설인 통합운영센터는 북측 도시상징가로와 진입광장, 단지 중앙으로 이어주는 연계축으로서 진입동선을 고려하였다. 통합수장고와 수직적으로 연결하여 운영 동선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통합수장고는 단지 중심 하부에 배치하여 관리지원시설 일원화를 꾀하였다.

다양한 체험과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

작년 12월 26일 개관한 국립어린이박물관은 국내 최초의 독립형 어린이박물관으로서 향후 순차적으로 개관할 박물관들의 주제인 도시건축, 디자인, 문화유산, 기록문화 등 다양한 소재를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전시한 상설전시관과 지구를 주제로 한 기획전시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개관 이후 2개월간 시범 운영한 뒤 지난 3월 1일 정식 개관한 국립어린이박물관에는 매주 평균 2,000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특히 주말에는 전 회차가 매진될 만큼 높은 인기를 자랑하고 있다. 전시 체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여 어린이들이 상상과 공감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박물관을 만들어 가고 있다.

국립어린이박물관은 통상적인 박물관에서 발전하였으나, 어린이가 대상이고 전시물을 체험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19세기 미국에서 새·곤충·식물 등 실물표본이나 소형 전시물을 어린이 체험용 교구로 사용하는 방식을 도입한 어린이박물관이 등장하였고, 1960년대부터 어린이가 직접 만지고 노는 놀이 중심의 체험전시물을 배치하는 운영 방식이 본격화되었다. 세계 최초의 어린이박물관인 미국 브루클린 어린이박물관(1899년)을 시작으로 영미권에서 확산되어 현재는 전 세계에 400여 개의 어린이박물관이 운영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부속 박물관이 아닌 독립된 형태의 박물관이 주가 되며, 유아에서 청소년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유럽의 경우 프랑스의 주요 어린이 문화시설은 국가의 재정적 지원으로 운영되는 공공적 서비스로서 전시 외에 교육 프로그램도 중점 운영 중이다. 국내에서는 경주박물관학교(1954년)에서 어린이박물관 프로그램을 최초로 운영하였고, 민간에서는 삼성어린이박물관이 최초의 독립 형태



상 기획전시실 외부와 2층 중정
하 다이내믹한 외장 마감재의 활용



행정안전부립도시건축청 제공



상 숲속놀이터
하 도시디자인놀이터

로 개관(1995년)하였다. 이후 국립중앙박물관 부속 어린이박물관(2005년)을 시작으로 확산(17개)되어 모박물관의 주제를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추어 체험전시를 진행하고 있다. 2010년대 이후 수도권 지자체가 운영하는 독립된 형태의 국립어린이박물관이 증가하여 어린이를 위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 어린이를 위한 국립어린이박물관의 건립과 운영은 적극적인 국가적 지원과 관심의 표현으로, 앞으로 어린이의 전인적 성장과 창의적 인재 양성에 기여하는 국립어린이박물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주제의 체험전시 기획·운영과 국제학술행사 개최 등을 통해 국립어린이박물관의 위상을 확보하고 비전을 구현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숲속놀이터는 상설전시관으로 36개월 미만 영유아를 위한 전시실이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모두의 숲'을 주제로 시각·청각·촉각·신체활동을 하는 전시물과 역할 놀이가 가능한 체험물을 갖추고 있다. 두 번째 지구마을놀이터는 시의성 및 학습 필요성이 있는 주제로 전시테마(1년 단위)를 변경하여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교육적 효과를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는 인간이 만든 도구와 기계의 원리를 탐구하는 체험을 위주로 하고 있다. 세 번째 도시디자인놀이터는 건축물 배치를 통해 도시를 구성하고, 색칠놀이와 서명을 통해 '내가 만든 도시를 체험'하는 공간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문화놀이터는 민화 그려 보기, 민화 속 동물이 되어 보기 등을 체험하는 공간이다.

더 크게 성장할 미래

국립박물관단지에는 국립어린이박물관을 시작으로 도시건축박물관(2026년), 디자인박물관(2027년), 디지털문화유산센터(2027년), 국가기록박물관(2028년)이 순차적으로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 소재 국립민속박물관이 2031년까지 국립박물관단지로 이전하게 되면 국립박물관단지는 명실상부하게 중부권을 대표하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국립박물관단지 잔여구역(2구역) 약 7만 1,000제곱미터에 추가로 문화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이 연구용역을 통해 추가로 유치 가능한 박물관·미술관 등을 발굴한 뒤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신속히 건립할 계획이다. 한편 국립박물관단지 인근에는 중앙공원·호수공원, 국립세종도서관, 국립세종수목원, 세종예술의전당 등 풍부한 문화·여가시설이 구성되어 있다. 이들을 연계하여 중부권 문화·관광·여가벨트가 완성된다면 연간 1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행복도시를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립도시건축청 제공



상 지구마을놀이터
하 토착 식수가 식재된 중정

인제기적의 도서관

이상윤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개요

위치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40번길 52-7
용도	교육연구시설(도서관)
대지면적	9,993.70m ²
건축면적	2,225.71m ²
연면적	2,996.40m ²
규모	지하 1층 / 지상 2층
주차	49대
높이	11.55m
건폐율	22.27%
용적률	25.81%
외부마감	콘크리트 블록, 노출콘크리트
내부마감	도장, 콘크리트폴리싱
구조설계	세움구조엔지니어링
설계	이상윤(연세대), 박세희(지안건축)
설계담당	권재범, 김광수, 허지향, 김형준(지안건축) 고재협, 고덕호, 이서우, 최민규(연세대)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시공	한나래종합건설
기계설계	수양엔지니어링
전기설계	수양엔지니어링
조경	HEA
설계기간	2017.7.~2019.11.
시공기간	2019.6.~2023.6.
준공	2023.6.28.
예산	146억 원
공사비	92억 원
건축주	인제군



하늘에서 바라본 인제기적의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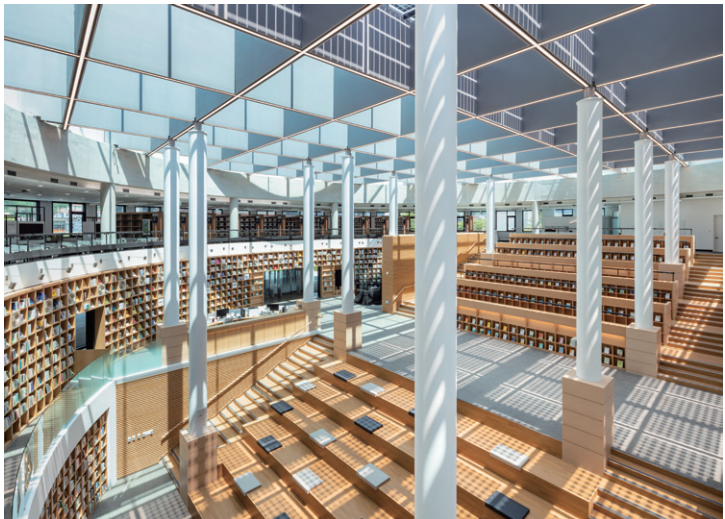
이 도서관을 단순한 ‘공간’으로서가 아니라 ‘장소’로서 디자인하고자 하였다.
이는 단순히 건물의 형태나 기능을 넘어, 이곳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과 경험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들이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며 느끼는
소중한 순간들이 모여 이 도서관은 특별한 장소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 시경

도서관 갤러리



© 시경



© 시경

상 계단형 서가
하 갤러리 복도



© 2024 KIN

어린이 열람실



© 2024 KIN



© 2024 KIN

상 원통형 서가
하·좌 사랑채
하·우 외부 복도

인제기적의도서관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새로운 세대에게 영감과 지식을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건축물의 사회적·문화적 역할을 재정립하고, 지역사회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공간을 창출함으로써 실현될 것이다.
이곳은 단순히 책을 보관하는 장소가 아니라, 인간적이고 따뜻한 공간으로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보금자리가 될 것이다.



©인제대

모든 곳을 향해 열려 있는 원형의 건축

장소로서의 건축

인제기적의도서관이 들어설 땅을 처음 밟았던 날, 그 순간의 감정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환희와 기대 그리고 걱정이 뒤섞인 채로, 그 모든 감정이 이 땅 위에 서는 순간 복잡하게 얽히면서 나를 어지럽게 하였다. 이 작은 지역사회에서 특별한 무언가를 창조해 내고자 하는 비장한 마음이 가득하였다.

여기는 대도시가 아니다. 고층 빌딩이 늘어선 스카이라인도, 붐비는 거리도, 세련된 카페도 없는, 소박하고 조용한 곳이다. 이런 곳에서는 건축가로서의 힘을 뽐 필요가 있다. 화려한 디자인이나 최신 건축 트렌드를 반영하는 것보다는 이곳 사람들의 일상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였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지역 주민들만을 위한 소박한 건축물로 그치는 것을 원하지는 않았다. 이 도서관이 한 번 방문하고 마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주 머물고 싶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가 되기를 바랐다.

그렇다. 이 도서관을 단순한 ‘공간’으로서가 아니라 ‘장소’로서 디자인하고자 하였다. 이는 단순히 건물의 형태나 기능을 넘어, 이곳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과 경험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들이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며 느끼는 소중한 순간들이 모여 이 도서관은 특별한 장소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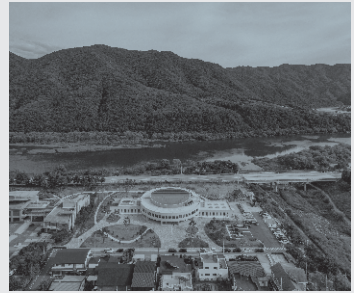
결국 ‘장소’로서의 공간 디자인이 이 프로젝트를 이끌어 나가는 중요한 키워드가 되었다.

건축적 영감과 유형적 접근

인제기적의도서관 프로젝트는 단순한 건축 설계를 넘어 공공건축물을 대하는 건축가로서의 정체성을 탐구하는 여정이었다.

건축가의 꿈을 안고 미국으로 떠났던 유학 시절의 첫 프로젝트로 도서관을 설계하게 되었을 때, 스튜디오 전체 답사로 루이스 칸(Louis Kahn)의 필립스 엑시터 아카데미 도서관을 방문하였다. 이 도서관은 단순한 조형 요소인 정사각형과 원형을 사용하여 현란한 기교를 보이지는 않지만, 기하학적인 조화와 교차를 통해 공간적으로 풍성하고 경이로운 경험을 선사하였다. 칸의 설계는 공간을 통해 빛과 물질 그리고 인간의 경험을 조화롭게 결합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고, 이는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보관하는 장소가 아니라

©인제대



상 하늘에서 바라본 인제기적의도서관
하 인제기적의도서관 전경



©인제대



©인제대

상 모든 곳을 향해 열려 있는 원형의 건축
하 외부 공간

지식과 영감을 주는 성역임을 일깨워 주었다.

이 영감은 인제기적의도서관 설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순수 기하학에 기초한 단순한 조형물들을 기반으로 다양한 도서관 유형들을 스터디하였다. 수많은 구성과 조합을 통해 결과적으로 원형을 중심으로 한 설계를 진행하였다. 원형 혹은 원통형 디자인은 겉으로는 단순해 보이지만, 공간 활용의 제약과 기성 제품 가구 사용의 한계, 그리고 깔끔한 시공의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고충이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원형 디자인을 고집한 이유가 있었다. 무엇보다도 입지 조건을 고려하였을 때, 도서관은 앞·뒤·옆의 구분이 없는 정면성이 부재해야 하였다. 정면성 부재라기보다는 어느 방향에서도 소외되지 않고 오히려 반기는 이미지로 보이기 위한 전략이었다. 또한 공간의 중심점을 잡는다는 면에서도 원형 디자인은 매우 중요하였다. 프로그램 유형 중에서 원형경기장, 패닝디콘을 활용한 계획, 광장 디자인, 계단형 극장 등의 조건들이 조합된 장소이길 원하였다. 원형 디자인은 공간의 중심에서 출발하여 모든 방향으로 균형 있게 확장되는 특성을 지니며, 이는 방문객들에게 공간의 연속성과 유기적 연결성을 제공할 수 있고 동시에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 주고 감싸 주고 보호해 주는 역할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원형의 공간이 사각형의 그리드와 만나 구조적 미와 빛의 연출을 도모하는 유형적 접근은 설계 초기 단계부터 이미 변할 수 없는 숙명으로 결정되었다.

소통과 협력의 결실

인제기적의도서관 설계 과정은 건축가와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끊임없는 대화와 협력을 필요로 하였다. 이는 단순한 건축 설계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인제기적의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책임은사회재단, 인제군청, 인제군민, 사서를 포함한 운영팀 그리고 군장병들과 그들의 방문 가족들까지도 모두 건축주였다. 다양한 건축주의 조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면밀한 조사와 예측, 분석이 필요하였다. 설계 과정에서의 다양한 만남과 대화는 건축가로서 건축물에 생명을 불어넣는 과정과도 같았다. 그들의 요구와 기대를 반영하는 것은 곧 도서관이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완성되는 길이었다.

도서관과 같은 공공건축물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설계 과정에서 많은 회의와 간담회

를 통해 설득력을 얻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공동체적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과정이었다. 건축가는 이 과정에서 단순한 설계자가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반영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도서관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닌,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 가는 공동체적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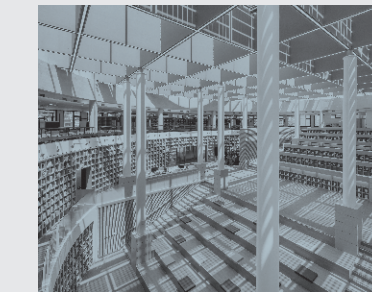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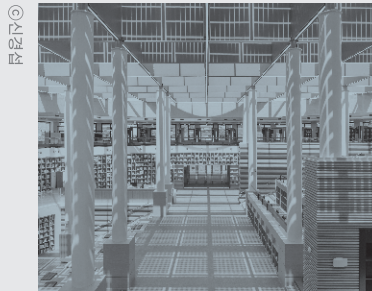
인제군 초등학생과 중학생들과의 만남 그리고 군인들과의 만남은 특히 인상적이었다. 다양한 요구들을 모조리 다 수용해 주고 싶은 마음에 넘치는 디자인을 하였던 순간도 있었다. 하나같이 모두 소중한 의견이었기에 다 담기에는 부족한 면적에 대한 대응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담을 수 있는 유연한 공간들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틀을 잡아나갔다.

2017년 9월에 설계를 시작해 약 5년 7개월 동안 진행된 이 프로젝트는 인제군 군수와 군청 담당자, 시공업체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수기하학에 기초한 초기 설계안을 큰 변경 없이 유지할 수 있었다. 이는 꾸준한 소통을 통해 견고히 다져온 과정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확신한다. 건축 초기 계획안이 같은 모습으로 완공되기는 매우 어려운데, 특히 공공건축물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다. 인제기적의도서관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초기 설계안을 유지하며 완공이 가능하였던 것은 1%의 기적에 가까운 운과 99%의 노력의 결과이지만 그래도 기적은 기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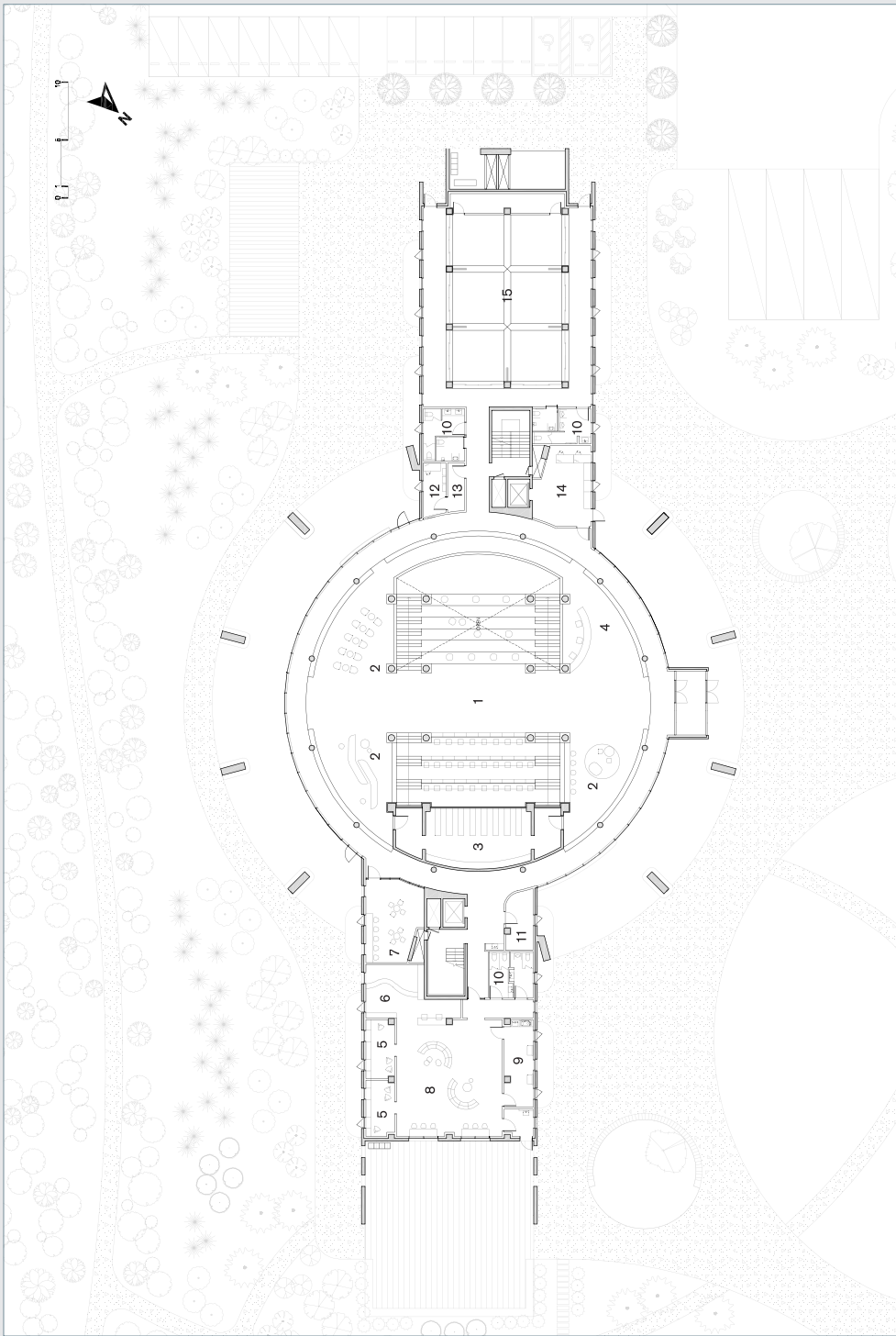
문화의 연결선과 지역적 상징성

인제기적의도서관은 권위적이지 않고 겸손한 자태를 유지하면서도 지역적 상징성을 살리는 디자인 철학을 바탕으로 설계되었다. 낮은 단층 건물과 원통형 매스는 모든 방향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으며, 중앙의 원형홀은 천창을 통해 자연 채광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간과 날씨에 따라 빛과 자연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도록 하였다. 내부 구조는 원형 로비, 갤러리, 열린 책 공간을 중심으로 불필요한 공간을 최소화하고, 어린이 도서관, 평생교육실인 사랑채, 자료실, 열린 극장 등을 개방하여 다양한 연령층의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소양강과 설악로를 따라 가지런히 자리 잡고 있는 인제산촌민속박물관과 박인환문학관을 잇는 문화의 연결선을 강조하기 위해 100미터에 달하는 낮고 긴 막대기와 같은 매스를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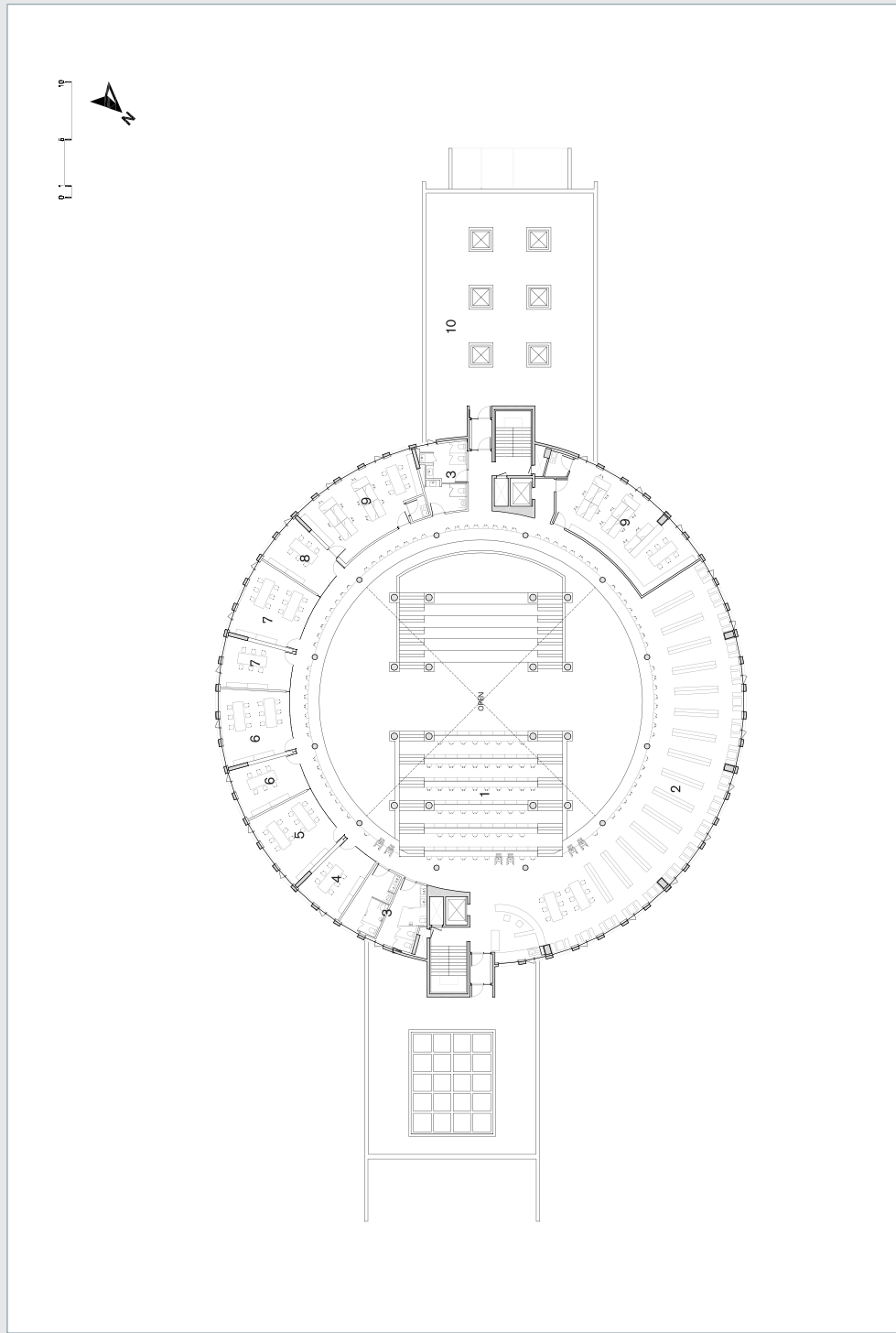


상 도서관 갤러리
중 계단형 서가
하 갤러리 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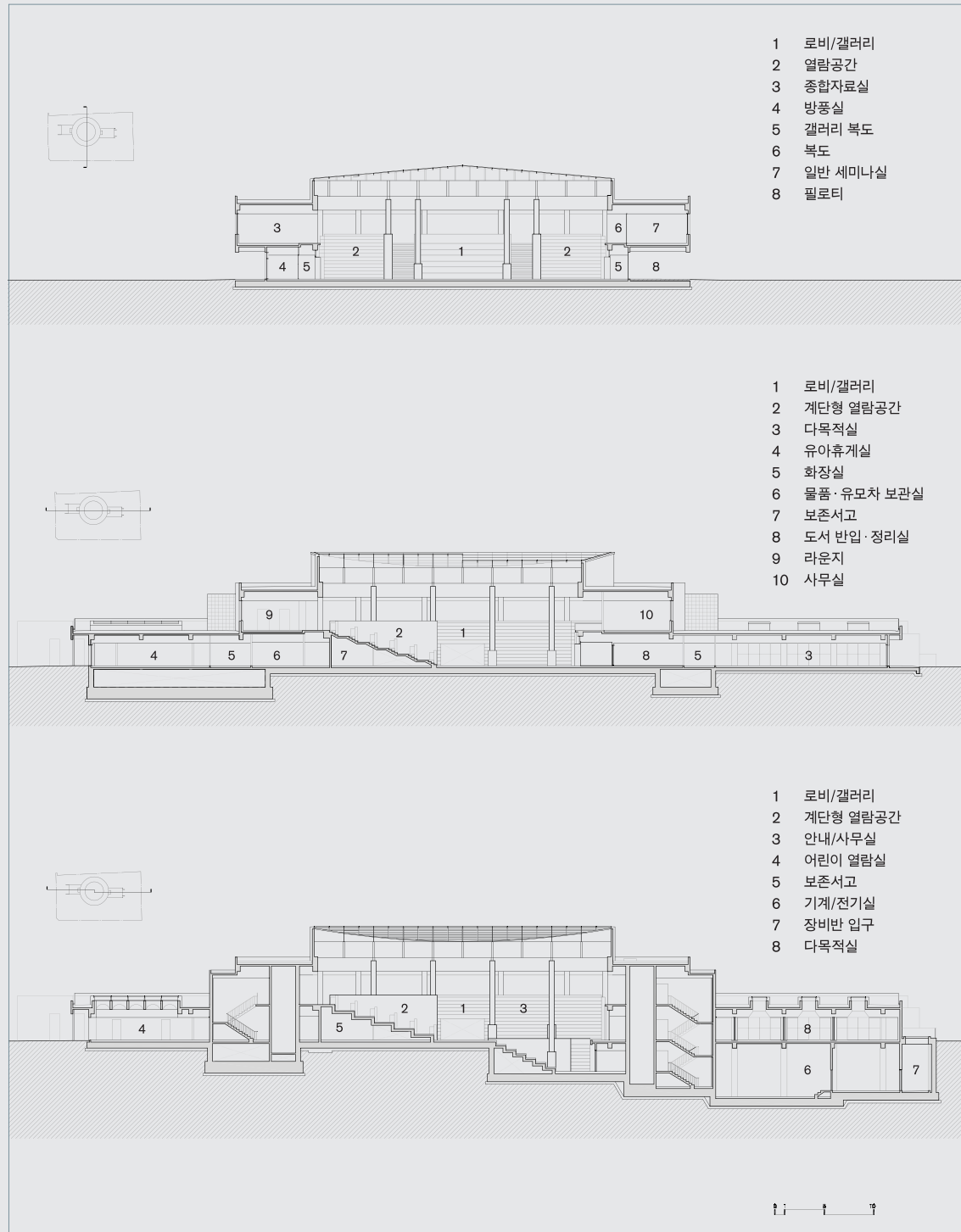
- 1 로비/갤러리
- 2 열람공간
- 3 보존서고
- 4 안내/사무실
- 5 이야기방
- 6 부모 열람실
- 7 휴게실
- 8 어린이 열람실
- 9 유아휴게실
- 10 화장실
- 11 물품·유모차 보관실
- 12 통신실
- 13 안내실
- 14 도서 반입·정리실
- 15 다목적실

지상 1층 평면도



- 1 계단형 열람공간
- 2 종합자료실
- 3 화장실
- 4 비디오게임방, 만화방
- 5 다목적 휴게실
- 6 일반 세미나실
- 7 독서토론실
- 8 자원활동가방, 강사휴게실
- 9 사무실
- 10 옥외휴게공간

지상 2층 평면도



종횡 단면도

그 막대기 중심점 위에 얹은 원통형 디자인은 어느 방향에서나 일관된 정면성을 유지함으로써 보는 이와 대상 간의 관계를 집합과 집중, 그리고 집중과 분산의 이중적인 의미를 갖도록 효과적으로 표현하였다. 동북면의 산으로 둘러싸인 지형은 멀리서도 쉽게 식별 가능한 순수한 형태를 제공하며, 남쪽의 주거단지와는 의도적으로 이질적인 관계를 형성해 지역의 상징성을 지니도록 강조하였다.

아울러 공간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여 외부와 내부가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고, 열린 장소에서 점진적으로 열린 공간으로 이어지는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특히 조정 공간과 건물 입구, 열린 도서관 사이의 관계를 긴밀하게 구성하여 도서관에 진입하면서 다시 외부라는 착각을 일으키는 내부로 초대되는 독특한 경험을 의도하였다. 이는 도서관의 로비 공간을 과감히 생략하고 바로 도서관으로 초대하는 전략이다. 방문자들은 입구를 통해 얇은 막 같은 원형 갤러리 복도를 지나 마치 문지방을 넘는 것처럼 도서관으로 빨려 들어가는 경이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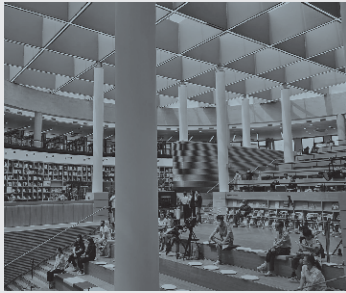
이와 함께 인제군의 기후 특성을 고려하여 도서관 홀, 어린이 도서관, 사랑채 공간을 외기에 직접 노출하기보다는 하나의 커로 감싸 보호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이는 추위나 더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가벼운 내복을 입는 것과 같은 원리로, 공간을 감싸는 가벼운 공기층을 형성하는 디자인이다. 이 공간들은 갤러리, 독서 공간, 가벼운 담소의 자리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된다.

도서관을 감싸는 갤러리 복도는 시간을 상징하는 12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진 링을 형성하여 예술적인 요소를 선사하였고, 열린 홀은 독특한 형태의 비스듬히 기울어진 계단형 서가와 극장이 사각형으로 구성되어 원과 사각형이 조형적으로 교차하며 독창적인 그리드 형태를 만들어 냈다. 이를 통해 홀 내부의 기둥이 원과 사각형, 주요 동선축과 교차하며 생성된 그리드에 맞추어 형성되었고, 지붕 구조를 위한 그리드 구조와 조명이 조화롭게 결합되었다. 이는 건축물의 조형적 아름다움과 기능적 효율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도서관의 지붕 설계는 인제군의 슬로건인 ‘하늘 내린 인제’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 천창을 통해 자연 빛의 유입을 최대한 활용하였다. 이는 인공 조명 없이도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조도를 제공하며, 도서관 내부의 쾌적한 환경을 창출하고자 한 것이다. 직사광선이 도



상 어린이 열람실
하 원통형 서가



©이성원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는 도서관의 모습

서 보관에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종합자료실과 같은 서가는 직접 빛이 들지 않는 북향에 배치하고, 빛이 드는 원통형 서가에는 회전율이 빠른 베스트셀러나 최신 도서를 두어 장기간의 노출을 피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또한 도서관이 공부나 독서를 넘어 융합적인 문화의 장소로서 역할을 담당해야 함을 항상 염두에 두었다.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과 지속가능성

2023년 6월 28일, 인제기적의도서관이 정식 개관하였다. 이날을 기점으로, 이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보관하는 공간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성장하는 살아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곳은 문화와 예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인제기적의도서관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과 문화예술의 촉진에 헌신하고 있다. 문화예술 워크숍, 인문학 강연, 작은 음악회와 같은 다채로운 행사들은 지식의 확장과 창작의 영역을 넓혀 주며, 지역 주민들이 자신의 예술적·인문학적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뿐만 아니라 젊은이와 부모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여 현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경험은 단순한 건축 작업을 넘어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 그리고 건축물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를 재인식하게 해 주었다. 도서관의 지속가능한 디자인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공간을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는 이 프로젝트에 적용한 건축물의 생애 주기 동안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재생 가능한 자원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비전을 실현하는 것 이상의 가치이다.

인제기적의도서관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새로운 세대에게 영감과 지식을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건축물의 사회적·문화적 역할을 재정립하고, 지역사회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공간을 창출함으로써 실현될 것이다. 이곳은 단순히 책을 보관하는 장소가 아니라, 인간적이고 따뜻한 공간으로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보금자리가 될 것이다. 인제기적의도서관이 지식의 보고이자 문화의 요람으로서 그 존재가 확고하게 자리 잡길 기대한다.

auri 소식

건축공간연구원
연구과제 소개
116

포럼 및 세미나
122

연구원 단신
126

건축공간연구원의 신규 과제를 소개하고
포럼, 토론회, 세미나 등 다양한 활동내용을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건축공간연구원

연구과제 소개

구분	과제명	과제책임
기본 과제	2023년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김상호
	대규모 언어모델을 활용한 건축법령 해석 지원 시스템 고도화 방안 연구	조상규
	건축안전 모니터링 실효성 강화를 위한 건축법령 개정방안	이주경
	지역 Space-MBTI'를 활용한 인구감소지역 특성 진단 연구	박성남
	영구임대주택 거주 고령자의 지역기반 생활지원 서비스 접근성 제고 방안	윤진희
수시 과제	건축서비스산업 역량 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오민정
	한옥 등 건축자산 밀집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실태 분석	방보람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개제도의 쟁점 진단 및 개선방안	김준래
	소록도 문화유산 지정 방안 연구	박일향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확대를 위한 지역맞춤형 운영모델 연구	김민지
	보행자길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남궁지희

기본과제

❶ 2023년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

2014년 건축서비스산업을 지식기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되고, 2022년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가 「통계법」에 근거한 국가통계로 승인되면서 건축서비스산업 분야 최초의 통계작성이 정례화되었다. 건축서비스산업 분야에서도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사회구조의 변화와 저성장 경제의 지속, 디지털 기반 4차 산업혁명과 기술혁신 등의 패러다임 변화가 가시화되면서 디지털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러한 디지털 데이터의 통계를 활용한 산업의 경쟁력 확보는 전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특히 건축서비스분야 국제시장을 선도하는 미국의 경우에는 산업현황 분석과 미래예측을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 이러한 통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우리 연구원은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통계청으로부터 통계작성 지정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및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해 관련 업무 위탁을 받은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중이다.

이 연구는 2024년에 시행하는 제3차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모집단 현행화와 국가통계 품질개선을 위한 조사항목의 보완 및 재설정, 전문 조사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실태조사 시행 및 통계작성, 결과 공표 등을 위한 일련의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전년도에 이루어진 제2차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 활용도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인 통계품질 수준 제고와 품질개선 방안을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를 통해 건축서비스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건전한 육성을 위한 기초 데이터를 확보하고, 건설산업 등 연관 산업과의 데이터 교류를 통한 산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효과를 기대한다.

김상호

❷ 대규모 언어모델을 활용한 건축법령 해석 지원 시스템 고도화 방안 연구

이 연구는 대규모 언어모델 기술을 활용하여 건축법령 해석 지원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3년도에 수행된 선행 연구에서는 건축법령 해석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 시스템을 개발하고, 대규모 언어모델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그 후속 작업으로 기존 시스템의 성능을 더욱 향상시키고, 추가적인 정책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하고자 한다.

특히 답변 생성을 위한 근거 법령 추출 알고리즘의 정확성을 높이고, 연혁 법령 해석 및 지자체 조례 추적 알고리즘 등을 추가하여 기존 시스템의 정답률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와 건축 안전 관련 질의응답 시스템을 설계하고 개념 실증을 통해 추가적인 정책 수요에도 대응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자동화된 성능 평가 프로세스 활용, 전용 클라우드 시스템 리소스 확보를 통한 데이터 보안 강화, 사용자 및 전문가 피드백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 효과적인 시스템 구축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로 개발될 ‘건축법령 해석 지원 시스템’은 건축 관련 규제 적용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빈번한 민원 발생으로 인한 행정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범정부 차원의 초거대 인공지능 활용 전략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다른 규제 법령 적용 시스템 개발에도 중요한 레퍼런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상규

❸ 건축안전 모니터링 실효성 강화를 위한 건축법령 개정방안

건축안전 모니터링은 「건축법」에 따라 설계 및 시공현장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구조 및 화재 기준의 적합성을 조사하는 제도다. 최근 건축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모니터링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 강제력 및 절차적 근거 부족으로 인해 부적합 대상에 대한 사후 조치가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이번 연구를 통해 건축안전 모니터링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모니터링 운영 결과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의 당위성을 재확인하며, 국내외 유사 제도를 분석하는 과정을 거친다. 최종적으로는 「건축법」 개정안을 제안함으로써, 건축안전 모니터링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 연구는 건축안전 모니터링 제도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고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건축안전 모니터링의 합리적·효율적 운영 및 국민과 기업의 건축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정책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주경

❹ ‘지역 Space-MBTI’를 활용한 인구감소지역 특성 진단 연구

지방소멸은 지방의 위기다. 2022년 이후 10년간 매년 약 1조 원씩의 대응기금이 지역의 해법 마련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2022~2026)’에는 건축공간연구원에서 2023년 개발한 ‘지역 현안 체크리스트’와 ‘지역 Space-MBTI’가 포함되어 있다.

이 연구는 ‘지역 Space-MBTI’ 진단 체계를 89개 인구감소지역에 적용하여 그 진단 결과에 따른 지역 특성 유형화 분석을 실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를 위해 72개 설문 문항이 재구성되어 일반주민과 공무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지역 Space-MBTI 진단 분석을 위해 각 지역별의 리포트를 작성하고자 한다. 이 리포트에는 Space-MBTI 진단 결과, 두드러지는 현

재 지역 특성, 응답 그룹 간 차이 비교 등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 Space-MBTI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진단결과를 효율적,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 시사점을 토의하고자 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의 시사점, 사업 방향에 대한 시사점, 정책 추진의 시사점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지역의 다양한 특성을 맞춤형으로 진단함으로써 지역이 지방소멸을 대응함에 있어 전략적 접근, 차별화 접근을 강화하기를 촉진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분석한 지역 Space-MBTI가 그 명명한 가치대로 지역의 기저 유형을 알려주는 지표(Municipal Base Type Indicator)로서 지방소멸의 위기를 역전시킬 전환점의 디딤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아울러 지방소멸에 대한 대응을 효과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제도적인 공론장(Institutional Arena)’으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박성남

⑤ 영구임대주택 거주 고령자의 지역기반 생활지원 서비스 접근성 제고 방안

노인 천만 시대, 전체 인구 중 고령자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 진입(2025년)을 앞두고 거주하던 지역 중심(Ageing in Place: AIP)의 고령자 주거 지원에 관한 정책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고령자의 주거 지원은 단순히 주택 범위를 넘어 노인이 거주하던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식사·여가·건강·돌봄 등 일상적인 생활지원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는 익숙한 곳에서 나이 들고 싶은 고령자의 주거수요뿐만 아니라 노인의 독립적인 거주 기간을 연장하여 입원·입소로 인한 사회적 노인부양비용 관리의 효과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지역기반 생활지원 서비스 공급에 있어 수요자인 고령자의 이동 가능범위 및 건강 등 개인 특성에 대한 고려는 아직 제한적이다.

특히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경우 경제·신체·물리적 제약으로 자신이 살던 공간에서 비자발적으로

고립(Stuck in Place: SIP)되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건설된 영구임대주택의 86.2%는 25년 이상 경과한 노후 주택이며, 주호는 협소하고, 그곳의 거주자는 고령화되고 있다. 특히 건강 및 장애의 정도,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이동 가능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데, 영구임대주택 고령자의 경우 규칙적인 경제활동이 적고, 장애인 비율이 높아 일상생활 범위가 제한되는 특성을 가진다.

이에 이 연구는 저소득 고령자가 밀집되어 거주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을 대상으로 거주 고령자들의 건강 및 가구 특성 유형별 이동범위와 생활지원 서비스의 수요를 분석하여 생활지원의 공간적 접근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영구임대주택 거주 고령자들의 독립적 생활을 지원하는 지역사회적 공간적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윤진희

수시과제

① 건축서비스산업 역량 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일반적으로 산업 활동의 여건, 성과의 현재 수준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가늠하기 위하여 산업 역량을 분석하곤 한다. 특히, 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지속적인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 역량에 대한 진단이 필요해지고 있다. 산업 역량 분석을 통해 산업의 현안과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고 앞으로의 산업 발전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 이는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실행의 근거로 활용되고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산업 분야마다 해당 산업의 ‘역량 지표’를 개발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역량을 분석하는 추세이다.

한편, 건축서비스산업 분야는 산업 구조 및 활동 여건과 관련된 여러 현안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

지만 이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은 부족한 상황이다. 2022년부터 진행 중인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는 현황을 파악하는 데 그치는 수준이며 미래 건축서비스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쟁력, 성장 가능성 등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건축서비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역량 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건축서비스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역량 진단을 위한 지표를 개발하기 위하여 시작되었으며, 산업 역량 분석 방법 및 지표 개발 방법론을 고찰하여 건축서비스산업 역량 지표 초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를 시작으로 건축서비스산업 역량 지표가 고도화되어 건축서비스산업 역량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진단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오민정

② 한옥 등 건축자산 밀집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실태 분석

국가유산체제 도입과 사회여건 변화에 따라 역사문화 유산을 보전하고 활용하는 것에 대해 언론, SNS 등에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국가·지자체에서도 관광 자원이자 미래자산으로 바라보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제도 기반이 마련되고 관련 사업이 적극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물리적 특례 및 규제 완화를 적용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이 공간적 보전·활용 수단으로 주목되고 있다. 이렇게 역사문화 유산 보전·활용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특정 규제로 지역주민이 어려움을 겪거나 상업화의 가속화로 고유한 지역정체성을 상실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현황진단을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역사문화유산 보전·활용을 위해 수립된 지구단위계획 현황진단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는 한옥 등 건축자산을 포함하는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지구단위계획의 실태파악을 통해 역사문화유산의 보전·활용·관리 측면에서 수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의 쟁점 및 이슈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 도출된 이슈 및 쟁점을 바탕으로 향후 효과적인 역사문화유산 보전·활용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방보람

③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개제도의 쟁점 진단 및 개선방안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공공시설물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개제도를 2016년부터 시행 중이다.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문화시설, 체육시설, 복지시설 중 건립비용이 일정 규모 이상인 시설에 대하여 시설 개요(건립일, 총건립비용 등), 운영관리 현황(관리인력, 연간이용인원, 자산가치변동 등), 운영비용 및 수입(인건비, 유지관리비, 입장료, 임대료 등) 관련 정보를 자치단체 홈페이지(재정공시)와 지방재정365(통합공시)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다.

다만, 연도별 공개되는 자료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확인된다. 개별 공공시설의 데이터가 누락되거나 변경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시계열 자료로 변환 시 데이터 오류나 오기입이 의심되는 공공시설도 다수 확인된다. 전년도에 공개되었던 공공시설이 멸실되지 않았음에도 다음 해에 제외되거나 특정 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이 모두 누락되는 회계연도도 확인된다. 2021년부터 공개대상 기준이 변경되었으나 여전히 변경 전 기준으로 자치단체 홈페이지나 지방재정 365에서 안내되는 것은 현행 공개제도의 신뢰성 결여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처럼 다양한 문제점이 확인됨에도 매년 재정공시나 통합공시를 통해 공개가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 국민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공공시설의 예산 낭비 방지 및 효율적 관리 도모라는 제도 취지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이에 이 연구는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개제도의 쟁점 사항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개데이터의 문제점을 진단한 후 자치단체 운영현황 실태분석을 통해서 데이터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공공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현황 파악이 가능하도록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자치단체 공공시설의 이용률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준래

④ 소록도 문화유산 지정 방안 연구

소록도는 섬 전체가 병원으로서 한센병 환자를 격리수용하기 위해 1916년에 설립된 소록도자혜의원을 모태로 하며, 현재까지 국내 유일한 국립 한센병 전문치료 기관으로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다. 우리는 소록도에서 20세기의 한센병에 대한 오해, 그 오해에서 촉발된 인권 유린과 생존권 투쟁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으며, 개별 건축물이 가지는 건축적 가치 이상의 장소적·역사적 가치를 배울 수 있다.

이러한 소록도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사적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소유 국유지라는 소유권의 문제, 현재도 환자들 수백 명이 거주하고 있고 환자의 치료·요양이 지속되어야 하는 병원 기능상의 문제, 환자 보호를 위한 공개 제한의 필요와 일반인의 문화유산 향유를 위한 외부공개의 필요가 상충하는 문제, 실질적으로 병원이기에 문화유산의 지속적인 관리를 담보하기 어려운 인력·예산 확보의 문제, 한센병 환자의 감소로 인해 향후 병원 기능의 변화를 피해야 하는 기능 전환의 문제 등이 소록도 사적 지정에 걸림돌이 되어 왔다. 특히 문화유산의 지정범위, 관리주체, 명칭을 결정하는 데 있어 관계자 간 의견이 일치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에 이 연구는 소록도의 문화유산 지정과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해 지정범위, 관리주체, 명칭의 대안을 검토하고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

건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 지자체, 국가유산청 등 여러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현재의 쟁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관련 제도 및 사례 조사, 전문가 자문을 통해 대안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행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병원의 운영과 환자의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면서도 소록도가 지니는 역사적 가치가 보존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박일향

⑤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확대를 위한 지역맞춤형 운영모델 연구

지자체 단위에서 건축물의 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도입한 이후, 센터의 정착을 위해 의무적으로 센터를 설치하여야 하는 지자체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당초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는 권장사항이었으나, 2021년에는 광역지자체 17곳과 인구 50만 명 이상의 기초지자체 24곳이 센터 의무설치 지자체에 포함되었다. 2023년 7월부터는 건축허가 면적 또는 노후건축물 비율이 상위 30% 이내에 해당하는 기초지자체에도 센터 설치의무를 부과하면서, 센터 의무설치 지자체는 종전 41곳에서 140곳으로 대폭 증가하게 되었다. 센터의 설치기한을 1년으로 고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설치 지자체 140곳 중 미설치 지자체는 55곳에 이르는 실정이다.

지자체마다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의 예상 업무수요와 현안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필수전문인력을 2명 이상 채용하여 센터를 설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특히 센터 의무설치 지자체로 신규 편입된 지자체의 약 20%가 인구 5만 명 미만의 지자체로, 전문인력 채용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들 지자체의 여건에 적합한 맞춤형 센터 조직구성 모델이 필요하며, 특히 센터 내 필수전문인력의 충원 여부에 따라 센터의 업무내용과 범위

등이 달라지므로 이에 따른 센터 운영모델을 단계별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센터 의무설치 지자체 중 센터 미설치 지자체 55곳을 대상으로 현황을 분석하여 유형화하고, 유형별 대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자체의 현안 등을 심층분석하여 센터의 조직구성 모델을 제안함으로써 지자체 여건에 적합한 유형별·단계별 센터 운영모델과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국적 확대와 운영 내실화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민지

⑥ 보행자길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지난 2022년 8월 수립된 ‘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2022-2026)’에서 ‘안전하고 걷기 좋은 보행 중심 사회 실현’을 위해, ‘교통안전 관련 제도, 인프라, 문화 전반을 보행자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하였다. 기존 제도에서 보행자에게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하는 한편, 보행권의 실질적 보장, 보행약자 및 사각지대 보호, 보행정책 추진기반 강화를 위한 개정 소요를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왔다. 이번 연구는 이러한 제도적 변화의 연장선상에서, ‘보행자길’에 관한 현안을 고찰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안전법」)에 정의된 ‘보행자길’은 일반적인 보도뿐 아니라 길 가장자리구역이나 횡단보도, 통학로, 탐방로, 산책로 등에 이르기까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장소’를 포괄하는 광의적 개념이다. 이를 통해 보도의 유무나 법정 도로 여부, 소관 법령이나 관리주체와 같은 형식적인 기준을 넘어, 다양한 유형의 보행공간을 연속적, 종합적 관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동법에 따른 법정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개선사업 등의 정책수단이 적용되는 실체적 대상과 범위를 규정한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보행자길의 이점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의로 인해 실질적인 관리대상의 범위를 확정하기 어려우며, 일부 보행공간의 누락과 단절, 관리체계의 편향성과 사각지대, 관리대상과 수단 간의 정합성 부족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보행자길의 개념과 관리체계에 대한 현행 규정과 실태를 통합 점검함으로써, 「보행안전법」을 비롯한 유관 법령에서 보행자길 관련 규정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정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보행자길의 세부유형별 특성과 기초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체계를 재정비함으로써,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수단들이 현장에서 더욱 원활히 작동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남궁지희

서울시-건축공간연구원 서울한옥 4.0 붙임 세미나 ‘서울한옥, 또 다른 도전과 실험’ 개최

건축공간연구원과 서울시는 4월 17일(수) 서울역사박물관 1층 아주개홀에서 ‘서울한옥 4.0 붙임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서울한옥, 또 다른 도전과 실험’을 주제로, 관련 전문가들의 다양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표는 이경아 서울대 교수가 ‘2023년 서울시 한옥 전수조사 성과와 의미’를 통해 서울시 한옥의 보전상태 및 안전성능 조사결과를 공유하였다. 두 번째 발표는 강성원 건축사사무소 강희재 대표가 ‘살아있는 공간, 삶은 담는 한옥’을 주제로, 2023 올해의 서울한옥 수상작인 ‘상촌재’를 비롯하여 은평 ‘일루와유’, 영월 ‘더 한옥 헤리티지하우스’ 등 다양한 한옥 사례를 소개하였다. 세 번째 발표는 김대균 착착스튜디오 대표의 ‘한옥의 어휘와 구법 되짚어 보기’로, 한옥 재료를 현대화한 사례, 자연 재료의 특징 등을 설명하였다. 끝으로 정태도 태도건축 대표는 ‘한옥, 나도 새로워지고 싶다’를 통해 전통건축과 현대건축이 결합한 사례를 들어 목조건축의 변화 필요성을 발표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전봉희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유식 서울시 한옥정책과장, 장옥연 온공간연구소 대표, 서승모 사무소효자동 대표, 조정구 구가도시건축사무소 대표, 신치후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서울시의 한옥정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2024 한국도시설계학회 춘계학술대회 AURI 세션 ‘변화하는 우리의 삶과 생활권 계획’ 개최



건축공간연구원은 4월 20일(토) 한양대학교에서 열린 ‘2024 한국도시설계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AURI 세션을 맡아 ‘변화하는 우리의 삶과 생활권계획’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먼저 장민영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동네생활권’을 주제로 동네생활권 활용방안과 관리방안 등을 발표하였다. 두 번째로 강현미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초등학생의 놀이행태와 근린단위 놀이자원망 구축 방안’을 통해 놀이자원망의 개념과 특성, 공공공간에서의 연계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변은주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원은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생활권계획 활용방안’을 주제로 인구감소도시의 여건에 따른 생활권계획 활용방향을 제안하였다.

이어진 토론에는 성은영 건축공간연구원 공간문화본부장이 좌장을 맡고, 양재섭 도시정책연구소 도연재 대표, 홍성조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한영숙 싸이트플래닝 대표가 토론에 참여하여 생활권계획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2024년 제1회 녹색건축 미래포럼 ‘환경×건축:2030년을 향한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방향’ 개최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건축공간연구원, 한국환경정책학회가 주관하는 ‘2024년 제1회 녹색건축 미래포럼’이 4월 23일(화)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2050 탄소중립 로드맵에 따른 건물부문 목표달성을 위하여 녹색건축 분야의 새로운 미래성장동력 및 지속가능한 정책을 발굴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번 포럼은 ‘환경×건축:2030년을 향한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방향’이란 주제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에 발맞춰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탄소중립 관련 분야별 주제발표를 구성하고, 수립방향을 모색하였다.

먼저 변병설 인하대 교수가 ‘지자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제로에너지건축 및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사례를 발표하였다. 이어 박진한 한국환경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국가 및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현황 및 발전방향’을 통해 기후적응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관련 대책 및 대응방향을 발표하였다. 다음으로 민현준 잘그린건축연구소 소장이 ‘탄소중립 시대의 녹색건축’을 주제로 녹색건축물의 탄소감축 효과와 관련 주요기술 및 미래전망을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박종훈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제언’으로 발표를 마무리 지었다.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에는 최정석 한국환경정책학회 명예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발제자 전원이 토론에 참여하여 녹색건축 관련 주요 이슈를 논의하였다.

2024 도시커먼즈 포럼 ‘빈집’ 개최

건축공간연구원은 국토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서울대학교 아시아도시 사회센터, 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춘천문화재단과 함께 6월 13일(목) 춘천 축제극장 몸짓에서 ‘2024 도시커먼즈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 원장의 개회사 및 최연호 춘천문화재단 이사장의 환영사로 시작되었으며, 김계홍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이 기조연설을 진행하였다.

주제발표는 강승진 춘천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장의 ‘사라지는 빈집, 살아지는 동네’, 장민영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의 ‘빈집재생과 로컬커먼즈 : 공주 마을호텔과 남원 청년공간’, 김자경 제주대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학술연구교수의 ‘현대층유론의 입장에서 바라본 유희공간 살리기 프로젝트 : 폐가살리기협동조합 vs 다자요’ 발제가 각각 진행되었다.

종합토론은 강현수 중부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중준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승원 서울대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전임연구원, 윤주선 충남대 교수, 최명식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에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후 행사 2일차인 6월 14일(금)에는 사전신청자를 대상으로 모두의살롱 후평, 춘천 예술촌 등 춘천 공유공간 사례지를 둘러보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2024 AURI-광역시자체 건축자산 진흥 정책 심포지엄 ‘대구광역시 건축자산 진흥 정책 추진 현황과 발전 방향’ 개최



건축공간연구원은 6월 4일(화)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2024 AURI-광역시자체 건축자산 진흥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은 ‘대구광역시 건축자산 진흥 정책의 추진 현황과 발전 방향’을 주제로, 대구광역시에서 추진하는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건축자산 제도의 운영현황 등을 짚어보는 시간으로 마련되었다.

제1부 주제발표에서는 김병환 대구광역시 건축과장의 ‘대구광역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향촌동 건축자산 진흥구역)’, 권종욱 영남대 교수의 ‘제1차 대구광역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 손은신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과 방보람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원의 ‘건축자산 제도 운영 현황 및 진흥구역의 지구단위계획 현황’ 발제가 차례로 진행되었다.

제2부 종합토론은 송석기 근대도시건축연구회장(군산대 교수)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보민 국토교통부 건축경관과 사무관, 신치후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 조재모 경북대 교수가 참여하여 대구광역시 건축자산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2024 건축공간연구원- (사)한국여성건설인협회 공동세미나 ‘탄소중립을 위한 건축·도시분야의 ESG 전략’ 개최



건축공간연구원과 (사)한국여성건설인협회는 4월 26일(금)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탄소중립을 위한 건축·도시 분야의 ESG 전략’을 주제로, 박보경 (사)한국여성건설인협회 회장의 개회사 및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 원장의 환영사로 시작되었다.

첫 번째 발제는 박성남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이 ‘녹색건축물 확산을 위한 건물부문 ESG 연계방안’을 주제로 건물부문 ESG 연계 필요성을 설명하며, 연계방향 및 관련 시범사업 등을 제안하였다. 두 번째 발제는 송두삼 (사)대한설비공학회 차기회장(성균관대 교수)이 ‘건설산업, 왜 ESG인가?’를 통해 2050 탄소중립 등에 대응하기 위한 녹색건축 활성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제로에너지빌딩, 그린리모델링, ESG 경영사례 등 관련 사례와 정책을 제안하였다.

종합토론은 윤정아 (사)한국여성건설인협회 부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박기숙 (사)한국여성건설인협회 ESG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아영 서울시 마포구 성산시영아파트 재건축 예비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발제자 전원이 토론에 참여하였다.

2024 대한민국 국토대전 개최

국토교통부와 건축공간연구원, 국토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2024 대한민국 국토대전'이 열린다. 이번 공모전은 '우리나라 국토와 도시공간의 아름다움과 품격 있게 가꾸어 온 창의적인 사례와 계획을 찾습니다'라는 구호 아래 기관, 개인,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일반 부문, 특별 부문, 경관행정 부문을 공모한다. 4월 3일(수)부터 5월 14일(화)까지 작품을 접수받았으며, 대통령상(1점)을 포함하여 총 18개 작품을 선정하여 오는 7월 18일(목)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일반 부문은 도시와 자연이 어우러지는 문화경관, 활력 있는 가로와 광장, 우수한 기능과 디자인의 주거·상업·업무단지, 문화발전과 공공성 증진에 기여한 건축, 국민생활편의증진 공공디자인, 국토디자인 향상에 기여한 사회기반시설을 포함한다. 특별 부문의 경우 빈 건축물 등을 활용한 창의공간을, 경관행정 부문의 경우 창의적·효율적 경관행정을 대상으로 한다.

이외에도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대전 홈페이지(www.lcd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축공간연구원-전라남도 영암군 MOU 체결

건축공간연구원과 전라남도 영암군은 영암군의 한옥문화 발전과 공공건축물 품격 향상을 위하여 5월 23일(목) 영암군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옥 등 지역 고유 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시브랜딩 전략 수립, 공공건축물 건립에 따른 품격 향상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에 큰 의미를 가진다.

앞으로 두 기관은 ▲대한민국 한옥 문화 비엔날레 개최에 따른 한옥 관련 문화자원 개발 ▲영암군 한옥 문화자원 활용 도시브랜딩을 위한 정책 개발·지원 ▲공공건축물 건립에 따른 공간구성, 디자인 관련 정보 교류 및 제언 ▲한옥 등 건축자산 등록·보전 및 관리를 위한 자문 및 정보 제공 ▲건축자산의 유휴공간 재생과 활용을 위한 연구·정책 교류를 위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건축공간연구원 이영범 원장은 “우리의 전통과 역사를 담고 있는 한옥을 널리 알리는 데 함께 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옥 등 건축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현대적인 도시브랜드 전략을 결합하여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건축공간연구원
2024년
수행 연구과제

기본과제		
탄소중립사회 달성을 위한 그린인프라 정보체계 개발방향 연구 허한걸	건축물 안전 및 사용성 향상을 위한 건축물 유지관리산업 진흥 방안 현대환	
유산영향평가에 따른 세계유산지구의 공간관리 정책방안 연구 손은신	노후계획도시의 탄소중립도시로 전환을 위한 건축물 생애주기별 탄소배출저감 방안 및 가이드라인 개발·활용 연구 김성준	
현대 정원도시의 다원적 기능 구현을 위한 계획방향 연구 김용국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모델 개선방안 연구 허재석	
3기 신도시 도시건축통합계획 모니터링을 통한 도시설계 제도 개선 연구 이혜원	지역맞출형 건축정책을 위한 건축물 연령 지표 개발 송유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의 운영실태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배선헤	2023년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김상호	
공간특성을 고려한 지역상권의 공간관리 방안 연구 정인아	대규모 언어모델을 활용한 건축법령 해석 지원 시스템 고도화 방안 연구 조상규	
임대형기숙사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기준 개선 연구 유제연	건축안전 모니터링 실효성 강화를 위한 건축법령 개정방안 이주경	
인구감소도시의 콤팩트-네트워크 실현을 위한 생활권계획 활용방안 변은주	'지역 Space-MBT'를 활용한 인구감소지역 특성 진단 연구 박성남	
건축물 설계과정의 안전성 검토·평가제도 현황 진단 및 합리화 방안 연구 이화영	영구임대주택 거주 고령자의 지역기반 생활지원 서비스 접근성 제고 방안 윤진희	
이재민 생활안정과 지역사회 회복력 제고를 위한 임시주거시설 지원 방안 연구 박유나		

수시과제

건축서비스산업 역량 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오민정	소록도 문화유산 지정 방안 연구 박일향
한옥 등 건축자산 밀집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실태 분석 방보람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확대를 위한 지역맞출형 운영모델 연구 김민지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개제도의 쟁점 진단 및 개선방안 김준래	보행자길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남궁지희

수탁과제

국가 탄소중립 도시 지정 대응전략 및 지역별 조성방안 마련 연구용역 이은석	지역 스마트도시계획 웹포데스크 운영 지원 김영현	다중 분산발전 기반의 육상온실형 스마트 그린빌딩 융복합 시스템 개발 및 실증(4차년도) 이은석
제2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관련 연구 김은희	부여 고도보존육성 시행계획 수립 심경미	초고령사회 보행환경 평가 및 개선시스템 개발(3차년도) 오성훈
보행안전지수 시범운영 및 활용기반 구축 용역 남궁지희	함안 말아산고분군 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 수립 연구 심경미	'24년도 어촌활력증진 지원 시범사업 모니터링 서수정
국가상징공간 조성 기본구상안 마련을 위한 기획연구 오성훈	건축공사 감리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김은희	스마트+빌딩 조성 지원 및 육성을 위한 법령 제정 등에 관한 연구 남성우
2023년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등 한옥홍보 기획 및 운영관리 신치후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 연구 이은석	2024년 공공건축 사전검토 등 공공건축 지원업무 위탁 엄윤진
스마트플러스빌딩 로드맵 수립 및 제도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 조상규	스마트+빌딩 핵심기술 개발 기획 남성우	2024년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업무 위탁 (건축물관리제도 모니터링 및 정책지원) 조영진
2023년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 운영관리 위탁용역 이여경	노후 공동주택 안전진단 제도 합리화 방안 성은영	2024년 공공건축물 리뉴얼 지원 및 관리 김용국
이면도로 보행환경 실태조사 연구 오성훈	2024년 지역별 맞춤형 범죄예방 컨설팅 수행 용역 김은희	인천광역시 공공건축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김준래
2023년 공공건축물 리뉴얼 지원 및 관리 남성우	초광역 역사문화권 전략계획 수립 연구 (고구려·예맥 역사문화권) 심경미	스마트도시 연계성 향상을 위한 도시공간계획·제도 개선 연구 권오규
공원전용 보행체계 구축방안 연구용역 오성훈	역사문화권 정비 정책 및 제도 개선 연구 심경미	안서동 대학로 청년안심 탄소중립 보행환경 개선 연구용역 이은석
공공건축물 관리 및 운영 기술개발 기획 김상호	5차년도 역사문화자원 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신치후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 연구 이상민	

건축공간연구원 연구보고서 안내

건축공간연구원에서는 연구 성과의 공유 및 확산을 위해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www.auri.re.kr)에서 보고서를 검색하실 수 있으며, 발간물 구입에 관해서는 자료실로 문의 바랍니다.

자료실 044,417,9640 information@auri.re.kr

2023년 연구보고서

기본연구보고서 2023-1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2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3-2
생애주기를 고려한 공작를 관리체계 마련 연구
2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3-3
재난 대응을 위한 임시주거시설 관리체계 개선방안
2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3-4
제조 조립을 위한 설계(DfMA)기반 건축 활성화 방안 연구
2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3-5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집수리 정책 개선 방안
2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3-6
역사문화권 내 매장문화재 및 주변지역의 보전·활용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2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3-7
중·소규모 유휴공간을 활용한 민간주도·공공지원형 임대주택 사업 활성화 방안
2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3-8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의 가치 보존을 위한 수리체계 개선 방안
2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3-9
1기 신도시 재건축 단지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연구
2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3-10
맞출형 공간전략 도출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진단단계 연구
2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3-11
가설건축물 화재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2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3-12
디지털 옥외광고를 관리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2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3-13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수립지침 마련 연구: 농촌특화지구 입지적정성 검토방안을 중심으로
2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3-14
전기차 확산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충전설비 설치기준 개선 연구
2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3-15
영구임대주택의 지역사회 고밀 및 갈등 완화를 위한 공간환경 개선 전략
2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3-16
기후위기 대응력 강화를 위한 탄소중립도시 종합계획 수립 방안 연구
2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3-17
공유유산 개념을 적용한 국외사적지 활용·관리 정책 연구
2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3-18
위드 코로나 시기 생활권 공공시설의 대응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2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3-19
데이터 기반 정책을 위한 건축물 생산량 지수 개발 연구
25,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23-1
물류창고 화재안전을 위한 건축기준 개선방안
12,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23-2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개선방향 연구
12,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23-3
국가기본도 구축 체계 합리화 방안 연구
12,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23-4
생활인프라 복합화시설의 운영실태 진단: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12,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23-5
지방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복수 주거거점의 현황과 이슈
12,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23-6
대규모 언어모델(LLM)을 활용한 건축민원 대응 효율화 방안 연구
12,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3-1
녹색건축물 확산을 위한 건물 부문 ESG 연계방안
10,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3-2
이용자를 고려한 공공건축 조성방안 연구: 리모델링 사업을 중심으로
10,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3-3
보행환경개선사업의 도시정책 연계방안 연구
10,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3-4
결합건축 제도의 적용 가능성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10,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3-5
고령자 돌봄서비스 수요자를 고려한 주거지원 방향과 과제
10,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3-6
외국인 밀집지역의 근린환경 실태 분석: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관점에서
10,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3-7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고도화 및 통계 활용방안 연구
10,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3-8
공간기반 혁신기술 융복합 건축물 계획 기준 연구
10,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3-9
다양한 수요를 고려한 주거생활공간의 진단 과제
10,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3-10
빅데이터 기반 건축물 화재 및 홍수 리스크 분석 모델 개발 연구
10,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3-11
개발사업 경관심의 운영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10,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3-12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사회혁신실험의 실행방안
10,000원

2022년 연구보고서

기본연구보고서 2022-1
신산업 관련 건축 법제 개선방안: 데이터센터와 지식산업센터를 중심으로
2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2-2
농촌 마을 공간관리를 위한 토지이용의 통합적 관리방안 연구
2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2-3
설계공모 이후 건축 생산과정 모니터링을 통한 공공건축 제도 개선 연구
2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2-4
개인형 공유모빌리티 이용활성화를 위한 건축·도시공간 대응방안 연구
2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2-5
탄소중립 2050 실현을 위한 생활권 단위 공간계획 모형 연구
2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2-6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지속가능한 운영방안
2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2-7
폭염대응을 위한 도시 가로녹지계획 연구
2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2-8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전·활용을 위한 의사결정체계 연구
2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2-9
1인가구 증가에 대응한 소형 공동주거시설의 건축기준 정비 방안
2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2-10
아동친화 주거공간 조성·운영을 위한 사업모델 및 지원방안 연구
-소규모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2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2-11
아동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형 놀이자원망 구축 방안 연구
2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2-12
건축정책 실행력 제고를 위한 건축기본법 개정 연구
2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2-13
건축물 공간정보 빅데이터 시범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2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2-14
건축행정 통계 개선 및 공간정보 융합 방안 연구
2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2-15
차매친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개선 방향 연구
2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2-16
동네생활권 개념 도입 및 정책적 활용방안 연구
2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2-17
역사문화공간 보전·활용 사업의 효과 분석방법 연구
25,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22-1
현충시설의 가치향상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방향 연구
12,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22-2
다양한 거주가치 구현을 위한 사회주택사업 추진체계 개선방안 연구
12,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22-3
거주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주거문화 정책과제
12,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22-4
관광안내소의 효과적 설치·운영을 위한 입지 및 공간 기준 연구
12,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22-5
공간수요 다양화에 대응한 가설건축물 관리방안 연구
12,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22-6
건축행정 전산자료 활용 제도 정비 방안 연구
12,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22-7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 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12,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22-8
스마트건축 인증 도입 및 운영 방향 연구
12,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2-1
보도의 계획 및 설계기준 개선방안 연구
10,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2-2
건축분야 사후입법영향분석 기준 및 체계 마련 연구
10,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2-3
스마트도시계획 모니터링 및 성과 평가를 위한 지표 연구
10,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2-4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10,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2-5
빅데이터 기반 건축물 화재 예측 모델 개발 연구
10,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2-6
가상환경을 활용한 범죄예방환경설계 요소 도출 연구
10,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2-7
지역사회 고령친화 생활마을 조성 모델 및 정책개선 방안 연구
10,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2-8
지역자원 활용 기반의 도시재생회사 사업모델 연구
10,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2-9
건축자산 진흥구역 활성화 방안 연구
10,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2-10
이용자 관점에서 본 공공건축 연구: 행정복지센터
10,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2-11
지자체 경관사업 실행력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연구
10,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2-12
한옥 공공건축물 지원사업 현황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10,000원

2021년 연구보고서

기본연구보고서 2021-1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공간자원 활용체계 구축방안: 생활치료센터를 중심으로
20,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1-2
스마트건축 산업화 모델 및 제도 기반 확충에 관한 연구
33,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1-3
건축규제 특례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협의조정제도 도입방안 연구
27,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1-4
쇠퇴지역 공간관리를 위한 빈집 정책 개선방안
23,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1-5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생활권 공원녹지 개선 방안
30,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1-6
공공건축물 건축기획업무 현황 진단 및 활성화 방안 연구
16,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1-7
보편적 서비스 개념을 고려한 스마트도시계획 및 사업 개편방안 연구
26,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1-8
n분 도시 실현을 위한 도시전략 연구
2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1-9
포스트코로나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언택트 어머니즘 전략 연구
29,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1-10
인구감소시대 노후공동주택 빈집의 실태진단 및 관리방안 연구
26,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1-11
시민주도형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 연구
22,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1-12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31,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1-13
지방이주 청년의 정주지속을 위한 청년활동공간 조성방안 연구
32,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1-14
로컬리즘 기반의 중소도시 재생정책 방안
28,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1-15
거주가치 중심의 민간주도 주택공급방식 활성화 방안 연구
28,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21-1
건축물 활용도 제고를 위한 복수 용도 인정 기준 개선 방안 연구
15,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21-2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설계 도입 및 제도화 연구
14,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21-3
고령친화 커뮤니티 확산을 위한 고령친화지표 개발 및 평가 연구
15,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21-4
그린스마트미래학교를 위한 건축기획 개선방안 연구
12,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21-5
기부채납 건축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 연구
11,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21-6
농촌마을의 공동화 현황 및 공간관리 수요 분석
15,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1-1
지자체 경관계획 수립 현황과 과제 - 특·광역시 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과 운영체계를 중심으로
17,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1-2
스마트도시 기술 및 서비스 특성을 고려한 공간계획 방향 연구
17,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1-3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기후 탄력적 발전 경로(CRDPs) 연구
17,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1-4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건축도시정책의 개선방향 연구
17,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1-5
범죄주려움 저감을 위한 도로조명 조도 기준 연구
14,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1-6
근린재생 활성화를 위한 거점시설 운영방안
23,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1-7
건축자산 진흥 제도 개선방안 연구
15,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1-8
보행자길 조성·관리를 위한 보행행태 및 인식 분석: 보도를 중심으로
22,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1-9
이용자 관점에서 본 공공건축 연구: 국민체육센터
27,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1-10
민간시장 건축서비스산업 계약제도 개선 방안 연구
15,000원

건축공간연구원 신간 안내

건축공간연구원에서는 건축·도시 관련 분야의 다양한 주제에 대해 단행본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단행본 소개 및 자세한 사항은 연구원 홈페이지(www.auri.re.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비매품이 아닌 발간물은 서점을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출판·홍보팀 044.417.9640 information@auri.re.kr



2022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연차보고서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비매품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이여경, 이화영, 홍예은
비매품



건축서비스산업
동향과 이슈 2023
건축서비스산업지원센터
비매품



건축법제동향 2023
건축규제혁신센터
비매품



보행자우선도로 매뉴얼 2022
오성훈, 남궁지희,
김영지, 변혜영
비매품



한눈에 보는 건축민원
빅데이터 2021
이여경, 이주경,
김민지, 홍예은
비매품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 안내서
이규철, 박채린
비매품



제주 한옥, 박초씨가 이야기
국가한옥센터, 양건, 김테일,
고기봉, 이창규, 강정운
비매품



세계건축법제동향 2022
이여경, 김준래, 오세원
비매품



어촌지역의 법치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
손동필, 임보영, 허재석
비매품



건축서비스산업 동향과
이슈 2022
김상호, 김은희, 조시은, 오민정
비매품



2021년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결과
건축서비스산업지원센터
비매품



공공건축 제안공모
운영가이드 2022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비매품



공공건축 설계발주
가이드 2022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비매품



공공건축 가이드 04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가이드 2022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비매품